
2019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2020. 6.

관계부처 합동

교	육	부	법	무	부	농림축산식품부						
보	건	복	지	부	환	경	부	해	양	수	산	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	촌	진	흥	청	관	세	청				

목 차

I . 2019년 추진실적 총평	1
II . 2019년 과제별 추진실적 요약	3
III . 분야별 추진 실적	11

I . 2019년 추진실적 총평

①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제4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18~'20)에 따라, '19년에는 5대 분야 140개 과제를 수립하여 시행

- ①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 관리 : 18개 ②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 38개
- ③ 과학적 유통관리·정보제공 : 34개 ④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 32개
- ⑤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18개

* 식약처 71, 농식품부 36, 해수부 12, 관세청 6, 농진청 6, 교육부 5, 복지부 2, 법무부 1, 환경부 1

- (추진결과) 135개 과제 이행완료, 5개 과제 미흡 또는 지연*

*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성과목표 달성율이 90%이하인 경우

- 미흡 또는 지연과제는 △ 오징어의 카드뮴 규격 강화 추진 지연, △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동물용 항생제 확대 미흡,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지연, △ 공판장 시설현대화사업 신규 추진 미흡,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지연

② 과제별 미흡·지연 사유 및 대책

세부과제	사유 및 대책
1-1-②-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규격 재평가	○ (추진결과) 오징어의 카드뮴 규격 강화 추진 지연 * (목표) 고시 개정 / (실적)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 ○ (사유) 규격 강화안 재심의('19.6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국조실 권고에 따른 재행정예고(9월) 등으로 일정 지연 * 재심의사유 : '17.8월 기준 강화(안) 행정예고 당시, 추가 모니터링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 결정('17.11월 식품위생심의) → '18년 추가 오염도조사 실시 * 국조실 권고내용 : 행정예고('17.8) 후 장시간이 경과하여, 현시점의 규제영향 재분석 및 의견수렴 필요 ○ (향후대책) 조속한 시일 내 고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제심사 등 적극 대응

세부과제	사유 및 대책
1-2-③-②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확대	○ (추진결과)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동물용 항생제 확대 미흡 * (목표) 61종 이상 / (실적) 32종 ○ (사유) ASF 발생에 따른 방역대응으로 인해 일정 지연 ○ (향후대책) 목표시한을 '20년까지 연장하고, 확대목표 항생제 (종)수를 당초 61종에서 50종 이상으로 조정*하여 추진 * WHO/OIE 지정 중요 항생제가 54종('19년 기준)으로 파악
2-3-①-② 인증체계 개선	○ (추진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지연 * (목표) 축산법 개정 / (실적) 국회 제출('19.8.2) ○ (사유) 무항생제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법사위 계류 중 ○ (향후대책)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 축산법 개정 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3-1-③-① 농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	○ (추진결과) 공판장 시설현대화사업 신규추진 미흡 ○ (사유)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유사사업으로 시행 중 ○ (향후대책) 도매시장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농협에 자체 공판장 시설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권고
4-1-②-⑤ (청소년)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 등 강화	○ (추진결과)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강화 지연 * (목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 (실적) 추진 중 ○ (사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유아 3법'이 발의('18.12)되어 '19년에 추가적으로 유치원 실태 파악 및 영양관리기준 개발 등을 추진 ○ (향후대책) '20년 내 시행규칙 개정 완료

Ⅱ. 2019년 과제별 추진실적 요약

① 과제 현황

구 분	과제	세부과제
총 괄	51	140
전략 1. [기준 관리]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10	18
1-1.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3	5
1-2.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3	8
1-3. 기술발전·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	4	5
♣ 식약처 11, 해수부 3, 농식품부 2, 농진청 2		
전략 2.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12	38
2-1.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6	22
2-2. 가공식품 제조 관리	3	8
2-3. 인증제도 개선	3	8
♣ 농식품부 20, 식약처 9, 해수부 5, 농진청 3, 환경부 1		
전략 3.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관리·정보제공	13	34
3-1. 유통 관리체계 개선	5	13
3-2.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	4	14
3-3.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4	7
♣ 식약처 22, 관세청 5, 농식품부 4, 해수부 2, 농진청 1		
전략 4.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9	32
4-1.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	2	13
4-2.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활동	4	13
4-3. 생활 속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3	6
♣ 식약처 18, 농식품부 6, 교육부 5, 복지부 2, 해수부 1		
전략 5. [관리 기반]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	18
5-1.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2	5
5-2.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2	5
5-3.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3	8
♣ 식약처 11, 농식품부 4, 해수부 1, 법무부 1, 관세청 1		

② 과제별 추진결과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전략 1. [기준 관리]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1-1.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1-1-①	식품 위해요소 기준·규격 재평가		
①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이행완료
②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이행완료
③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 및 개선	식약처	이행완료
1-1-②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규격 재평가		
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지연
1-1-③	인체 위해물질에 대한 통합위해성 평가		
①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 평가	식약처	이행완료
1-2.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1-2-①	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정착	식약처	이행완료
②	소면적 재배 농산물 농약사용기준 설정 및 등록	농진청	이행완료
1-2-②	축·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①	농장단위 전수검사 및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도입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수산물 모니터링 확대	해수부	이행완료
1-2-③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①	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	농진청	이행완료
②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확대	농식품부	미흡
③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해수부	이행완료
1-3. 기술발전·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			
1-3-①	유전자변형기술 응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 심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1-3-②	최근 도입 신 기술 응용 식품 안전관리 토대 마련		
①	유전자 가위기술 및 나노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1-3-③	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대응 및 모델 개발		
①	환경오염·기후변화에 따른 병원체 등 대응체계 마련	식약처	이행완료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1-3-④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		
①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	해수부	이행완료
10개 과제	18개 세부과제		
전략 2.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2-1.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2-1-①	(농산물) 농지·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		
①	농경지 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농식품부 농진청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농업용수 모니터링 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③	농자재 위해요소 실태조사	농식품부	이행완료
2-1-②	(축산물)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		
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농식품부 농진청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동물복지 직불금 제도 도입	농식품부	이행완료
③	가금류 입식 사전신고제 법제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④	가금류 사육지역 재편	농식품부	이행완료
2-1-③	(축산물) 현장 맞춤형 방제·도축·교육 강화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닭 진드기 방제기술 연구 지원	농식품부	이행완료
③	도축장 오염 방지 강화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2-1-④	(수산물)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		
①	수산동식물 생산해역 환경 개선	해수부	이행완료
②	패류 생산해역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이행완료
2-1-⑤	(수산물)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①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해수부	이행완료
②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해수부	이행완료
2-1-⑥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①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농식품부	이행완료
③	축산물 HACCP 확대	농식품부	이행완료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④ HACCP 수산물 적용 확대	해수부	이행완료
2-2. 가공식품 제조 관리			
2-2-①	일반식품		
	① HACCP 적용식품 확대 및 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2-2-②	건강기능식품		
	① 제조기준 강화(GMP 적용 의무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기능성 검증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③ 이상사례 체계적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2-2-③	주류(술)		
	① 주류업체 등급별 차등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② 주류업체 식품용수 안전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③ 소규모업체 안전·품질 관리 지원	식약처	이행완료
2-3. 인증제도 개선			
2-3-①	친환경인증 기준 강화		
	① 친환경인증 안전성 심사기준 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인증체계 개선	농식품부	지연
2-3-②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		
	① 친환경 부실인증 가능성 차단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친환경 부실 인증기관 퇴출제도 도입	농식품부	이행완료
2-3-③	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① 중대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처벌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친환경인증농가 교육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③ 축산농장 HACCP 관리 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④ HACCP 양식장 안전성 검사 및 관리 강화	해수부	이행완료
12개 과제	38개 세부과제		

전략 3.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관리·정보제공

3-1. 유통 관리체계 개선

3-1-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식약처	이행완료
	② 이력추적 대상 품목 확대	식약처	이행완료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③ 계란·닭·오리의 이력추적제 도입	농식품부	이행완료
	④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해수부	이행완료
3-1-②	위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 개선		
	①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	식약처	이행완료
3-1-③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		
	① 농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	농식품부	미흡
	② 축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	농식품부	이행완료
3-1-④	잔류물질 검사 강화		
	① 농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③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3-1-⑤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		
	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기반 유통 검사	식약처	이행완료
	②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근절	식약처	이행완료
3-2.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			
3-2-①	수입 전(前) 관리		
	①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식약처	이행완료
	③ 수입위생평가 확대 및 전문화	식약처	이행완료
3-2-②	통관 단계 관리		
	① 통관검사 및 감시 체계화	식약처 관세청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보세구역 등 재고조사 강화	관세청	이행완료
	③ 검사명령제 대상 확대	식약처	이행완료
3-2-③	수입 후(後) 관리		
	① 거래내역 신고 강화	관세청	이행완료
	②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③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3-2-④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		
	① 보따리상 등 휴대반입식품 관리 강화	식약처 관세청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해외직구제품 등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③	자가사용 위장 수입식품	관세청	이행완료
3-3.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3-3-①	식품 표시·광고 체계 개선			
	①	영업자 실증(實證) 및 자율심의 제도 도입	식약처	이행완료
	②	식품 표시 전달력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식약처	이행완료
3-3-②	식품안전정보의 민간 확산			
	①	민간 플랫폼 등 활용 식품안전정보 전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3-3-③	식품의 영양·위생 정보제공 확대			
	①	알레르기·열량 등 국민 관심분야 정보제공 확충	식약처	이행완료
	②	영양표시 의무화	식약처	이행완료
	③	식품영양정보 서비스 민간제공 확대	농진청	이행완료
3-3-④	농축수산물의 생산·제조 정보제공 확대			
	①	수산물 생산·제조 정보제공 확대	해수부	이행완료
13개 과제	34개 세부과제			

전략 4.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4-1.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

4-1-①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①	주요 저감대상 집중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②	범국민 참여 행사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식약처	이행완료
	③	(학교) 나트륨·당류 저감화 실천	교육부	이행완료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식약처	이행완료
	②	(어린이)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이행완료
	③	(어린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부	이행완료
	④	(청소년) 학교 내 고카페인 판매금지 등 영양·안전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⑤	(청소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등 강화	교육부	지연
	⑥	(성인) 개인별 영양섭취관리 지원	식약처	이행완료
	⑦	(고령자) 복지시설 급식 위생·영양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⑧	(취약계층)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농식품부	이행완료
	⑨	(취약계층) 우유급식지원	농식품부	이행완료
	⑩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부	이행완료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4-2.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활동			
4-2-①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		
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식약처	이행완료
②	배달음식 및 가정간편식 점검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4-2-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①	지하수·생산해역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연안 생산해역 및 패류 양식장 감시체계 운영	해수부	이행완료
③	범부처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	식약처	이행완료
④	현장 신속대응 모의훈련 확대	식약처	이행완료
⑤	식중독 발생·예방 정보 제공	식약처	이행완료
4-2-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①	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점검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③	학교급식소 관리책임 강화	교육부	이행완료
④	학교급식소 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	교육부	이행완료
4-2-④	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		
①	위생 사각지대 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식중독균 추적관리 기반 마련	식약처	이행완료
4-3. 생활 속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4-3-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		
①	(학생) 식품안전·영양교육 확대	교육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고령자)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식약처	이행완료
4-3-②	지역 먹거리 통합관리		
①	지역단위 푸드플랜 확산	농식품부	이행완료
4-3-③	건강한 농산물 소비촉진		
①	GAP 농산물 소비 촉진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농식품부	이행완료
9개 과제	32개 세부과제		

전략 5. [관리 기반]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5-1.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5-1-①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①	부처간-지자체간 협업 활성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정보 공유 확대	식약처	이행완료
③	지자체 역량 강화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5-1-②	법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①	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	식약처	이행완료
5-2.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5-2-①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		
①	전문가·소비자 등 참여 확대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국민청원 창구 등 운영	식약처	이행완료
5-2-②	국제 교류·협력 강화		
①	국제식품 기준·규격 설정 대응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국제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5-3.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5-3-①	감시·감독 역량 강화		
①	수사역량 강화	법무부	이행완료
②	감시기법의 과학화	식약처	이행완료
5-3-②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①	전통시장 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③	취약계층 보호	식약처	이행완료
④	수입식품 관리 강화	관세청	이행완료
5-3-③	농축수산물 생산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①	축산농가 살충제 불법사용 처분기준 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양식수산물 유해물질 불법사용 처분 강화	해수부	이행완료
7개 과제	18개 세부과제		
51개 과제	총 140개 세부과제 (식약처 71, 농식품부 36, 해수부 12, 관세청 6, 농진청 6, 교육부 5, 복지부 2, 법무부 1, 환경부 1)		

Ⅲ. 분야별 추진 실적

1 [기준 관리]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1-1-①	식품 위해요소 기준·규격 재평가
①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김용무 연구관 T.043-719-2422
 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김진숙 연구관 T.043-719-3853
 첨가물기준과 선남규 연구관 T.043-719-2502)

1. 과제내용

- ☐ 식습관 변화, 환경오염 등에 따른 오염물질·잔류물질 등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준·규격 개정 추진
- * 오염물질(3-MCPD, 멜라민), 잔류물질(농약), 미생물(저위해성 식중독균), 식품원료(식약공용원료 등), 식품첨가물(감미료 등)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 3-MCPD, 멜라민 기준·규격 재평가(1~12월) - 인체 총 노출량 평가 및 저감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잔류물질(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1~9월)	○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 - 3-MCPD, 멜라민 노출량 평가(6월), 기준·규격 재평가(1~9월), 결과심의(12월) - 간장의 섭취로 인한 3-MCPD 노출 저감을 위해 기준 강화(안) 마련 * 간장 3-MCPD 기준강화(안) 행정예고(7월) ○ 농약 39종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완료(2~9월)

추진계획	추진실적
- 재평가 결과 부처협의(10월)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12월) ○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 한식간장 등 10개 식품유형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위해성 평가 결과 검토(6월) - 전문가 자문회의(8월) ○ 식품원료 기준·규격 재평가 - 식품원료 500품목 재평가 수행(12월)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 품목별 사용현황 조사, 유통식품의 식품첨가물 함량 모니터링 및 섭취량 평가(3~11월) - 품목별 기준·규격 유지 및 개정 검토(11월)	- 재평가 결과 농촌진흥청 협의(2~8월)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39건 / 4, 7, 9월) ○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 -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위해성평가 수행, 결과를 반영한 규격 재평가(6월) *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실고추, 액젓, 조미액젓 고춧가루, 천연향신료, 향신료가공품 ** 한식간장 등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위해성 평가(식약처 연구사업, 2019.5) - 전문가 자문회의(8월),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9월), 고시(12월) * 식약처 고시 제 2019-150호('19.12.30) ○ 식품원료 기준·규격 재평가 - 개똥쭉 등 500품목 재평가 완료(12월) - '18년도 이전 재평가 결과 반영 벨벳빈 식품원료 목록 삭제(7월), 왕백산차 및 좁은백산차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8월, 행정예고)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34품목) - 사용현황 조사, 모니터링(952건) 및 섭취량 평가 완료(11월) - 섭취량 평가결과, 현행 사용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11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비의도적 유해물질 ¹⁾ (%)	42	42
○ 잔류물질(농약) ²⁾ (건)	39	39
○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 설정 검토 ³⁾ (건)	10	11
○ 식품원료 ⁴⁾ (건)	500	500
○ 식품첨가물기준·규격 재평가 품목수 ⁵⁾ (건)	34	34

¹⁾ (기준개선 유해물질 수/재평가 대상 유해물질 수)×100

²⁾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건수(행정예고)

³⁾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 재평가 건수(재평가 결과보고서)

⁴⁾ 식품원료 기준·규격 재평가 건수(재평가 결과보고서)

⁵⁾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건수(재평가 결과보고서)

3. 성과 및 한계

□ 식습관·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유해오염물질 등 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기준 정비 및 노출수준 저감

- 국민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유해오염물질인 3-MCPD 및 멜라민을 재평가하여 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추진
- 국내등록 농약의 사용방법, 잔류량, 노출량 등을 재평가하여 델타 메트린 등 3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식품의 제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오염도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 재평가를 통한 미생물 기준·규격 설정
- 식약 공용원료 및 제한적 사용원료 500종에 대한 재평가를 기반으로 합리적 기준·규격 설정 추진
- 품목별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재평가를 통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4. 향후 추진계획

□ 기후변화, 환경오염, 섭취패턴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유해 오염물질·잔류물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지속 추진(20)

1-1-①	식품 위해요소 기준·규격 재평가
②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김동규 연구관, T.043-719-2504)

1. 과제내용

- ☐ 기구·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기준·규격 적정성 재평가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기구·용기·포장 유래 오염물질 등 모니터링(2~10월) 및 안전성 평가(11월) -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12월)	- 오염물질 등(총용출량 등 6항목) 모니터링 조사(10월, 기준·규격에 적합) 및 안전성 평가(11월, 이행량 안전한 수준) -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12월) - 안전성 평가 및 국내·외 기준·규격 등 비교 결과, 현행 기준·규격 유지 타당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기구·용기·포장 이행물질(항목)	6	6

* 기구용기포장 이행물질에 대한 재평가 결과 보고서

3. 성과 및 한계

- ☐ 기구·용기·포장 유래 오염물질 등의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기준·규격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4. 향후 추진계획

- ☐ 기구·용기·포장의 재질별* 기준·규격을 중심으로 재평가 추진('20)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9개 재질

1-1-①	식품 위해요소 기준·규격 재평가
③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 및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권진욱 연구관 T.043-719-4252
미생물과 김미경·황진희 연구관 T.043-719-4304·4303
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 T.043-719-4353
영양기능연구팀 허수정 연구관 T.043-719-4403)

1. 과제내용

-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법 마련 및 개선
 - 유해오염물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 미생물 유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미생물 시험법 개선
 -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개발
 - 식품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선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기준규격 미설정 자연독소, POPs 물질, 유해금속 등 시험법 마련 (12월)	○ 곰팡이 독소(스테리그마토시스틴), 자연 독소(트로판 알칼로이드 15종), 방사능(플루토늄·스트론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PBBs 6종) 등 24종 시험법 개정(안) 마련(12월)
○ 공인 미생물 시험법 개선(12월)	○ 비브리오 콜레라 등 미생물시험법 (안) 6건 마련(12월) - 비브리오 콜레라 등 시험법 4건 개발 및 장염비브리오 등 시험법 2건 편의성 개선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을 위한 시험법 개선(11월)	○ 식품 중 바이러스 전처리 시험법 등 4건 마련(11월) - 베리류 등 바이러스 전처리 시험법 2건 개발 및 리스테리아 등 시험법 2건 검출한계 개선
○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중 이행물질 분석법 개발(12월)	○ 산도조절제 5종 시험법 개발(11월) - 제이인산칼슘, 제삼인산칼슘, 이초산 나트륨, 글루콘산칼슘, 글루콘산철 시험법 개발 ○ 기구·용기·포장 중 비스페놀 F 및 방향족아민 분석법 확립(12월) - 비스페놀 F, 방향족아민 개발
○ 식품 등의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식품공전 시험법 개선(12월)	○ 식품 중 올리고당, 지방산, 당 등 총 7종 시험법 개선(12월) ○ 크릴오일 중 불소 시험법 개발(11월)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B군 등 6종 시험법 개선 및 질량 분석법 개선(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시험법 개발 건수	35	55

3. 성과 및 한계

- ☐ 유해오염물질,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과학적 시험법 마련으로 위해요소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12월)
- 곰팡이독소, 방사능, 유기오염물질 등 시험법 24종 개정(안) 마련
 - 공인 미생물 시험법,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등 10건 개선

-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중 이행물질 분석법 등 7건 개발
- 식품 등의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식품공전 등 개선 시험법 14건 마련
 - * 공인시험법 미등재 사유 : 위해정보에 신속대응을 위해 다양한 최신 검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에 공문을 통해 지시하거나,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등에 등재 조치함

4. 향후 추진계획

- ☐ 선제적·예방적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 오염물질,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시험법 지속 개발(연중)
 - * (유해오염물질) HCBd 등 6종, (미생물) 리스테리아 등 6종, (첨가물) 착색제·보존료 등 4종, (기구용기포장) 항균제 1종, (미량영양성분) 판토텐산 등 2종

1-1-2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규격 재평가
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T.043-719-3853)

1. 과제내용

☐ 수산물의 중금속 노출 저감화를 위한 중금속 규격 강화

- 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른 중금속 인체 노출량 등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노출 기여가 높은 중금속 규격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고시 - 기준 강화(안) 관련 부처 협의(4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5월) - 기준 강화(안) 고시(8월)	○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추진 - 기준 강화(안) 부처 재협의(4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재심의(6월) * '17.8월 기준 강화(안) 행정예고 당시, 추가 모니터링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 결정('17.11월 식품위생심의) - 국조실 권고*에 따른 재행정예고(9월) * 행정예고('17.8월) 후 장시간이 경과하여, 현시점의 규제영향 재분석 및 의견수렴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중금속 기준 개정 (건)	1	0

* 수산물 품목별 중금속 기준강화(신설) 건수(고시)

3. 성과 및 한계

☐ 수산물의 중금속 규격 강화 추진

- 미역귀를 포함한 미역의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 개정 고시(1월)
- 오징어의 중금속(카드뮴) 기준 강화 추진

* 부처협의(4.24), 심의(6.19), 재행정예고(9.27), 고시('20년 예정)

4. 향후 추진계획

- #### ☐ 기후·환경오염, 섭취량 변화에 따른 중금속 노출수준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오염도 조사 추진('20)

1-1-③	인체 위해물질에 대한 통합위해성 평가
①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 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 T.043-719-4504)

1. 과제내용

☐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평가 체계 구축 및 평가

-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물질에 대한 사람 중심 통합위해성평가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다양한 제품에서 복합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의 통합위해성평가 - 국내 노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노출자료 및 노출계수 DB화(6월) - 물질별 통합위해성평가 기술개발 연구 추진(12월) ○ 유해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확대(12월)	○ 비스페놀류 등 14종 통합위해성 평가 완료(12월) * 비스페놀류(3종), 프탈레이트류(7종), 파라벤류(4종) - 인체바이오모니터링 데이터 167,010건 및 노출계수 기반정보 DB화 완료(6월) - 중금속, 다이옥신류 통합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연구 추진(12월) ○ 프탈레이트류 7종 및 파라벤류 4종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완료(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유해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건수(누계)	64	64

* 연도별 평가건수 : ('13) 16건 → ('14) 9건 → ('15) 7건 → ('16) 11건 → ('17) 5건 → ('18) 5건 → ('19) 11건

3. 성과 및 한계

- 통합위해성평가로 생활 속 유해물질의 주요 노출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국민 건강 보호
 - 다양한 제품에서 복합노출 가능한 비스페놀류 등 14종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 완료
 - * 비스페놀류(3종), 프탈레이트류(7종), 파라벤류(4종)
 - 소비자·전문가·국민 대상별 맞춤형 소통을 통해 통합위해성평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소비자단체 간담회(4월), 전문가 학술대회(5, 6, 10월)

4. 향후 추진계획

- 대상 물질별 통합위해성평가 지속 추진
 - 중금속, 다이옥신류의 모니터링 자료 등 추가정보 확보를 통한 통합위해성평가 수행

1-2-①	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정착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김진숙 연구관 T.043-719-3854)

1. 과제내용

- ☐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19.1.1)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미비점 보완
 - 잠정기준의 정식기준으로의 전환 및 신규 농약 추가등록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지속 설정 필요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잠정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에 대해 정식기준으로 전환(6, 12월)	○ 이미녹타딘 등 잠정기준 605건 (국내 513건, 수입 92건) 정식기준 전환 행정예고(4, 7, 9, 12월)
○ 국내 등록 및 수입식품의 잔류 허용기준 지속 설정(6, 12월)	○ 국내 등록 농약(델타메트린 등 567건), 수입식품 기준신청 농약(글리포세이트 등 72건) 잔류허용기준 설정 (4~12월)
○ PLS 정착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연중)	○ PLS 현장 전문가 양성교육(3회), 외국대사관·수입업체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5회), 언론·SNS 등을 통한 PLS제도 홍보(연중)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¹⁾	실적 ²⁾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140	164

¹⁾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평균 설정 건수로 목표치 설정(식품위생법 제7조의3에 따라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²⁾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건수(행정예고)

3. 성과 및 한계

- ☐ PLS 도입 이전에 잠정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정식 기준화 (4~12월, 605건)
-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에 대한 신속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 (국내) 신규·직권 등록 농약 567건, (수입) 외국의 합법적 농약 72건
- ☐ 생산자 PLS 실천력 제고를 위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홍보에 집중, 생산자 인식개선을 통한 농약 사용량 및 부적합율 감소
 - * 생산자 PLS 인식도 향상 : ('18 상) 51.3% → ('18.하) 71.5% → ('19.10) 85.4%
 - * 유통농산물 중 농약 부적합률 감소 : ('18) 1.1% → ('19) 1.0%
 - * 국내 농약 출하량 감소 : ('18.1~11) 17.2천톤 → ('19.1~11) 15.7천톤

4. 향후 추진계획

- ☐ '18년 설정된 잠정기준(3,500여건)에 대해 시험자료에 근거한 정식 기준화 추진(지속)
 - * ADI 미등재 농약은 관계부처(농진청)와 협의하여 등록취소 등 관리방안 마련
- ☐ PLS 조기정착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지속)

1-2-①	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②	소면적 재배 농산물 농약사용기준 설정 및 등록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이경원 사무관 T. 063-238-0824)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성재욱 사무관 T. 063-238-0833)

1. 과제내용

- ☐ 2019.1.1일부터 전면시행 중인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농약 직권등록 사업 추진
 - 잠정 안전사용기준(약 5천개)을 3년간 직권등록으로 전환(~'21)
 - 약효·약해, 잔류성 시험을 통해 1,853농약 직권등록('19)
- ☐ 재등록 농약 및 국제 위해성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실시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농약 직권등록 확대(1,853개, ~'20.4월) - 직권시험(3~12월): 1,126시험(약효 약해 246, 잔류 880시험) - 직권등록(~'20.4월): 1,853개 * 식약처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잔류 기준 조기설정(수시)	○ 농약 직권등록(1,011개 완료, '19.12월) - 직권시험(3~12월): 1,126시험 완료 (약효약해 246, 잔류 880시험) * 과제선정(1월), 시험설계(~3월), 시험 수행(~12월), 중간진도관리(7~8월), 결과평가(11월) - 직권등록: 1,011개 완료(12월까지), 842개 등록검토 중('20.4월까지), * 농약전문위원회(6회), 잔류농약 공동 협의체(6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농약 직권등록(건수)	1,853	1,011*
○ 재등록농약의 안전성평가(건수)	100	137

* 농약 직권등록은 '19.12월까지 시험완료 후 '20.4월까지 1,853개 등록 목표로 추진

3. 성과 및 한계

□ 당초 계획대로 '19.12월까지 농약 1,126시험 완료, 1,011개 농약 직권등록했으며, '20.4월까지 목표한 1,853개 농약 직권등록 예상

○ 그동안의 농약등록 확대 등으로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조성되어 PLS 제도는 농업현장에 연착륙 중

* PLS 시행 1년차인 '19년도 농산물 부적합률은 '18년도와 비슷한 수준(1.4%→1.3 감소)

* 등록농약수: ('17.12) 167작물/16,349개 → ('18.12) 231/23,367 → ('19.12) 241/26,368

4. 향후 추진계획

□ 당초 계획대로 '19년 시험결과를 검토 후 직권등록 완료(~'20.4월)

○ 시험결과 검토(1월), 농약전문위원회(2월), 식약처 협의(3월), 직권등록(4월)

* 잔류허용기준 고시('20.4.14, 식약처)에 따른 농약 추가 직권등록 예정(450건, 4월말)으로 당초 '20.4월말까지 목표 1,853건 추진완료 예정

□ '20년 농약직권시험 및 직권등록(~'21.4월): 2,835개 농약

○ 과제선정(1월), 시험설계(~3월), 시험수행(~12월), 직권등록('21.4월)

* 농약 직권등록사업의 효율화 및 신속등록을 위하여 직권시험운영위원회,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

1-2-2	축·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①	농장단위 전수검사 및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김현정 사무관, T. 044-201-2978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영규 사무관 T.044-201-2561)

1. 과제내용

- ☐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장 단위 계란·산란노계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지속하고, 축산물 PL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대책 강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생산단계 계란, 산란노계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1월) ○ 계란, 산란노계 전수검사 추진 (1~12월) ○ 축산물 PLS 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산농가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 등 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1월) ○ 생산단계 산란계농장 계란 전수검사 완료 - 전국 산란계농장(1,289호) 계란검사 완료, 부적합 2호* * (부적합 2호) 1.17 경북 포항, 1.18 전남 강진 ○ '19년 축산농가 예비실태조사 완료 * 전체 9,743호: 소 4,392, 젖소 813, 돼지 976, 산란계 168, 육계 451 등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 등을 위한 예산 확보('20년 15억)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산란계 농장의 계란검사 건수	1,239	1,289

3. 성과 및 한계

- ☐ 2019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시행
- ☐ 2019년 살충제 계란검사 추진 결과, '17.8월 살충제(피프로닐 등) 계란 사건 발생 이후, 산란계 농가 대상 계란검사와 지도·홍보 등을 통해 살충제 검출농가 대폭 감소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생산 및 유통단계) 감소
 - * ('17) 78호 → ('18) 9호 → ('19) 2호
- ☐ 축산물 PLS 시행 대비 축산농가 예비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
 - '19년 축산농가 예비실태조사 완료
 - * 전체 9,743호: 소 4,392, 젖소 813, 돼지 976, 산란계 168, 육계 451 등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 등을 위한 예산 확보('20년 15억)

4. 향후 추진계획

- ☐ 2020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20년 1월)
- ☐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20년에도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지속 실시
- ☐ 축산물 PLS 시행 대비 동물용의약품 정비·확충 추진
 - '19년 축산농가 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년 본조사 추진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를 위한 잔류성 시험 등 추진
 - * '19년 기확보한 예산(15억) 활용하여 20개 품목 시험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정지윤 연구관 T.043-719-3852)

1. 과제내용

- ☐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 합법적 동물용의약품 및 비의도적 오염가능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0.01mg/kg)으로 관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개최(3회) ○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12월) ○ 동물용의약품 동시분석법 개발 확대(3월, 99종)	○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축·수산물의 PLS 도입방안 논의(4회) ○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12월) - 기준 미설정 항균제 기준 강화 (0.03→0.01 mg/kg, 12월 행정예고) -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추가(7종) -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동물용 의약품 17종, 농약 14종) - 잔류물질 위해프로파일 구축(102종) ○ 동물용의약품 동시분석법 개발 확대(90→99종) * 아목시실린, 세프티오퍼 등 99종 동물용 의약품 동시분석법 고시(3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횟수)	3	4

3. 성과 및 한계

- ☐ 위해도에 기반하여 잔류물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대한 일률기준 강화(0.03→0.01mg/kg, 행정예고 12월), 안전성 우려 동물용의약품(7종) 사용금지물질 지정(고시, 3, 10월)
 - 인체에 위해가 없거나, 축·수산물에 잔류하지 않는 물질(동물용의약품 177종, 농약 61종)에 대해 기준 면제물질목록 신설(12월)
- ☐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잔류물질 기준 확대
 - 국내 허가 사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 * 스트렙토마이신 등 16종 품목확대(3월) 및 가미스로마이신 신설(10월)
 - 사료이행 등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린단 등 14종)에 대해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기준 설정(7, 12월)
- ☐ 부처 협업을 통한 축·수산물의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의 도입 추진
 - 단계별 도입방안(동물용의약품→농약)에 따른 사전 준비 및 제도정비
 - * 잔류허용기준설정 부처협의체 및 잔류물질 안전관리 범부처 협의체(4회)

4. 향후 추진계획

- ☐ 부처 협업을 통한 축·수산물의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의 도입 추진(지속)
 -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확대 및 동시시험법 개발
 -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개최

1-2-2	축·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②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수산물 모니터링 확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044-200-5620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최재용 사무관 T.044-200-5619)

1. 과제내용

- ☐ 생산단계 해면어류에 대한 PCBs, 다이옥신 조사 계획 수립(2월)
- ☐ 패류에 대한 농약류* 및 다이옥신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18.12~)
 - 패류 전체 생산해역 71개 해역 중 15개 해역(지정해역 및 후보해역)에 대하여 우선 실시, 56개 해역은 예산 확보 후 '19년부터 농약류, '21년부터 다이옥신 조사 실시
- * 유기염소계 농약 14종 : HCH 3종, Aldrin, Dieldrin,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 DDE 2종, DDD 2종, DDT 2종, Endrin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생산단계 수산물안전성조사 계획 수립(2월) ○ 패류 생산해역 잔류성 오염물질 조사 - 패류에 대한 농약류 조사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2월) ○ 패류 생산해역 잔류성 오염물질 조사 - 패류 전체 생산해역 71개 해역에 대한 농약류 조사 실시 * 대상품종: 이매패류, 피낭류 및 복족류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100	100

* 측정산식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건수/ 위생조사 목표 건수]×100

3. 성과 및 한계

□ 패류 생산해역 71개소에 대한 농약류 조사 실시

- 패류 생산해역 71개(지정해역 7, 후보해역 8, 일반해역 56)에서 생산되는 패류에 유기염소계 농약 14종 조사 실시

4.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예산 등 확보 추진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주요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기반 구축에 한계

1-2-③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①	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중 서기관 T. 063-238-0840)

1. 과제내용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농약 유통 관리 강화
 -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 유도를 위한 농약 판매·구매 정보 전산화(~'20)
 -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활용('19), 예산 확보 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20)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시스템 연계) 민간 시스템과 농촌진흥청 '농약판매업 관리·교육시스템'을 연계 ○ (예산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20)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 (제도개선)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농약관리법 하위 규정 제·개정 - 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월, 농식품부), 고시 제정(~12월, 농진청)	○ 민간시스템과 농촌진흥청 시스템 연계 * 농협 경제통합시스템, 아산소프트, 우성판매재고 ○ 2020 예산 29억 확보(개발비 14억) ○ 제도개선 - 농약관리법 제 23조2(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같은법 제23조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시행규칙 제24조 4(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농촌진흥청고시(제2019-37호)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연계 활용 및 농진청 고시제정	○ 민간소프트웨어 연계 3건 * 민간 농약판매재고 시스템 농협 경제 통합시스템, 아산소프트, 우성판매재고 ○ 농진청 고시제정 1건 * (제2019-37호)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 법 및 농약 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3. 성과 및 한계

□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 psis.rda.go.kr](http://psis.rda.go.kr)) 서비스 개시('19.12.30.)

- 농약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농약 판매업자 정보관리(회원가입) 및 농약 판매업자(농협 등) 민간판매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구매 기초데이터 수집

* 회원가입 진행상황(판매업체 5,483개 중 4,034개 업체 가입)

4. 향후 추진계획

□ 농약 안전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판매관리인 교육을 통한 시스템 정착

- 금년도 확보된 예산(개발비 14억)을 투입하여 농약 등록 등 관련 정보 통합서비스 기능 구축
 - * 농약 구매정보를 기반으로 최적 처방, 부정·불량 농약 회수기능을 추가
- 농약 안전정보시스템 교육·홍보하고 미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계도 위주의 점검을 강화하여 시스템 정착

1-2-3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②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확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영규사무관, T.044-201-2561)

1. 과제내용

☐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항생제 내성 방지를 위한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지정 품목(성분) 확대

○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확대(20종 → 61종 이상, ~19년)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의사 처방 항생제 확대 - 20종 → 61종 이상, ~ '19년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농식품부고시) 개정 시행 - (종전) 20종 → ('17.11월) 25종 → ('18.5월) 32종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성분 확대	61종 이상	32종

3. 성과 및 한계

☐ 동물용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성분 단계적 확대

○ (종전, '13.8월) 20종 → ('17.11월) 25종 → ('18.5) 32종(페니실린 등 7종 추가)

□ 국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이 증가 추세이며, 선진국에 비해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율도 높아 항생제 사용총량을 절감할 수 있는 강화 대책 필요

○ 특히, WHO 및 OIE에서 지정하는 항생제 내성 중요항생제 성분에 대하여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 확대를 통한 관리 강화 시급

* 항생제 판매량 : ('13년) 820톤 → ('16년) 964톤 → ('17년) 1,027톤 → ('18년) 984톤

** 가축유래 대장균 항생제 내성율(%)

구분	Tetracycline			Ampicillin			Ciprofloxacin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한국('18)	31.5	77.2	72.4	7.3	74.1	81	1.1	13.2	65
일본('15)	18.6	45.8	54.9	5.5	34.4	43.5	0	3.1	4.9
덴마크('17)	7.7	37.2	13.9	6.1	35.5	16.5	0	0.6	12.2
캐나다('16)	36	71	48	3	35	37	3	1	6

4. 향후 추진계획

□ '20년까지 국내 허가 항생제 중 인체(WHO) 및 동물(OIE)의 중요 항생제 전 성분(50종 이상)에 대하여 처방대상 항생제 지정 추진

○ ('18년 계획) → 40종 이상 확대, 20년까지 → ('19년 계획) 61종 확대*, 19년까지** → (20년 계획) 50종 이상 확대

* '19년 계획은 61종 확대 예정이었으나, WHO / OIE 지정 중요 항생제가 54종('19년 기준)으로 파악되어 성분(종)수 조정(61종 → 50종 이상) 필요

** '19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은 축산 단체, 수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회 등을 위해 '20년으로 연기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계획 보고('20. 1월), 행정예고('20. 2월) 및 개정 고시('20. 2월, 예정)

1-2-③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③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044-200-5622)

1. 과제내용

-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및 재심사 실시
 - 수산용의약품의 재평가 및 재심사 실시
-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기준 설정 추진
 - 어종별 수산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연구
-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지도 및 관리 체계 구축
 - 수산용의약품 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 양식 수산물의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출하전 수산용의약품 사용 실태 조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 -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한 수산용 의약품 재평가 실시 - 수산용의약품 재심사(수시)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 개정 및 관련 연구 수행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 개정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 - 수산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 '20년도 재평가 품목 공고/2종81제품 * '19년도 재평가 : 5종12제품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 수산용의약품 재심사 * 수산물 백신(3건) 및 항생제(6건) 실시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 개정 및 관련 연구 수행 - 수산용의약품 관련 행정규칙 개정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고시 개정 등 5건 실시

추진계획	추진실적
- 어종별 맞춤형 수산용의약품 과제 수행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 수산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실사 및 수거·검정 실시 -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점검 -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 리플릿 발간·배포	- 어종별 맞춤형 수산용의약품 과제 수행 완료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 업체 약사감시 및 약품 수거·검정 * 제조업체 실사·점검 : 20개소 * 수거·검정 : 7개 시·도 및 국립수산물학원에서 수거한 109건 분석 -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점검 * 16개 시·도 양식장 점검(6,155 개소) - 2019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 리플릿 발간·보급(4,000부)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재평가	1종 이상	5종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 개정	1건	1건
○ 수산용의약품 수거검정 횟수(회)	105	109
○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2회
○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법 홍보	리플릿 등	4,000부

3. 성과 및 한계

☐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점검

-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미승인 약품의 불법사용 근절
 - * 국내 양식장 6,155개소 중 상반기 5,330개소, 하반기 82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 수산동물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한 사용기준 확대

- * 안전사용기준 유효성분 확대: ('17) 5종 → ('18) 11종 → ('19) 12종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수거·검정

- 제조업체 및 수산질병관리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분석(109점)

4. 향후 추진계획

☐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점검 추진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수거·검정 추진

1-3-①	유전자변형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 심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주인선 연구관 T.043-719-2359

담당자 : 식품위해평가과 박성수 연구관 T.043-719-4503)

1. 과제내용

-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및 재심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2. 추진계획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확인 등 사전안전관리 강화(연중) ○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개발 및 개선(11월) ○ 유전자변형동물(GM동물) 안전성 심사 관련 국제 동향 조사(12월)	○ 승인 후 10년 경과 품목 안전성 재심사(3건, 3월), 후대교배종 안전성 심사(1건, 7월), 업계 간담회(6, 11월) ○ GM 밀·사과 동시시험법 및 GM 콩 정량시험용 표준 플라즈마 보정계수 산출(11월) ○ GM동물 개발 동향, GM 연어 승인 사례, 심사 규정 조사(12월)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심사 건수(건)	3	3

3. 성과 및 한계

- ☐ 후대교배종 안전성 심사 시 삼입유전자 및 주변 염기서열 분석자료 추가 등 제출자료 요건 강화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2월 시행)

☐ 승인 후 10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 재확인(3품목, 3월)

* 제초제내성 GM 콩 2품목(MON89788, A2704-12), 해충저항성 GM 옥수수 1품목(MON89034)

☐ 신규 안전성 심사 중인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시험법 지속 확보

* GM 밀·사과 동시시험법 개선(9월), GM 카놀라·면화·감자 시험법 마련(10월, 11건), GM 콩 정량시험용 표준플라스미드 보정계수 산출(11월, 17건)

4. 향후 추진계획

☐ 승인 후 10년 마다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심사 지속('20년)

☐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개발 및 개선 지속('20년)

1-3-①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강화
②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팀 남혜선 연구관 T.043-719-2194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장미란 연구관 T.043-719-2352)

1. 과제내용

-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제도 개선 검토
- ☐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온라인 소통강화를 통한 GMO 인식 개선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회』 지속 운영(연중) ○ 식약처 팟 캐스트를 통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소개(4월) ○ '신소재식품 서포터즈'를 통한 정보 제공(3~11월) ○ 대상자별 눈높이를 고려한 GMO 교육 실시(연중)	○ GMO 표시제 개선 사회적 합의회의 개최(9회, 1~10월) ○ 팟 캐스트를 통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소개(4월) ○ 신소재식품 서포터즈 구성(2월), 주제별 정보제공(50건) 및 전파(130건) ○ 대상 맞춤형 'GMO 바로알기' 교육 실시(105회, 3~11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GMO 교육 횟수(회)	105	105

3. 성과 및 한계

- 중립적 갈등조정 전문기관을 통해 소비자 생산자 산업계를 포함한 새로운 협의회 구성 운영('18.12.12~)
 - 소비자·시민단체의 사회적 협의회 참여 중단 발표가 있었으나, 이해 관계자간(소비자·시민단체, 산업계) 실무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GMO 표시제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
 - 다만,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협의회 운영 필요성 제시
- 유전자변형식품 교육 예산액(약 65백만원) 부족으로 교육 대상자 확대 등 수혜율 제고에 한계

4.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 협의회와 논의하여 정부 주도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대상 맞춤형 『유전자변형식품 바로알기』 교육 및 정보제공 지속 실시

1-3-②	최근 도입 신 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토대 마련
①	유전자 가위기술 및 나노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문재은 연구관 T.043-719-242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장미란 연구관 T.043-719-2352
 담당자 : 식품위해평가과 박성수 연구관 T.043-719-4503)

1. 과제내용

- ☐ 세포배양고기, 유전자가위기술 등 신기술 이용 식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

2. 추진계획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유전자가위기술 이용식품 안전관리 부처협의(2, 3, 10월) ○ 국내·외 나노기술응용식품에 대한 유통실태 및 현황조사(9월) ○ 나노기술 체내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11월) ○ 바이오 기술 등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식품에 대한 기술동향보고서 마련(6월)	○ 유전자편집기술 등 바이오 신기술 규제방안 등 협의(6회, 3~8월) * 산업부·과기정통부 등 7개 부처 참여 ○ 국내·외 나노기술응용식품에 대한 제조 및 유통 실태 조사(9월) ○ 나노기술 3개 유형*에 대한 체내 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11월) * 총상자기조립법, 나노구조지질운반체, 3차원인쇄 ○ 주요국 세포배양육 관리 및 연구 동향 전문정보 마련(4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체내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 건수(건)	3	3

3. 성과 및 한계

- ☐ 바이오 신기술 규제 TF 참여를 통해 규제방안 논의(6회, 3~8월)
 - 유럽 등 국제 규제 동향 지속 조사, 유전자편집 기술 이용 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부처별 지속 협의 필요
 - ☐ 나노기술 체내흡수율 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
 - 대표 나노기술 유형 3개 유형에 대한 체내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 및 9개 유형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 국내·외 나노기술 이용 식품 제조 및 유통 현황 조사(9월)
 - 제조·유통현황 조사 등 정보수집 확대 및 나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형별 표준화된 시험법 개발 필요
 - ☐ 대체단백질 전문가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10월)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논의의 장을 구축하였으나,
 - 대체단백질식품의 상업화에 따른 식품인정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문제제기 가능성 상존
- * 식약처, 농식품부, 농과원 등 23개 기관 35명 참여
- * 美FDA, USDA 등 방문하여 대체단백질식품 관리방안 현장 조사(11월)

4. 향후 추진계획

- ☐ 유전자편집기술 이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 지속('20년)
- ☐ 나노기술 이용식품의 제형별 시험법 개발 및 실태조사 등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연구('20년)
- ☐ 대체단백질식품 전문가 협의체에 소비자 및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1-3-3	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대응 및 모델 개발
①	환경오염 · 기후변화에 따른 병원체 등 대응체계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서기관 T.043-719-324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김미경 연구관 T.043-719-4304
 담당자 : 식품위해평가과 박성수 연구관 T.043-719-4503)

1. 과제내용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고위험 지역**의 집중 관리

* 해양환경인자(해수 온도, 해류교환율) 및 검출이력 등을 토대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예보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의 예보지수 경고(40~85) 및 위험(86이상) 지역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위해증가 우려 미생물 및 미세플라스틱 등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운영 (4월~)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지수 및 수산물 섭취 주의정보 제공(3월~)
○ 여름철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안전관리(5~10월)	○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 검사(1,733건),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점검(1,473개소),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물 배포(2만개)
○ 미생물 생육예측모델 개발(12월)	○ 떡류 황색포도상구균, 김치류 병원성 대장균 등 예측모델 15건 개발(12월)
○ 천일염,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함량 및 인체 위해성 조사	○ 수산물, 천일염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사전평가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비브리�균 검사건수	1,250건	1,733건
○ 미생물 생육 예측모델 개발 건수	10건	15건
○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대상 건수	9종	12종

3. 성과 및 한계

- 비브리오패혈증균 고위험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에 기반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중점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홍보를 통해 환자수 전년 대비 13% 감소
 - * 비브리오패혈증 환자수 : ('18년) 46명 → ('19년) 40명
- 미생물 생육예측 모델 개발을 통한 병원체 발생 대응 기반마련
 - 떡류 황색포도상구균 등 생육예측모델 개발(15건)로 기후변화 대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천일염,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함량 및 인체 위해성 조사
 - 수산물(11종), 천일염 등 총 81건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건강영향 사전평가(11월)

4. 향후 추진계획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지속 활용으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
 - * 관계기관 및 대국민 예보지수 제공 및 고위험지역 점검 강화
- 기후변화 대비 신선편의샐러드 등의 식중독균 생육예측모델 개발(5건)
-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량 평가 지속 수행

1-3-4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
①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

(담당자 :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과공과 유흥식 연구관 T.051-720-2630)

1. 과제내용

- ☐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관리방안 연구(연중)
 - 유해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등)의 모니터링
 - 전국 연안 패류생산 해역(64개소) 패류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
 - 수산물(해조류) 중의 중금속 분석법 개발
 - 다소비 해조류(미역 등) 중의 요오드 분석 및 잔류조사
- ☐ 패류 중의 유해세균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연중)
 - 패류 품종별 유해세균(대장균 등) 제거를 위한 최적 정화조건(유수, 순환, 유량, 적재량, 수온 등) 구명
 - 대상품종 : 굴('17년~'18년), 바지락('19~'20년)
- ☐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에 대한 분석법 확립
 - 팔리톡신, 브레비톡신 분석법 마련('19~'20)
 - 해외전문가 활용, 기술연수 및 최적화
 - 제주도 연안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실시('20~)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패류 중의 유해세균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연중) - 대상품종: 굴('17년~'18년), 바지락('19~'20년)	○ 바지락 중의 유해세균(대장균 등)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 - 바지락 대장균 인공정화 최적조건 구명(1품종)
○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관리 방안 연구(연중) - 수산물 중의 중금속(요오드) 분석법 개발 및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	○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 (207건) 및 분석법 개발 - ICP-MS이용 해조류 중의 요오드 분석법 개발(약알칼리분해법)
○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에 대한 분석법 확립 - 팔리톡신, 브레비톡신 분석법 마련('19~'20)	○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에 대한 분석법 확립 - LC-MS/MS를 이용한 팔리톡신 분석법 확립(1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중금속 관리방안 연구(건수)	200	207
○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 분석법 확립(건수)	1	1

3. 성과 및 한계

☐ 바지락 중의 병원미생물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

- 바지락 최적 인공정화조건 구명(대장균 2일 이내 기준치 이하 감소)

☐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 및 분석법 개발

- 전국 연안 패류생산 해역(64개소) 패류(128건) 유해중금속 및 다소비 해조류(미역 등 79건) 요오드 모니터링
- ICP-MS이용 해조류 중의 요오드 분석법 개발(약알칼리분해법)

☐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 분석법 확립

- 아열대성 어류 중의 팔리톡신 분석을 위한 LC-MS/MS법 확립

4. 향후 추진계획

☐ 패류(피조개) 중의 유해세균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

☐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등)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브레비톡신)에 대한 분석법 확립

2-1-①	(농산물) 농지·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
①	농경지 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오재협 사무관 T.044-201-236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정은모 사무관 T.054-429-4135)

1. 과제내용

- ☐ 농산물 재배환경 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유해물질 오염사전 차단
 - 농경지 중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재배환경 중 유해물질 조사
- ☐ 양분관리 목적 및 대상물질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양분부하량 산정과 체계적인 양분관리대책 마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재배환경 중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공항, 고속도로 등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 중금속 실태조사	○ 재배환경 중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농지 중금속 조사 실시 - 개황조사 19지구, 정밀조사 17지구 * 36지구(공항 5, 고속도로 13, 저수지 11, 화력발전소 7) 5,912건 조사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재배환경 잔류조사 추진실적*	6,000건	5,912건
○ 가축분뇨 자원화율**	91.4%	98.2%

* 지표측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관리정보시스템(SAFEQIN)에서 실적 확인

** 자원화율 측정산식 : 자원화물량/전체 가축분뇨 발생량×100(자료출처 : 퇴비판매량, 액비이용량, 공공처리물량 등을 농진청, 환경부에서 취합)

3. 성과 및 한계

- ☐ (한계) 중금속 오염우려기준 초과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조사 결과 기준초과 농지에 대해 해당필지 현황을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농관원은 생산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 실시
- * 중금속 오염 농경지 복토·정화·용도전환 등 후속조치는 미흡

4. 향후 추진계획

- ☐ 폐광산 이외의 중금속 오염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복토, 정화, 용도 전환 등)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 추진

농촌진흥청

(담당자 :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문병철 농업연구관 T.063-238-3233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허승오 농업연구관, T.063-238-2440)

1. 과제내용

-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 및 품질관리기술 개발
 - 유기농업자재 원료 식물추출물의 지표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
 - 유기농업자재 유효성분의 안정성 평가
- ☐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및 평가
 - 일반농경지(논, 밭, 시설재배, 과수원), 공단인근 농경지 조사·평가
 - * 일반농경지 : 밭 1,760점('17), 과수원 1,470('18), 논 2,110('19), 시설 1,374('20)
 - * 공단인근 : 전국 4개 권역(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권역별 150점 총 600점/년
- ☐ 농산물 위해요소 안전관리기술 개발
 - 잔류농약 분석기술 개발 및 국가정도관리(QC) 체계 구축
 - 농경지중 벼재배지의 비소 흡수 저감화 기술 개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유기농업자재 관리기술개발 -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 유효성분 안정성 검증 ○ 제5차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사업 추진('17~'20) : 토양 중금속 - 일반·취약 농경지 토양 모니터링 및 정보화 * 일반농경지('19) : 논토양 2,110점 * 취약농경지('19) : 공단인근 600점 ○ 잔류농약 정밀분석법 개발 ○ 벼의 비소 흡수 저감화 현장기술 개발	○ 유기농업자재 관리기술 개발 -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 대황, 황련 추출물 2종(정책제안 예정 3월) - 유효성분의 온도안정성 검증 * 제충국, 백리향, 팔마로사 3종 ○ 제5차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사업 추진('17~'20) : 토양 중금속 - 일반농경지 중금속 오염도 조사·평가 * 전국 논토양 2,110점 - 취약농경지 중금속 오염도 조사·평가 * 공단인근 600점(권역별 150점) ○ 잔류농약 정밀분석법 개발 - 신물질 pydiflumetofen 1종(논문공개제1건) - Chlomequat 등 난분석 2종(정책제안1건) ○ 벼의 비소 흡수 저감화 현장기술 개발 - 토양개량제 이용 벼의 비소흡수 저감화 영농법 개발(영농활용 1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종, 누적)	18	18
○ 일반·취약농경지 중금속 DB 구축 건수*	2,710	2,710
○ 중금속 오염 농경지 저감화 기술개발(건, 누적)	3	3
○ 난분석 신규등록농약 분석법 개발(건, 누적)	10	12

*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사업을 통해 흙토람에 구축된 일반 및 취약농경지 토양의 중금속의 DB를 구축함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성과는 과제 목표 달성으로 2020년에 완결함

3. 성과 및 한계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공정분석법 개발 및 가열 안정성 검증

- 분석법 개발 : 대황(emodin 등 3종), 황련(berberine, palmatine, coptisine)
- 가열안정성 확인 : 제충국(pyrethrin류 6종의 합), 백리향(thymol), 팔마로사(geraniol, linalool)

□ 매년, 공단인근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대책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것을 정책자료로 건의

- 농산물 안전성 조사(농관원)은 추진되고 있으나 토양개량 대책(해당 지자체)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업무분장 : 토양개량 대책(해당 지자체), 농산물안전성 조사(농관원)

* 농경지 중금속 관리기준이 총합량으로 규정되어 영농학적 토양개량에 한계

□ 난분석 신규등록농약 분석법 개발(5건)

- 신물질: broflanilide 등 5종, 난분석농약 Chlormequat 등 5종
- 지방농촌진흥기관 잔류분석기술 교육 2회(56명) 수행

□ 농산물 및 농업환경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 농업환경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 논토양(500지역), 농업용수(지하수 50지역)
- 유기염소계 토양잔류량 조사

* 인삼밭(71), 감자밭(77), 고구마밭(56), 마늘밭(54)방사·방목지(30)

□ 벼의 비소 흡수 저감화 현장기술 개발

- 토양개량제를 이용한 벼의 비소 흡수 저감화 영농법 개발

- 봄철 이앙 전 규산질비료(수용성)와 석고비료를 혼합 시용 후 벼 재배 시 현미 및 백미 중 무기비소 저감 효과(무처리구 대비 현미 중 무기비소 저감율 26%)

* 개량제 시용량 : 규산질비료 9 kg/10a, 석고비료 200 kg/10a

- 한계 : 토양개량제 등 농경지 중금속 안정화제의 지속성에 대한 정보 부족

4. 향후 추진계획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공정분석법 개발 및 가열 안정성 검증

- 지표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 : 옷나무, 붉나무, 자몽
- 유효성분의 안정성 평가 : 대황, 황련

- 일반 및 취약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 조사·평가 지속 추진

- 일반농경지 : 시설재배지 1,374('20)
- 공업단지 인근 농경지('20) : 4개 권역별 150점 총 600점

- 잔류농약 정밀분석법 개발 및 잔류분석기술 교육

- '농산물·농업환경 중 잔류농약 최신 분석법' 발간
- 지방농촌진흥기관 잔류분석기술 교육 2회 계획

- 토양개량제 등 농경지 중금속 안정화제의 장기 지속성 여부 구명 필요

- 관련 신규 연구과제 추진 : 농업환경 및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 평가 및 저감화 기술 개발(2021~2025)

* 비소 흡수 저감화 현장기술 개발(2018~2019)은 2019년에 관련 과제 완결

2-1-①	(농산물) 농지·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
②	농업용수 모니터링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강대일 사무관, T.044-201-1857)

1. 과제내용

☐ 농업용수 수질 상시 모니터링 및 개선 시행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
 -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4회/년 수질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수질기준 IV등급 초과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추진(87개소)

☐ 폐광산 등 오염원 하류 저수지 중금속 모니터링 실시

- 유역내 폐광산이 위치한 112개소에 대해 중금속 모니터링(4회/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 수질 상시 모니터링 ○ 수질 IV등급 초과 저수지 87개소 대상, 수질개선사업 추진 ○ 유역내 폐광산이 위치한 112개 저수지 중금속 모니터링 실시	○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연4회) 수질 측정 * '19년 수질분석 결과는 '20. 1월 최종 확정 ○ 농업용수 관리목표인 IV등급 초과 저수지 87개소에 대하여 수질개선 사업 지속 추진 - '18년까지 32개소 사업완료, '19년 19개소(준공 4, 계속 9, 신규 6) 사업 추진 ○ 유역내 폐광산이 위치한 112개 저수지 중금속 모니터링 실시 결과, 112개 저수지 모두 건강 보호항목 기준 만족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질기준 IV등급 만족도(%) [*]	95.0	89.5
○ 수질개선사업 추진율(%) ^{**}	42.5	41.4

* 수질기준 IV등급 만족도(%) = (IV등급 이하 측정망 수/총 수질측정망 수) * 100

** 수질개선사업 추진율(%) = (완료지구 수/대상지구 수(87지구)) * 100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농업용수 수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를 구축·운영 중

-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저수지 953, 답수호 22)를 대상으로 TOC, T-N, T-P 등 수질판단인자 19개 항목을 분기별 조사
- 수질조사 결과, 수질이 농업용수 관리목표인 IV등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87개 저수지는 호내 인공습지, 침강지 등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 수질개선사업 완료 후 자연정화시설 기능이 안정화되는 5년이 경과한 13개 저수지 중 10개 저수지 수질이 IV등급 이내 유지
 - 저수지 수질이 IV등급에 못한 3개 저수지는 상류유역 오염원 증가 주요인으로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IV등급 유지를 추진 중

□ (한계)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여건 악화로 인하여 농업용 호소 수질 개선이 전반적으로 정체

-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오염원 증가 및 강우패턴(빈도 ↓, 강도 ↑) 변화로 수질관리여건 악화
 -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농업용수 관리목표인 IV등급 초과 농업용 호소 비율^{*}이 10% 내외에서 정체

* ('14) 10.0 → ('15) 9.8 → ('16) 10.1 → ('17) 8.3 → ('18) 11.2

- 수질개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수질조사와 호내 수질개선 대책 중심의 수질관리에서 상류유역 오염원 관리 강화를 병행할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유역 오염원 관리 강화

- 수질개선사업 추진시 상류유역 주민의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프로그램 등 도입 및 추진
- 환경부(상류대책)·농식품부(호내대책) 중앙부처간, 지방(유역)환경청·지자체·농어촌공사 등 지역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등 추진

☐ 농업용수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 (모니터링)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연4회) 수질 조사
- (수질개선) 수질 모니터링 결과, 수질이 지속적으로 농업용수 관리 목표인 IV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 등은 수질개선사업 시행

2-1-①	(농산물) 농지·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
③	농자재 위해요소 실태조사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정은모 사무관 T.054-429-4135)

1. 과제내용

- ☐ 농산물 생산자재 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유해물질 오염사전 차단
 - 농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자재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위해요소 실태조사 실시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생산자재(버섯배지, 일반퇴비 등)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조사 150건	○ 생산자재(버섯배지, 일반퇴비 등)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조사 180건 완료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농자재 위해요소 실태조사 실적(건)	150	180

* 지표 내용 : 농자재 위해요소 실태조사 물량 달성도를 지표로 설정 관리

* 지표 측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관리정보시스템(SafeQin)에서 실적 확인

3. 성과 및 한계

- ☐ (성과) 농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산자재(버섯배지, 일반퇴비 등)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실태조사 실시
 - 버섯배지: 잔류농약 70건, 중금속 70건 조사
 - * 버섯배지의 경우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중금속은 유사기준(토양오염 우려기준) 참고 시 모두 기준 이내로 조사됨

○ 퇴비: 항생물질 40건 조사

* 퇴비의 경우 항생물질 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

□ (한계) 생산자재(버섯배지, 일반퇴비 등)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모니터링 차원의 실태조사만 실시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자재(버섯배지, 일반퇴비 등)에 대한 유해물질별 조사결과에 따라 잔류실태조사 지속 추진여부 결정

○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생산자재(버섯배지) 농약 잔류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 시 이를 이용하여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한 조사도 추가 실시

○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16~19년 4년 연속 조사결과 불검출인 생산자재(일반퇴비) 항생물질 조사는 '20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

2-1-②	(축산물)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
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서기관, T.044-201-2336)

농림축산식품부

1. 과제내용

- ☐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시설 자금을 지원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동물복지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사표준설계도 보급 ○ '19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침 통보('18.12) - 동물복지형 축사 우선 선정 및 자금우대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도별 자금배정('19.3)	○ 기금 축사표준설계도서 보급('19.1월 2천부) ○ '19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침 통보('18.12.19) - 동물복지형 축사 우선 선정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설치시 시설자금 우대 지원(지원단가 및 상한액 10% 상향)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도별 자금배정('19.3.19)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축사표준설계도 농가교육(횟수)	4	4

* 연도별 축사표준설계도 농가교육 실적 자료

3. 성과 및 한계

- ☐ (성과) 축사표준설계도를 제작하여 농가, 지자체 등에 보급(2천부) 하고, 농가에 교육(4회, 203명)함으로써 동물복지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육환경 기반 조성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에 참여하는 동물복지형 축사는 우선 선정 및 자금우대(한도 10% 상향)를 통해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 유도

* 농가교육 : 1차(영천 30명), 2차(임실 42명), 3차(평창 100명), 4차(곡성 31명)

- (한계) '19년 가금류(닭, 오리) 축사표준설계도를 제작·보급했으나, 타 축종의 축사표준설계도 제작 보급 필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사업으로 공사기간 등이 소요되므로 자금배정 조기추진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20년 양돈 축사표준설계도를 제작·보급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도별 자금 조기 배정(1월) 추진

농촌진흥청

(담당자 :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김종복 연구관, T. 063-238-7430
농촌진흥청 동물복지연구팀 전중환 연구사, T. 063-238-7051)

1. 과제내용

- ☐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동물복지형 축사관리 기술 개발
 - 생체정보 기반 동물복지 사양관리기술 개발
 - ICT 기반 동물복지사육시설 통합관리 및 생산시스템 개발·구축
- ☐ 축사 내부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자동화 시스템 개발
 - 원격 환기제어, 액상사료급이기·착유시스템·축산분뇨처리 자동화 등
- ☐ 생체정보 및 성장모델 기반 미래형 양돈 스마트팜 모델 개발
 - 가축 질병발생징후 예측기술, 사육단계별 정밀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 ICT 기반 동물복지 사육시설 통합관리·생산시스템 개발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생체정보 기반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 개발 * ('19) 한우 ○ ICT 기반 동물복지사육시설 통합관리 및 생산시스템 개발·구축 * ('19) 개방형 제어 기반 1세대 축산 스마트팜 모델 고도화 및 실증 ○ 축사 내부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자동화 시스템 개발 * ('19) 로봇착유시스템	○ 한우 정밀개체 관리를 위한 유용 생체 지표 탐색 및 생체정보 수집장치 연구 * 이동거리(활동량) 및 발성음 등 생체정보의 농가현장 활용 가능성 분석 ○ 개방형 제어 기반 ICT 기반 축사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축종별 2개 농가 실증 (한우, 젃소, 돼지, 산란계, 육계) ○ 로봇착유시스템 개발 및 실증 * 로봇착유시스템 시작기 개발 및 농가 현장 실증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축산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 건수	3	3
○ 축산 스마트팜 협업체계 강화 건수	5	5

* 축산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 : 3건(개체별 착유정보 기록 시스템, 가축 유두 세척장치, 가축용 냉온 음수 공급장치)

* 축산 스마트팜 협업체계 강화 건수 : 5건(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평가 및 자문, 동물복지 종합계획 T/F 지원, 축사건축핸드북(한우, 낙농) 개발 자문, 스마트축산 발전방안 수립 지원, 동물복지형 산란계사 시범사업 자문)

3. 성과 및 한계

□ 해당없음

4. 향후 추진계획

□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동물복지형 축사관리 기술 개발

○ 생체정보 기반 동물복지 사양관리기술 개발

* 가축 유용생체지표 선발을 통한 동물복지 관리기술 고도화 : 한우, 젃소('20)

○ ICT 기반 동물복지사육시설 통합관리 및 생산시스템 개발·구축

* ICT장치 통합관리 확대를 위한 축산 ICT 장치 표준 고도화('20)

□ 축사 내부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자동화 시스템 개발

○ 원격 환기제어, 액상사료급이기·착유시스템·축산분뇨처리 자동화 등

* ('19) 로봇착유시스템 → ('20) 분뇨처리 자동화 시스템

□ 생체정보 및 성장모델 기반 미래형 양돈 스마트팜 모델 개발

○ 가축 질병발생징후 예측기술, 사육단계별 정밀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 ICT 기반 동물복지 사육시설 통합관리·생산시스템 개발

* ('22) 한국형 스마트축사모델 4종(한우, 젃소, 돼지, 닭)

2-1-②	(축산물)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
②	동물복지 직불금 제도 도입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이승환 사무관, T. 044-201-2372)

1. 과제내용

- 인증 초기 농가의 소득감소 등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물복지 인증 후 3년간 직불금 지급('20)
 - '20년부터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고, 타 축종은 단계적 확대 추진
 - * 산란계 지급(안) : (평사기준 단가) 3원/개, (한도) 3천만원
 - * (추진현황) 무항생제 직불금 잔여 예산, 동물복지축산 농장 지원사업 전환 검토
 - '19년부터 동물복지축산 인증 직불금 지급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 정부예산안에 19.5억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됨
 - * 직불제도 개편이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편 전 신규 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기재부 입장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동물복지인증 직불금 도입 예산 반영 협의(4~9월) ○ 동물복지 인증농가 직불금 지급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8~9월)	○ '20년 동물복지축산인증 직불금 19.5억 반영요구 및 미반영 ○ 농가 초기부담 완화 위해 인증 컨설팅 지원예산* 등으로 전환하여 기재부 요구 및 10.95억 반영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컨설팅·교육 등) 예산(15.8억원 요구) ○ 동물복지직불금 지급규정안 작성 완료('18.12월) 및 직불금 미반영에 따라 법령개정 미추진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가(개소)	193	257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축산 인증 현황 자료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등 농가 초기부담 완화를 위한 '20년 예산 10.95억원* 확보

* 동물복지농장 인증 컨설팅 4, 생산품 판로 홍보 및 지원 1.6, 교육 등 5.35

☐ (한계) 직불제도 개편 중임에 따라 '20년 동물복지 인증 직불금 도입은 미반영

* 신규 직불예산 반영은 직불제도 개편 이후에 가능하다는 기재부 입장

4. 향후 추진계획

☐ 직불금 개편 완료('20) 후 직불금 예산 요구 재추진

2-1-②	(축산물)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
③	가금류 입식 사전신고제 법제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황성철 사무관, T. 044-201-2555)

1. 과제내용

- ☐ (목적) 가금농가는 가금(초생추 및 중추) 입식 이전에 지자체에 입식 신고 하고 지자체는 입식 전에 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AI 등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 활용
- ☐ (추진과제) 가금 사육업 허가 대상 농가의 경우 가금을 입식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의무화 추진
 - 입식 전 신고를 통해 사육현황의 정보 현행화 및 사전 점검을 통해 농가 방역준수사항이 준비된 상태로 입식되어 질병에 사전 예방

▶ (개인 농가) 입식농가 → 농가 사전평가 → 사전 입식신고서 관할 사군 제출(7일전) → 관할 사군 점검 및 수리 → 농가 및 방역본부(FARMS 등록 등) 통보 → 입식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전업규모 가금농가 대상 입식 전 신고제 사전 적용	○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가에 대해 사전 적용('17.11월~현재) * 가금농가 입식전 신고제 시행('17.11.6. 시행)
○ 입식전 사전 신고 의무화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9.8.27.)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입식 전 신고제 사전 적용	시행 추진	추진완료
○ 입식전 사전 신고 의무화	법률 개정	완료

3. 성과 및 한계

□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입식 신고제 사전 적용 중('17.11~현재)

- 전업규모 가금농가(산란계, 육계, 오리, 토종닭 등)는 입식 전에 사전 신고 및 농가 정보 현행화 추진

- 가금 입식 전 농가의 사육시설 사전 점검 및 세척·소독 실시

⇒ 가축 질병 예방효과와 검사 추진시 누락 방지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 법률 개정 완료, 개정안 공포('19.8.27)

- 닭·오리 등 사육농가는 입식 전에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규모 등을 지자체(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4. 향후 추진계획

□ 법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마련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2.28)

2-1-2	(축산물)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
④	가금류 사육지역 개편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서기관, T.044-201-2336)

1. 과제내용

- ☐ AI 재발하는 밀집지역 농가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하여 AI 발생과 확산을 예방
 - 개별 축사를 이전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축사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19년 가금밀집지역 개편사업 시행 지침 마련('18.12) . - 부지확보 등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기간 연장(1~2년) 등 내용 보완 ○ 지자체별로 가금농가 사업신청·접수 및 개편계획 제출 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19년 사업대상 지역 선정('19.4)	○ '19년 가금밀집지역 개편사업 시행 지침 마련('18.12.19) - 부지확보 등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기간 연장(1~2년) 등 내용 보완 ○ 가금밀집지역개편 사업신청공문 통보 (2회, '18.12 ~ '19.4월, 2회) - 사업 신청·접수 실적 없음 * 축산법 개정('18.12)에 따라 기존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 축사에서 500m 이내 신규허가 불가 등으로 가금농가 밀집을 원천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가금밀집지역개편 지침마련(식)	1	1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및 한계) 부지확보, 공사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기간을 연장(1→2년)하는 내용 등 사업지침을 보완함
 - 축사간 사육거리 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부지 확보 지난,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참여에 한계
 - 다만 축산법 개정('18.12)에 따라 기존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 축사에서 500m이내 신규허가 불가함에 따라 가금농가 밀집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향후 추진계획

-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기존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 축사에서 500m이내 신규 허가 불가 등으로 가금농가 밀집을 원천 차단
 - 사업수요가 없는 가금밀집지역개편사업 '20년 폐지

2-1-③	(축산물) 현장 맞춤형 방제·도축·교육 강화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준걸 사무관, T. 044-201-2552)

1. 과제내용

- ☐ 축산농가의 해충 방제를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방제 효율성도 저하
 - '17.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원인 조사 결과 산란계 농가에서 농약 등 무허가 제품 사용 및 동물약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 다수 확인
 - * '17.8월 산란계 농가의 계란 살충제 오염 전수조사(1,239농가) 결과 부적합 55농가 中 무허가 제품 사용 10농가, 사용기준 미준수 24농가 등 확인
- ☐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추진
 -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 쥐 방제, 컨설팅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방제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기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시행규칙 조항 신설)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 시범사업 실시	○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 개정('19.6월) - 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소독·방제기준, 교육과정 세부규정, 의무적 이용대상자와 구체적 의무사항 규정 등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 '19년(100개소) : 총사업비 18억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건수	8	24

3. 성과 및 한계

- 법령개정(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19.6)을 통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하여 효율적·전문적인 해충방제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
 - 신설업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활성화 견인 필요
 - 연차별 투자계획 '20년 18억 → '21년 18억 → '22년 18억
 - * '20년 예산은 확정예산, '20년 이후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름

2-1-③	(축산물) 현장 맞춤형 방제·도축·교육 강화
②	닭 진드기 방제기술 연구 지원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양미희 연구관, T. 044-201-2457)

1. 과제내용

- ☐ 닭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사육 환경 개선, 친환경 방제제 등 종합방제 전략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피프로닐 설펜 제거기술, 살충제 안전·유효성 평가, 농장 위생관리 기준 설정 등 5개 신규 과제 선정(5.6억원) 및 연구 추진('18~)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연구 목표 달성 여부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 적절성 등 최종평가('19.6) * 피프로닐 대사산물(설펜)의 효과적인 제거기술 개발('18.4.~'19.4)	○ 최종평가 실시 완료('19.6) - (성과)피프로닐 대사산물의 효과적인 제거 물질 생성장치 개발, 피프로닐 설펜 제거 소독제 사업화 성공('19년 매출액 4,500만원)
○ 연구과제 진도 점검 및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등 중간평가 실시('19.11) * 질병 매개 닭진드기 방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한 신규한 방제법 및 유효성분 발굴('18.7~'20.12)	○ 중간평가 실시 완료('19.11) - (성과)신규 물질 screening에 의한 닭진드기 퇴치 가능한 후보물질 1종 발굴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닭진드기 방제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3	3*

* 닭진드기 포획트랩(특허번호 10-2019-0013681), 분말 살포 장치(특허번호 10-2019-0139509), 신규한 아미드 유도체 및 이를 포함하는 진드기 방제용 조성물(특허번호 10-2019-0145267)

3. 성과 및 한계

- 닭 진드기 발생 억제 기술개발을 위한 계속과제(4과제) 5.4억원 지원('19)
 - 종합방제전략(IPM) 개념을 이용한 현장방제기술 개발과 농가보급(1.2억원)
 - 닭진드기 방제를 위한 농장 위생관리 기준 개발(1.2억원)
 - 친환경적인 닭진드기 방제를 위한 곤충병원성 진균을 이용한 현장 적용 기술 개발(1.2억원)
 - 질병 매개 닭진드기 방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한 신규한 방제법 및 유효성분 발굴(1.8억원)

4. 향후 추진계획

- 닭 진드기 관련 연구과제 '20년 연구비 1.8억원 지원 예정
 - 질병 매개 닭진드기 방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한 신규한 방제법 및 유효성분 발굴
- 최종평가(3과제)를 통해 과제별 연구성과 달성여부 및 향후 연구성과 활용계획의 적절성 점검('20.3)

2-1-③	(축산물) 현장 맞춤형 방제·도축·교육 강화
③	도축장 오염방지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설찬구 사무관, T. 043-719-3204)

1. 과제내용

- ☐ 도축 전 미생물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18)하고 소규모 도축장, 문제 업소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위생상태 집중 점검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소규모 도축장 등 취약 도축장 선정 위생 점검(3~12월) ○ 체표면 오염 가축의 처리에 대한 도축업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19.12월) - 분변 등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그 오염원을 적절하게 제거하도록 규정 마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년도 HACCP 운용 부적합 도축장 등 90개소 점검 * 13개소에서 위반 적발로 확인서 징구 등 조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9.7월) * 법제처 심사 중(10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육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율(%)	0.1	0.1

* 국내산 식육 미생물 검사(일반세균 및 대장균, 1~3분기 누적) : 83,207건 검사에서 97건 검출(0.1%)

3. 성과 및 한계

- ☐ 도축장에서 식육 위생관리를 위한 점검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도축장 위생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은 개선토록 조치
 - * '19년 도축장 90개소 점검, 13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확인서 징구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9.7월)
 - '19년 10월부터 법제처 심사 중

4. 향후 추진계획

- ☐ '20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시행('20년 1월)
 - 식육 미생물 관리를 위해 '20년에도 미생물 검사 지속 실시
- ☐ 법령 개정 절차에 따른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심의 등 대응 지속

2-1-4	(수산물)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
①	수산동식물 생산해역 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최재용 사무관 T.044-200-5618)

1. 과제내용

- ☐ '19년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계획 수립('18. 12)
 - 생산해역 위생조사 연구용역 계약('19. 4)
 - 패류 생산해역(64개 해역)에 대한 위생항목 및 육·해상 오염원 조사 추진('19. 3 ~ '20. 2)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사업 중간평가 실시('19. 9)
- ☐ 패류 등 생산해역 육·해상 오염원 위생관리지침 배포('19. 4)
 - 위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산해역의 수질 보전 또는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육·해상오염원 관리를 지원코자 위생관리지침 배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패류 생산해역 모니터링	○ 패류 생산해역(64개소)에 대한 위생조사(38개 항목) 실시
○ 패류 생산해역 육·해상 오염원 조사 실시	○ 패류 생산해역 25개소에 대한 육·해상 오염원 조사 실시
○ 육·해상 오염원 위생관리지침 배포	○ 패류 등 생산해역 육·해상 오염원 위생관리지침 배포('19.3)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104	142

* 측정산식 : [당해 연도 위생조사 건수/최근 3년간 평균 위생조사 건수]×100

3. 성과 및 한계

□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지속 추진

○ 내수용 패류에 대한 위생조사 항목 지속 확대

* 조사항목 : ('18년) 20개 항목 → ('19년) 38개 항목(18개 추가/병원성 세균 2, 항생물질 2, 농약 14)

○ 내수용 패류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용 패류 대비 상대적으로 위생관리 취약

4. 향후 추진계획

□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지속 확보 추진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항목(농약 16개 항목, 항생물질 8개 항목, 바이러스 5종, 다이옥신 17개) 및 조사해역(3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1,125백만원) 확보 추진

□ 내수용 패류 생산해역(일반해역)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관리 기준 설정 추진

2-1-④	(수산물)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
②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담당자 : 환경부 생활하수과 성남준 사무관, T.044-201-7036)

1. 과제내용

- ☐ 생산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36개소 '22년까지 추가 확충
 - * 현재 패류 생산해역 주변 67개소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19년도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22개소 착수	○ '19년도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31개소 착수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19년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착수 개소수	22	31

3. 성과 및 한계

- ☐ '19년 시설 확충 착수 목표 22개소 대비 31개소 착수로 9개소 조기 추진(달성도 141%)
- ☐ 하수처리시설 확충 대상 해역이 지정해역 주변에만 한정, 향후 일반해역 주변으로 확대 시행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 내수용 패류 생산해역(일반해역) 주변의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대상지역 범위를 일반해역 주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2-1-5	(수산물)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①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장용호 사무관 T.044-200-5633
양식산업과 박명래 사무관 T.044-200-5631
양식산업과 한지용 사무관 T.044-200-5635)

1. 과제내용

- ☐ 양식수 정화·관리 시스템 개발·확대
 - 항생제·소독제 등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는 품종별 예방양식 시스템 개발 및 양식장 수질 정화시설 보급
- ☐ 배합사료 사용 확대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어분이 저감된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법적근거 마련 및 친환경 인센티브 지원
- ☐ 우수 양식 종자 개발
 - 「수산종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질병내성 우량종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을 위한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 추진('19년)	○ 5개시·도 대상으로 친환경 양식 시스템 민간보급 추진(99.2억원, 20개소)
○ 맞춤형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을 위한 현장 시험양식 및 저어분·고효율 사료 개발연구 추진('19년)	○ 완도 넙치양식장 배합사료 현장 시험양식 착수(6.21), 저어분·고효율 배합사료 개발연구 착수(3.21.)
○ 우수 양식 종자개발을 위한 육종 전복보급센터 시설확충 및 연구 추진(2~12월)	○ 육종전복보급센터 건립(전남해남, 12.26.) 및 신품종 개발(3개)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친환경 양식장 구축(개소)	15	20
○ 배합사료 사용률(%)	25	25
○ 신품종 종자 개발(개)	3	3

3. 성과 및 한계

□ 친환경 양식장 구축 목표 초과 달성 및 신품종 종자 개발, 지원 사업 보조율 조정을 통한 대상 확대로 배합사료 사용률 목표 달성

○ 친환경 양식장 구축을 위해 양식수 정화 등 첨단양식시스템 지원

* 바이오플락 3개소, 순환여과 12개소, 용수정화 2개소, 아쿠아포닉 등 3개소

○ 질병 및 고수온 등 환경내성에 강하고 성장이 빠른 신품종 종자 (브랜드) 개발(넙치 3품종, 바리과 4품종, 전복 4, 김 7품종)

○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사용률 확대

* 배합사료 사용률(%) : ('11) 19.8% → ('15) 23.1 → ('19) 25.0

4. 향후 추진계획

□ 수처리시설 확대 및 종자개발 등을 지속추진하고, 배합사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용률 향상 추진

○ 양식수 정화·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및 종자생산업계 육성정책과 신품종 종자 개발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2-1-⑤	(수산물)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②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044-200-5622)

1. 과제내용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 등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를 통한 불량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
- 수산식품 안전관리 여건 등 환경변화에 효율적·적극적인 대응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2월)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2.13)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5월)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5.21)
○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업무 협의회(12월)	○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업무 협의회(11.19)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산물 안전기준 적합률(%)	98.50 이상	99.3

3. 성과 및 한계

- ☐ 다소비·부적합 이력 품종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불량 수산물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

* 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 14,921, 부적합 111건

- ☐ 분석 장비구축으로 지자체의 분석 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지자체의 안전성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 확보 추가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 20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20년 1월)
 - 다소비·부적합 이력 품종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조사 지속 실시(연중)

2-1-⑥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①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김남진 사무관, T. 044-201-2278)

1. 과제내용

-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식품 생산·유통

*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안전성 분석) 토양·용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연중) ○ (시설 보완)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개·보수 지원(연중) ○ (교육) 농업인·유통·소비자 등 대상으로 GAP 교육과 컨설팅 추진	○ GAP 인증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 '19년 GAP 인증건수 9,102건 달성 (99,050호, 9.7%) * '19년 목표(8,232건 대비 138% 달성) - GAP 안전성 분석 5,757백만원, GAP 시설보완 1,050백만원 보조 - 농업인(58,109명), 유통·급식(727명), 소비자(11,264명) 대상 교육 - 컨설팅 4,448호 실시하여 3,236호 인증 전환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GAP 인증건수 확대(건)	8,232	9,102

* 당해연도 GAP 신규 인증 및 갱신 건수(누계, GAP 정보서비스)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생산 지원과 유통·소비 교육·홍보 강화로 GAP 인증 9천건 달성

- '19년 GAP 인증농가 99,050호(9.7%), 면적 112,106ha(7.0%), 인증 건수 9,102건 달성으로 대국민 안전·안심 농산물 공급에 기여

* GAP 인증농가 : '15) 54천호(4.8%) → '16) 75(6.9) → '17) 86(8.1) → '18) 87(8.3)

* GAP 재배면적 : '15) 65천ha(3.9%) → '16) 89천(5.3) → '17) 103(6.3) → '18) 102(6.3)

* GAP 인증건수 : '15) 4,019건 → '16) 6,059 → '17) 6,909 → '18) 7,782

- GAP 안전성 분석비*(토양·용수·농산물) 지원, GAP 시설(RPC·APC 등)의 위생설비 개·보수 비용지원*으로 안전기반 확충 및 농가 부담 완화

- GAP 인증확대를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 추진

* 농업인(58,109명), 유통·급식(727명), 소비자(11,264명) 대상 교육

- GAP 컨설팅(4,448호) 실시로 3,236농가(72.7%) 인증전환

□ (한계) 인증 증가 상승률의 둔화로 지속적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생산·유통·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 GAP는 농업인이 준수해야할 기본 규범이라는 인식 확대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GAP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교육·홍보 지속 추진

농촌진흥청

(담당자 :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농업연구관, T. 063-238-3391)

1. 과제내용

- ☐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GAP 실천 및 인증 관련 기술 개발·보급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농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GAP 실천기술 개발 및 보급 - 「위생관리지침」 2종 개발 ○ 식중독 유발 위해요소 분석 및 신속검출 매뉴얼 개발·보급 확대 - ('18) 3건, ('19) 2건 ○ 농업인, 인증기관을 위한 민-관-학-연 기술지원 협업체계 구축 - 농산물안전위생연구회 활성화 - GAP기술전문위원회 역할 강화	○ 안전 농산물 「위생관리지침」 지침 개발 및 농업현장 보급 - 고춧가루, 버섯, 부추 등 3종 개발·보급 ○ 식중독 유발 위해요소 분석 매뉴얼 발간 및 기술보급 - 「IoT적용 대장균검출기술」 매뉴얼 - 대장균검출기 6개지역, 42대 보급 ○ 민-관-학-연 기술지원 체계 구축 - 농산물안전위생연구회 : 현장워크숍 (2.27-28, 8.26-27), 심포지엄(5.23) - GAP기술전문위원회(6.25)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생관리지침 개발 보급(건)	2	3
○ 위해요소 신속검출 매뉴얼 및 기술보급(건)	2	2

* 위생관리지침 또는 매뉴얼을 보급용으로 발간한 건수를 집계

3. 성과 및 한계

☐ 성과

- (기술개발) 농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GAP 실천기술 개발·보급 추진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위생관리지침」, 위해요소 분석기술 개발·보급
 - * 위생관리지침 : 안전한 고춧가루 생산을 위한 위생관리기술 등 2건
 - * 위해요소 분석기술 : 잡곡 푸사리움 독성곰팡이 예방지침 등 2건
- (협업) 농업인, 인증기관을 위한 민-관-학-연 기술지원 협업체계 구축
 - 농산물안전위생연구회 활성화, GAP기술전문위원회 활동 강화
 - * 현장 워크숍 2회(2.27-28, 8.26-27), 심포지엄(5.23), GAP기술전문위원회(6.25)

☐ 한계

- 품목군별 위해요소관리 중심의 GAP 기준 개정 필요
 - 공통기준을 전품목에 적용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기준과 농업환경 변화에 부적합한 기준 발생하여 현장 애로 발생

4. 향후 추진계획

☐ 품목별 위해요소관리 중심의 GAP 기준 개정(안) 마련

- GAP 기준 개선을 위한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 (3월)
- GAP 기준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상반기)
 - 대상 : 정부부처 담당자, 농업인, 인증기관, 소비자 등 200명
 - 주요 내용 : GAP 인증 기준틀, GAP기준 보안점 및 개선점 등
- 품목군별 GAP 기준 개선안 마련 및 의견 조회(하반기)

2-1-⑥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정수 사무관, T.044-201-2443)

1. 과제내용

-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충을 통해 생산기반 집단화·규모화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누계) : ('17) 16개소 → ('19) 46 → ('22) 100
- ☐ 친환경 저투입 농법의 개발·보급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지속 실천 유도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충(12월) - 친환경농업지구·보완 15개소 선정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개소 건립(12월) - 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충(17개소) - 친환경농업지구 17개소(신규11, 보완 6) 선정·지원 ○ 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19. 10.27 준공)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친환경농업 지구수(개소, 누계) 성과지표 측정방법: 친환경농업지구 보완 선정 개소수('17~, 누계)	46	47

* 친환경농업지구수(누계) : ('17) 16개소 → ('18) 31개소 → ('19) 47개소

3. 성과 및 한계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충으로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
 - 친환경농업지구 17개소* 선정, 생산·유통·가공 시설·장비 지원(39억원)
 - * 강원(2),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7), 경북(1), 경남(2), 제주(2)
 - 친환경농업지구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지속적으로 확대
 - * 지구·단지 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 ('17) 32.8% → ('18) 33.3 → ('19.6월) 34.3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법 개발·보급에 기여
 - 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19.10.27 준공, 누계 10개소)

4.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속 추진
 - 친환경농업지구·보완 18개소 선정·지원('20.12월)

2-1-⑥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③	축산물 HACCP 확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1. 과제내용

- ☐ HACCP 농장표시제 도입('19), HACCP 인증 희망 축산농가 대상 컨설팅 실시, 인증 사후관리 미흡 농가 대상 기술지원
- ☐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을 포함하여 일정규모 이상 축산 전업농 위주로 HACCP 적용 확대 지속 추진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HACCP 인증 축산농장의 제품 표시 규정(고시) 개정(식약처협업) ○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사업, 인증 사업(3~12월) - HACCP 인증희망 농가대상 컨설팅 사업 추진 - 사후관리 미흡농가 대상 기술지원 사업 추진	○ 축산농장 HACCP 인증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개정 추진 - 우대조치로 HACCP 적용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축산물의 경우 최종 제품에 농장의 인증 사실을 표시 * 관련고시 행정예고(10.11.~10.30, 식약처) ○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사업 추진 - HACCP 컨설팅 설명회(4.9) - HACCP 활성화 위한 간담회(6.27) - HACCP 활성화 유관기관 회의(11.7)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HACCP 인증농가수(누적)	7,500개 이상	7,556개

* 축산 전업농(1,9080개소) 대비 HACCP 인증 관리(신규 인증 및 반발 등)

3. 성과 및 한계

□ 축산농가 HACCP 인증 관리 및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및 조사·평가 추진

- '19년 축산농가 대상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236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이 중 220개 농가(93.2%)에서 HACCP 인증 획득
- HACCP 인증 목표 누적 농가수인 7,500개를 상회하여 누적 총 7,556개 농가에 인증 완료('19.12.20. 기준)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HACCP 운용 수준 조사·평가('19. 4월~11월)를 실시하여 우수 업체 시상(14개소) 및 미흡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 도축장(포유류 84개소, 가금류 50개소), 집유장(59개소) 평가

4. 향후 추진계획

□ 축산농가 HACCP 인증 관리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 및 조사·평가 추진

- 축산농가 HACCP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2-1-⑥	(수산물)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④	HACCP 수산물 적용 확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044-200-5622)

1. 과제내용

- ☐ 육상양식장의 잠재적 위해요소에 대해 사전 예방·관리 지속 강화
 - 항생제·용수 등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도록 위생·안전 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HACCP 등록 양식장 지속 확대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19년도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실태조사 실시(계약일~12월) ○ HACCP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행사(12월)	○ '19년도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2.20) ○ 사업대상자 선정(한국수산식품안전연구소) 및 컨설팅·실태조사('19.5~12월) ○ HACCP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행사(12.7)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양식장 HACCP 등록(개소수)	220	237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양식장 HACCP 등록 보고

3. 성과 및 한계

- ☐ 102개소 양식장 HACCP 컨설팅 진행 후 43개소 HACCP 등록 완료
 - 인식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워크숍 개최 및 HACCP 등록 수산물 시식회 개최 등 홍보 지원
- ☐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19년 10월)

4. 향후 추진계획

- ☐ 양식장 HACCP 컨설팅 및 지원사업 지속 추진

2-2-①	일반식품
①	HACCP 적용식품 확대 및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김홍태 사무관, T.043-719-2854)

1. 과제내용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지속 확대

- 간편식(즉석조리식품)·어린이기호식품(~'20), 식육가공업('24) 등에 대한 HACCP 조기 적용 유도 및 확대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HACCP인증 지속 확대 추진 - 어린이기호식품 등 4단계, 식육가공업 2단계 추진(연중) - HACCP 인증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연중) - HACCP 표준기준서 개발·배포(9월) ○ HACCP 적용업체 관리 강화 - 사후평가 시 전면 불시평가(연중) -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확대(연중) - HACCP기준서 재검토 및 현장 기술지원(연중) - CCP 모니터링 기록 위·변조 방지 시스템 시범사업(10월~)	○ 차질 없는 HACCP인증 확대 추진 - 식품 804개소 및 축산물 318개소 HACCP인증 완료(누계 10,168개소) - 영세 소규모 업체 시설개선비 지원(644개소) 및 기술지원(5,537개소) - 소규모 즉석조리식품 표준기준서 개발·배포(9월) ○ HACCP 적용업체 관리 강화 - 전면 불시평가* 실시 및 근거 명확화(고시개정, 3월) * 불시평가 비율 : ('18) 43.1→('19)100% - 중요기준 위반 시 '즉시인증취소' 확대 추진(시행규칙 개정, 12월) - 소규모 업소 등 307개소 HACCP 기준서 재검토 및 현장 기술지원 - 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10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HACCP제품 생산비율(%)	86.2	86.5

* '19년 HACCP제품 생산비율(%)은 '17년 전체 제조업체 생산량 30,863톤 대비 HACCP 제조업체 생산량 비율(%)임

3. 성과 및 한계

□ 차질 없는 HACCP 인증 확대로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 마련

○ 어린이기호식품, 식육가공업 등 차질 없는 HACCP 인증 확대

* 식품·축산가공품 HACCP인증업체수 : ('18) 9,163 → ('19) 10,168개소(1,005 ↑)

* HACCP적용 제품 생산비율 : ('18) 85.2 → ('19) 86.5% (목표 86.2%)

□ HACCP업체에 대한 전면 불시평가, CCP 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내실화로 국민 신뢰도 제고

* 불시평가 비율 : ('18) 43.1% → ('19.11) 100%(4,730개소)

* 사후평가 부적합율 : ('18) 사전예고 4.4% → ('19.11) 불시 8.7%

4. 향후 추진계획

□ 차질 없는 HACCP 인증 확대 및 제도 내실화 지속 추진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4단계), 식육가공업(2단계)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및 영세업체 재정·기술지원 강화(연중)

○ 스마트 HACCP 활성화를 위해 인정절차 및 우대조치 등 규정 신설 (~'20.3),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60개소)

2-2-①	일반식품
②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서기관 T.043-719-3241
남궁종환 사무관 T.043-719-3253)

1. 과제내용

☐ 위생취약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자유업(비제도권)으로 관리되어 위생이 취약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에 대한 자율 위생관리 지원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2, 11월) ○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교육·홍보 실시(연중)	○ 절임배추 등 생산업체 632개소 위생점검 및 생식용굴, 김 등 44건 수거·검사(2, 11월) ○ 농·수협 등 생산자 단체와 자율검사 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4회) ○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단순처리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10월, 2,000부) ○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비브리오균, 중금속 시험법 교육(6월, 8개 기관) ○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환경마련을 위한 교육·홍보(4~11월) * 교육 101회 4,599명, 홍보 8회 7,000명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생산자단체 자율검사 협의회	4회	4회

3. 성과 및 한계

- ☐ 생산자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및 생산업체에 대한 반복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례 감소*

* 부적합 현황 : ('16) 84건 → ('17) 52건 → ('18) 18건 → ('19) 없음

- 식생활 환경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안전관리 컨설팅,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지속)
- ☐ 생산자단체 민간자율검사 강화를 위한 시험법 교육 지원(지속)
- ☐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교육·홍보(지속)

2-2-2	건강기능식품
①	제조기준 강화(GMP 적용 의무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이선희 사무관 T.043-719-2452
한규홍 연구관 T.043-719-2456)

1. 과제내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단계적 적용 의무화 통한 건강기능식품 품질 및 안전성 강화

* 의무화 대상('17년 매출액)중 미적용업소 : '19년(10~20억) 10개소 → '20년(10억 미만) 140개소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GMP적용 준비업체 대상 전문 컨설팅 실시(3~11월)	○ 컨설팅 대상업체 20개소 선정 및 컨설팅 실시(3~11월, 업체별 6회 이상) * 3개소 GMP 지정, 16개소 '20년 GMP 신청예정, 1개소 중도포기
○ GMP 미적용 업체 대상 지도·홍보활동 지속 전개(4~11월)	○ GMP 준비업체별 위생수준 사전 진단*(3~4월) 및 집중 관리** * A등급(1개소), B등급(10개소), C등급(8개소) ** 기준서 작성 등 교육(4회), 현장견학(4회), 맞춤형 현장 컨설팅(4~11월) ○ 소규모업체의 GMP 적용을 위한 고시개정(12월) - 시설기준 구체화, HACCP과 GMP 유사항목 상호연계평가 등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GMP 의무화 적용비율(%)	100	100

* GMP 적용업소 / GMP 의무적용 대상업소*100

3. 성과 및 한계

- '19년 GMP 의무적용 대상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GMP 적용 완료**

* '17년 기준 매출액 10~20억 이상 제조업체 10개소

** 10개소 중 7개소 GMP 지정 완료, 3개소는 공장이전·폐업 등 자진 반납

- '20년 의무적용 대상인 소규모 제조업소의 GMP 적용에 애로

- GMP 적용 시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설비, 품질관리가 필요하여 중소규모 업소가 GMP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 '17년 기준 매출액 10억 미만 제조업체 257개소 중 143개소 GMP 지정

4. 향후 추진계획

- GMP 컨설팅 지원 사업 확대 및 제조업체별 책임전담제 운영

- '20년 의무적용업체의 효율적인 GMP 적용을 위해 컨설팅 대상 확대(20개소→40개소) 및 컨설팅업체 적극성 제고 방안 마련(2~11월)
- 정부-컨설팅-대상업체 간 1:1 책임전담제 운영 등 집중 관리(연중)
 - 의무적용업체별 책임자 지정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고시 관련 운영지침, 매뉴얼 배포·운영

- GMP 의무화에 따른 시설기준 등 상향 입법(12월~)

- 시설·제조기준, 기준서, 제조위생·품질관리, 교육·훈련 등 고시 운영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는 근거 마련

2-2-②	건강기능식품
②	기능성 검증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정형욱 연구관, T.043-719-2441)

1. 과제내용

☐ 기능성 원료 재평가

-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주기적 재평가) 안전성에 새로운 보고 등이 있는(상시적 재평가) 기능성 원료에 대해 재평가 실시

* 주기적 재평가 : ('18) 19종 → ('19) 8종 / 상시적 재평가 : ('18) 7종 → ('19) 9종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 수립(2월)	○ 주기적·상시적 재평가 원료목록, 재평가 방법 및 일정 등 계획 수립(2월)
○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공고(2월)	○ 베타카로틴 등 영양성분 9종 목록 및 자료제출 방법 등 공고(2월)
○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공고(8월)	○ 홍삼 등 기능성 원료 8종 목록 및 자료제출 방법 등 공고(8월)
○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공시(12월)	○ 재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12월) * KBS, 연합뉴스 등 33개 언론사 보도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재평가 원료*(건수)	17	17

*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 안전성에 새로운 보고 등이 있는 원료

3. 성과 및 한계

- 베타카로틴 등 재평가 대상 원료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자료 확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결과보고서 마련 및 공개
 - '19년도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크롬의 기능성 내용, 베타카로틴 등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예정
- '18년도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성 내용 삭제 등 후속조치 완료
 -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5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변경, 중금속 규격 신설 등 개정

4.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 등 기능성 원료 12종* 재평가 추진('20년)
 -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수행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과 공개
- *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APIC 대두배아열수 추출물 등 복합물,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피브로인추출물 BF-7 등

2-2-②	건강기능식품
③	이상사례 체계적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이선희 사무관 T.043-719-2452
한규홍 연구관 T.043-719-2456)

1. 과제내용

□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명령제 시행

- 이상사례 등 위해정보가 확인되어 신속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즉시 변경 조치

* 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정보전달의 필요성 여부 확인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조사·분석 관리체계 개선 -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 및 전문의 활용 이상사례 자문(연중) - 중증 이상사례 전문가 자문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6, 12월)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조사·분석 관리체계 개선 - 의사가 섭취자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증상 진단, 외부 전문의를 통해 이상사례 등 12건 자문 - 입원 등 중대 이상사례 전문가 자문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개최(3회) 및 영업자 권고 등 조치*(6건) * 판매주의, 표시개선 등 조치 및 공개 ○ 이상사례 보고의무 등 관리체계 법적근거 마련(12월), 이상사례 조사·분석 용역사업 추진(7~11월) * 국내·외 이상사례 비교분석 등 업무 체계 개선을 위한 매뉴얼(안)마련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이상사례 조사·분석	운영	운영

3. 성과 및 한계

☐ 이상사례 체계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2월)

- 약국개설자, 수입업자 등 영업자의 이상사례 보고의무,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 실시 및 공표 근거 신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과관계가 규명된 중대 이상 사례에 대해 판매주의 및 표시개선 등 조치로 소비자 안전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 이상사례 보고 등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규정 및 지침 마련(~'20.6월)

-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조사·분석 등 관련 세부 절차 마련
-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상사례 조사·분석을 위한 업무 지침 구체화

* 설문양식, 영업자 이상사례 신고방법, 이상사례 분석 및 조치사항 등 마련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련 용역사업 추진('20.3~8월)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하는 이상 증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 검토 등

2-2-③	주류(술)
①	주류업체 등급별 차등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조강신 사무관 T.043-719-6052)

1. 과제내용

- ☐ 주류업체의 위생 수준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 강화
 - 주류업체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을 통해 위생 등급별(자율·일반·중점) 맞춤형 현장 안전관리
 - 설·추석 명절 대비 선물용·제수용 주류 및 계절별 다소비 주류 제조업체 점검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주류업체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에 따른 차등관리 실시(연중) - 자율·일반·중점 등급별로 정기평가 (공무원점검, 자율점검)를 실시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주류 중심의 지도·점검 강화(연중)	○ 주류업체 위생관리 수준에 따른 정기평가 실시(1,198개소, 연중) - 전체 주류업체 대상 차등 관리를 통해 주류 위생관리 준수율 향상 * ('18년) 91.1% → ('19년) 93.4% ○ 주류 유형별 제조·유통업체 기획 점검(887개소) 및 수거·검사(1,034건) ○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를 통한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182개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92.0	93.4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주류업체 '위생관리등급제'를 통한 위생수준별 맞춤형 현장 점검에 집중한 결과, 업계 전반의 위생수준 향상
 - 또한, 행정처분 이력 업체는 특별 관리하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 제조환경 마련
- (한계) 일부 업체의 위생수준이 여전히 취약한 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수단 마련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전체 주류업체 대상의 '위생관리등급제'를 위생취약 주류제조업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
 - 행정처분 이력업체, 신규업체 등 위생취약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그 외 업체는 자율점검 관리 확대
- * 취약 주류업체의 기본적인 위생수준 확보를 위해 영업등록부터 제조까지 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집중 관리

2-2-③	주류(술)
②	주류업체 식품용수 안전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조강신 사무관 T.043-719-6052)

1. 과제내용

- ☐ 지하수 사용 주류업체 사전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 강화
 -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지하수 사용업체 검사시기 알림정보 제공 및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수질관리 매뉴얼 제공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질검사 부적합 검사결과 신속 보고 및 긴급 조치(연중) ○ 지하수 사용업체 검사시기 도래 알림 정보 제공(매월 2회) ○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수질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7월)	○ 수질검사 부적합 결과 신속 보고 및 사용중지 및 시설개수 등 긴급조치 요청(23건) ○ 지하수 사용업체 실태조사(1~2월), 수질검사 사전알림 문자(우편) 발송(246개소, 492회) ○ 주류제조업 영업자를 위한 수질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7월) * 지하수 사용 관련 규정, 지하수 급수 시설 위생관리, 정수처리 방법 등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지하수 수질안전관리 정보 제공 건수(건)	400	492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지하수 사용 주류업체 수질관리 정보 제공 및 위반업체 점검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행정처분 감소('18년 8건 → '19년 2건)

○ 부적합 지하수 통보지연(누락)에 따른 행정조치 지연 방지를 위해 부적합 지하수 긴급통보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나라 식품통합안전정보망을 통한 실시간 부적합 정보 공유

☐ (한계) 지하수 오염 예측 정보제공을 통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부적합 지하수 발생현황 지도표출 서비스

○ 지하수 발생 위치정보를 지도에 표출·제공하여 인근지역 지하수 오염 주의 알림 등 지하수 안전관리를 위한 직관적 분석 지원

☐ 지하수 오염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2-2-③	주류(술)
③	소규모업체 안전·품질 관리 지원

(담당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이화정 연구관 T.043-719-6053)

1. 과제내용

- ☐ 주류 안전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지원 강화
- ☐ 주류제조업체의 안전·품질관리 및 법령 위반 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도입 확대
- ☐ 소규모 주류제조업소 증가 및 다양한 제품 생산에 따른 고품질의 안전한 제조환경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4~11월) - 현장 컨설팅, 위생·안전교육, 소규모 HACCP 기술지원 등 실시 ○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 확대(연중) ○ 소규모 주류업체의 안전한 제조환경 구축 지원 강화(연중)	○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182개소 업체 지원(5~11월) - 현장 컨설팅(367회), 위생·분석교육(4회), 우수업체 견학(4회), 소규모 HACCP 기술지원(25개소) ○ 신규 자율안전관리인 65개소 지정 및 보수교육(6, 12월) 실시 ○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11회), 전통주·막걸리 협회 간담회(2월), 소규모(6, 12월)·새내기(5, 10월) 업체 기술세미나 개최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주류안전관리인 도입업체수(누적)	250개소	252개소

3. 성과 및 한계

- ☐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참여업체의 현장컨설팅 및 우수업체 견학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만족 이상 비율 89.1%)
 - 지원사업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안전관리 인식수준 향상(사업 전 6.9점 → 사업 후 9.0점)
- ☐ 주류 업계의 고령화, 영세화 등으로 인해 교육참석 등에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 안전관리인 지정에 한계 발생

4. 향후 추진계획

- ☐ 영세 및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대상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지원('21)

2-3-①	친환경인증 기준 강화
①	친환경인증 안전성 심사기준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장성두 사무관, T. 044-201-2437)

1. 과제내용

- 친환경 인증이 식품안전을 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위생·안전관리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안전성 의무검사 확대 실시
 - (위생·안전) GAP(농산물), HACCP(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친환경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심사기준 보완·개정(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18.12.31.)
 - (잔류검사) 신규인증 신청 단계에서만 실시하던 잔류물질 검사를 갱신 주기별(매년) 의무적으로 실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잔류검사) 신규인증 신청 단계에서만 실시하던 잔류물질 검사를 갱신 주기별(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규정 마련(7월) * (현행) 단체(표본), 개인(신규) → (개선) 단체(표본), 개인(신규, 갱신)	○ 신규인증 신청 단계에서만 실시하던 잔류물질 검사를 갱신 주기별(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규정 마련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관원 고시) 개정('19.7.1.)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인증심사 잔류검사 기준 마련	고시개정	개정완료 (‘19.7.1)

3. 성과 및 한계

☐ 친환경인증 심사 시 잔류물질 검사 강화로 부실인증 차단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2-3-①	친환경인증 기준 강화
②	인증체계 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남기현 사무관, T. 044-201-2352)

1. 과제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적인 인증체계에 맞춰 ‘유기(Organic)’로 단일화('20)
 - ‘무항생제’는 친환경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되,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분리, 축산법으로 이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을 위한 계획 수립(1월) - '19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및 축산법 개정안 마련 ○ 축산법 개정안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영향평가(2월) ○ 축산법 개정안 입법예고(3~4월) ○ 축산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5~6월) 및 국회 제출(7월)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축산법 개정안 마련('19.2.3) * '19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 관계기관 협의(2.7~2.18) 및 각종 영향평가 완료(2.15~3.11) ○ 입법예고(2.26~4.8), 법제처 심사(5.9~7.15), 국무회의 의결(7.30) 및 국회 제출(8.2) ○ 국회 상임위 의결('19.11.20),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19.11.27) - 11개조 신설, 6개조 개정, 부칙 신설 * '20.8.28. 시행 예정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축산법 개정	국회 통과	국회 제출 (‘19.8.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이관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3. 성과 및 한계

-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를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함으로써 친환경 농어업법의 목적 및 국제 인증체계와 부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19.8.2)되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
 - 축산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20.8.28.로 설정됨에 따라 축산법 개정 후 신속히 하위법령 개정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축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20.8.28.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신속한 개정 추진
-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 마련(‘20.1월)
 - 생산자, 소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확정
 - * (하위법령 개정 추진일정) 개정안 마련(‘20.1월) → 생산자 등 의견수렴(1월) → 관계기관 협의(2월) → 입법예고(2~3월) → 규제심사(3~4월) → 법제처 심사(5~6월) → 차관·국무회의(7월) → 공포(8월)
 - * 축산법 국회 통과 일정을 감안하여 하위법령 개정 일정 탄력적 적용

2-3-②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
①	친환경 부실인증 가능성 차단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장성두 사무관, T. 044-201-2437)

1. 과제내용

- ☐ 감독기관·인증기관·농가 간의 부실인증 가능성 사전 차단
 - (심사원 자격 제한) 심사원 취업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고 공무원 경력은 불인정(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18.12.31.)
 - (공직자 재취업 제한)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2년간) 권고·적용
 - (인증기관 선정 제한) 농가에서 동일기관에 연속 신청은 2회로 제한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공직자 재취업 제한)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2년간) 권고안 마련('19.12월) ○ (인증기관 선정 제한)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신청 제한 규정 마련('19.12월)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2년간) 권고안 마련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 개정('19.2.26.) ○ 동일 인증기관 연속 인증신청 횟수 등을 부령으로 제한하는 규정 마련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공포('19.8.27.)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개정	정관개정	개정완료 (19.2.26)
○ 동일기관 2회 연속 신청 제한	법률개정	개정완료 (19.8.27)

3. 성과 및 한계

- ☐ 인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 차단 보완책 마련으로 부실인증 가능성 사전 차단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2-3-②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
②	친환경 부실 인증기관 퇴출제도 도입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장성두 사무관, T. 044-201-2437)

1. 과제내용

-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퇴출 규정('16.8~)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집중관리 및 퇴출제 신규 도입
 - (역량평가) 평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상반기 감독기관(농관원)이 평가기관(제3자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18.9.27)
 - (집중관리) 역량평가 '미흡' 인증기관이 심사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감독기관(농관원)이 집중 지도·점검
 - (지정취소)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미흡’ 인증기관이 인증한 사업자 관리 강화(연중) ○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 기관 ‘지정취소’(‘19.12월)	○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인증 기관이 인증한 사업자에 대해서 강화된 모니터링(10%) 실시 (‘19.12.13.기준) <table border="1"><thead><tr><th>‘미흡’ 인증기관수</th><th>모니터링 대상건수</th><th>모니터링 건수</th><th>모니터링 비율(%)</th></tr></thead><tbody><tr><td>3</td><td>1,587</td><td>189</td><td>11.9</td></tr></tbody></table> * ‘미흡’ 이외 인증기관은 5% 모니터링 ○ 인증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공포(‘19.8.27.)	‘미흡’ 인증기관수	모니터링 대상건수	모니터링 건수	모니터링 비율(%)	3	1,587	189	11.9
‘미흡’ 인증기관수	모니터링 대상건수	모니터링 건수	모니터링 비율(%)						
3	1,587	189	11.9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연속 “미흡” 인증기관 지정취소	법률개정	개정완료 (19.8.27)

3. 성과 및 한계

☐ 부실 인증기관 퇴출 규정 마련으로 건실한 인증기관 육성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2-3-3	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①	중대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처벌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장성두 사무관, T. 044-201-2437)

1. 과제내용

- 즉시 ‘인증취소’ 및 상습 위반자(인증취소 처분 3회) 대상의 영구 퇴출제 신규 도입 등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즉시 인증취소) 축사에 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한 경우, 축산물에서 농약 등 위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18.12.31.)
 - (징벌적 과징) 3년간 2회 이상 농약 사용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신설
 - (삼진아웃) 인증취소 처분 3회 받은 경우 영구퇴출 등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19.12월) ○ 인증취소 처분 3회 받은 경우 인증신청 제한('19.12월)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게 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공포('19.8.27.)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을 사용하여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10년간 3회 받은 농가는 친환경인증 신청을 5년간 제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공포('19.8.27.)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과징금 부과기준 도입	법률개정	개정완료 (‘19.8.27)
○ 상습위반자 신청제한 강화	법률개정	개정완료 (‘19.8.27)

3. 성과 및 한계

- ☐ 안전성 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으로 국민적 먹거리 불안 해소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2-3-③	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②	친환경 인증농가 교육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장성두 사무관, T. 044-201-2437)

1. 과제내용

- ☐ 모든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고,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를 인증기준 위반 우려가 높은 농가 위주로 강화
 - (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신규), 인증을 받은 자(보수) 모두 인증 제도 교육 의무화(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18.12.31)
 - (생산·유통단계 검사) ① 인증기준 위반 우려 농가, 취약시기 생산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② 인증품 유통단계 조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인증기준 위반 우려 농가, 취약시기 생산·유통 단계 안전성 검사 확대 (연중)	○ 인증기준 위반 우려 농가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 - 최근 3년 이내 농약검출, 인증 경력, 행정처분이력 등을 고려, 인증기준 위반 우려가 높은 취약 시기 중점 검사 실시 * ('19.12.13.기준) 생산단계 검사 18,269건, 유통단계 검사 3,973건

-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 없음

3. 성과 및 한계

- ☐ 생산·유통 단계 안전성검사 강화로 부실인증품 사전 차단 및 친환경 인증제도의 국민적 신뢰도 제고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2-3-③	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
③	축산농장 HACCP 관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1. 과제내용

- ☐ 축산농장 HACCP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 및 농약(제초제 등) 추가 및 무작위 불시 조사 평가 추진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축산농장 HACCP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 및 농약(제초제 등) 잔류예방관리 추가(3~12월, 식약처 협업) ○ HACCP 인증 농가에 대한 연중 무작위 불시 조사·평가 추진으로 축산농가 사후관리 강화(3~12월)	○ 축산농장 HACCP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개정 추진 - HACCP 인증 평가항목에 동물용 의약품 및 농약 등 잔류물질 예방 내용 추가('19.10월 행정예고, '20.1월 시행) ○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사업 추진 * 컨설팅 설명회(4.9), 간담회(6.27) 등 ○ 축산농가 HACCP 조사·평가 추진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HACCP 인증농가수(누적)	7,500개 이상	7,556개

* 축산 전업농(19,080개소) 대비 HACCP 인증 관리(신규 인증 및 반납 등)

3. 성과 및 한계

- 축산농가 HACCP 인증 관리 및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및 조사·평가 추진
 - '19년 축산농가 대상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236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이 중 220개 농가(93.2%)에서 HACCP 인증 획득
 - HACCP 인증 목표 누적 농가수인 7,500개를 상회하여 누적 총 7,556개 농가에 인증 완료('19.12.20. 기준)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HACCP 운용 수준 조사·평가('19. 4월~11월)를 실시하여 우수 업체 시상(14개소) 및 미흡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 * 도축장(포유류 84개소, 가금류 50개소), 집유장(59개소) 평가

4. 향후 추진계획

- 축산농가 HACCP 인증 관리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 및 조사·평가 추진
 - 축산농가 HACCP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2-3-③	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④	HACCP 양식장 안전성 검사 및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044-200-5622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박명래 사무관 T.044-200-5631)

1. 과제내용

☐ HACCP 양식장 및 인증제 관리 강화

- 양식장 유해물질 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
- 친환경 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으로 인증제 사후관리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7월)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1.13)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12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11.26)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인증제 관리강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개정 완료
○ 안전성 검사 확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개정 완료

3. 성과 및 한계

- ☐ HACCP 양식장에서 유해물질 검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HACCP 양식장 사후관리 강화
- ☐ 신규 및 갱신한 친환경 인증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제 사후관리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3-1-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류창희 사무관 T.043-719-2852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이선희 사무관 T.043-719-2452)

1. 과제내용

- ☐ 유통단계 이력추적관리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한 농·축·수산물 등 원재료 이력정보 연계 확대

* (농식품부) 농산물·축산물, (해수부) 수산물, (식약처) 가공식품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제조·유통·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가 연결되도록 시스템* 개선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tfod.go.kr) ○ 부처 간 이력정보 연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19.9~'20.2) - 이력추적 품목 확대 및 중간유통단계 식품이력추적 적용 등 시스템 개선 ○ 원재료(농·축·수산물) 이력관리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성화 - 가금산물, 조기, 굴 등 원재료 이력 정보 연계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개최(6, 11월) * 농식품부, 해수부, 식품안전정보원 등 - 축산물 이력정보 연계 개선*을 위한 부처 협의(12월) * 축산물이력시스템과 식품이력시스템 정보 연계방식 협의 등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이력관리 실무협의체 횟수	2회	2회

3. 성과 및 한계

☐ 범부처 원재료(농·축·수산물) 이력정보 연계 확대 및 협력 활성화

- 수입 돼지고기 원재료 이력정보 연계('19~) 및 가금산물, 조기, 굴 등 추가 연계를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6, 11월)

4. 향후 추진계획

☐ 원재료 이력정보 연계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체 지속 운영(반기별)

3-1-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②	이력추적 대상 품목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류창희 사무관 T.043-719-2852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이선희 사무관 T.043-719-2452
수입유통안전과 마정애 사무관 T.043-719-6257)

1. 과제내용

- ☐ 위해 심각성·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자용, 임신·수유부용 식품 등에 대한 단계적 이력추적관리 의무 확대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확대(연중) - 임신·수유부, 환자식 등 식품 제조·수입업소 의무 적용 확대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이력추적 등록 의무화 -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업체 교육 및 등록 안내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확대(연중) - 환자식·임산부 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관리 의무적용 확대(~12월) * 식품 유형별 '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업체 4개소 63개 품목 등록 완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7월) * '18년 연매출액 1억원 이상 건기 유통 전문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이력추적제도 및 등록절차 등 권역별 설명회(34회),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3,660개소) 및 콜센터 운영 (12,185건, 응대율 93.3%)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수(개소, 누계)	7,800	7,966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tfood.go.kr)상 등록업체 현황

3. 성과 및 한계

□ 이력추적 의무 품목(대상) 확대로 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 기여

○ 환자식·임산부 식품*,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 등록 의무화

* '16년 식품유형별 매출액이 50억원이상(1단계) 4개소 63개 품목 등록

* '18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20.6월 시행)

○ '19년도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수는 7,966개소로 당초 목표(7,800개소) 대비 102.1% 달성

4. 향후 추진계획

□ 식품이력추적관리 확대를 위한 산업체 지원 지속 추진

○ 산업체의 이력추적관리의 차질 없는 등록을 위하여 제도 설명회, 콜센터 운영 및 현장 기술지원 등 추진(연중)

3-1-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③	계란·닭·오리의 이력추적제 도입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도재규 사무관, T.044-201-2346)

1. 과제내용

- '20.1월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계란·닭고기·오리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적 제도이행 기반 조성

2.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가금 농장식별번호 부여 - 11,056곳 조사 → 7,408곳 등록 ○ 신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모바일신고, ERP전산연계 등 ○ 생산·유통단계 시범사업 확대 추진('18.11월~'19.12월) - 제도이행자 70% 시범사업 적용 - 이력표시 현장기반 지원사업 추진 ○ 축산물이력법 하위법령 개정(12월) 및 전면시행 준비('20.1.1.) -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 확대 (소,돼지→닭,오리,계란 포함)	○ 가금농장 기초정보 전산화 - 생산단계 이력제 도입 기반 정비 ○ 차세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모바일신고, Open-API연계기반, 대국민 이력조회서비스 제공 등 ○ 안정적 제도도입을 위해 단계적 시범사업 적용·확대 - 시범적용 목표 100% 달성 - 시범업체 245개에 이력표시장비 1,350개 설치·지원(22억) - (국민참여) 제도개선TF, 간담회 * 1차('18.11월)→2차('19.6월)→3차(10월) ○ 축산물이력법시행령('19.12.17), 시행규칙('19.12.31) 개정완료 ○ 전면 시행 대비 의무사업장 이행 준비 현장점검 등 - 도축장 53개소, 계란선별포장 120개소 등('19.12.16일 기준)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시범사업 참여율(%)	70	70.5

* '19년 시범사업 대상 확대를 통해 '20년 본사업 추진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생산·유통 단계적 시범사업 확대로 안정적 도입 기반 마련

- 가금농장 DB¹⁾, 이력번호 발급·표시 지원²⁾, 대국민 이력정보 서비스³⁾
 - 1) 농장식별번호 7408곳, 2) 이력표시 장비지원(245개소, 1,350개), 3) 신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으로 안정화

* (제도이행자) 농장 7,408곳, 도축장 53곳, 선별포장장 120곳 등 시행 준비

□ (한계) 유통이 복잡한 영세사업장의 이력관리 숙달 기간 불충분

- 소규모 포장처리업^{닭고기}(계열화 외) 및 수집판매업^{계란}의 이해 부족
 - (닭고기) 대리점 유통구조 복잡, (계란) 난각표시사항과 단일화 요구

* (애로사항) 거래내역서 이력번호 표시 곤란, 묶음번호 허용 확대 요구 등

4. 향후 추진계획

□ (사육·도축) 사육신고 준수율 향상, 이력번호 발급·표시 모니터링

- 사육현황·이동신고 준수 집중 교육·홍보로 제도인지도 향상
- 닭·오리고기, 가정용 계란에 대해 이력정보 관리 정확성 상시 점검
 - 가금농장 기초정보 현행화, 축종별 이력번호 발급·표시·연계 관리

* (제도안내) 생산자단체 설명회, 교육 등 (모니터링) 이력시스템 관제기능 도입

□ (유통단계) 전산신고 활성화, 판매장 이력표시 후 진열·판매 제도

- 전산신고 의무사업장(5인^{포장처리}, HACCP^{수집판매}) 대상 제도참여 홍보
 - 영세사업장 및 전통시장 등 취약지대 집중 관리로 제도 활성화 유도

3-1-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④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엄익환 사무관, T.044-200-5447)

1. 과제내용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대중성 품목을 선정하여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시범운영 추진('18下~'21)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시범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물품·인력 지원 및 홍보 추진('19.4~12)	○ 시범사업 참여 업체 굴(4), 굴비(10) 물품지원, 생산자 단체 이력표시(3명) 인력지원('19.12.11)
○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유통조사 실시('19.하반기)	○ 기업협슈퍼마켓(4개소) 판매처 대상 유통조사 실시('19.7.1~31)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19.1~'21)	○ 협의회 개최(2회 2.15, 6.13)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산물이력제인지도(%)	41.4	42.0

* 수산물이력제 설문조사(리커트방식, 성인남녀 1천명 대상)

3. 성과 및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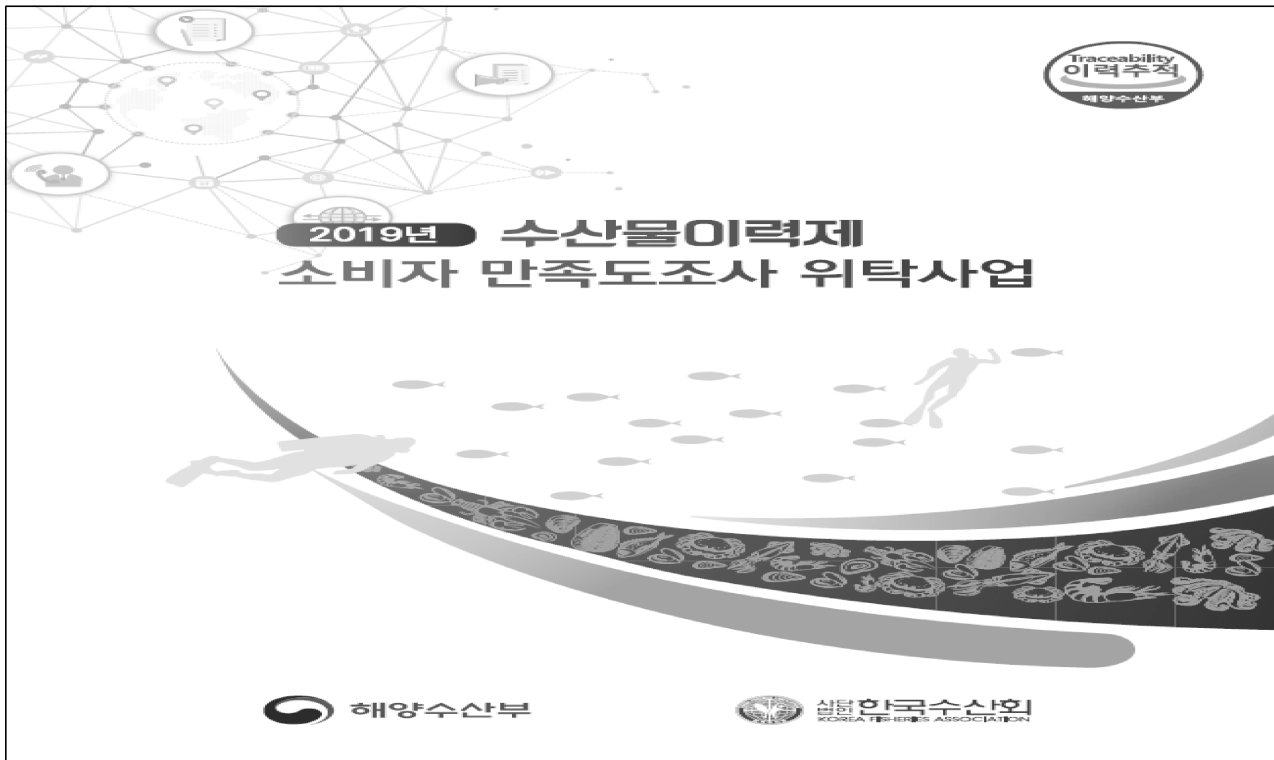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판매처 확대(대형→중대형) 를 위한 유통구조 조사 실시
- 시범사업 품목(생굴, 굴비) 주요 취급 생산자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4.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강화('20.1.~)

- 시범사업의무화 대상품목(봉지굴·굴비)에 대해 실제 이력상품 생산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한 업계 시행착오에 즉각 대응 체계 구축



2. 수산물이력제 인식태도

1) 수산물이력제 인지도

- '19년도 수산물이력제의 소비자 인지율은 42.1%로 나타남(100점 환산시 41.0점)
- 수산물이력제의 소비자 인지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 가운데 최근 3년간 40% 내에 수준을 보임

그림 Ⅲ-6. 수산물이력제 인지도(%)



(base: 전체)

- '기혼', 연령, 가구구성원, 소득, 학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1. 수산물이력제 인지도(%)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비인지 %	보통 %	인지 %	100점 환산
전체	(3,000)	9.3	48.7	14.2	24.7	3.1	57.9	14.2	27.9	41.0
결혼 여부										
미혼	(1069)	7.2	58.6	15.2	17.0	2.0	65.8	15.2	19.0	37.0
기혼	(1931)	10.4	43.2	13.6	29.0	3.8	53.6	13.6	32.8	43.1
성별										
남자	(1500)	10.7	47.4	11.9	26.3	3.7	58.1	11.9	30.0	41.3
여자	(1500)	7.9	49.9	16.5	23.2	2.5	57.8	16.5	25.7	40.7
연령										
20-29세	(598)	9.0	60.0	16.4	13.7	.8	69.1	16.4	14.5	34.3
30-39세	(704)	4.7	58.0	14.8	19.9	2.7	62.6	14.8	22.6	39.5
40-49세	(740)	9.9	44.7	13.2	27.8	4.3	54.6	13.2	32.2	43.0
50-69세	(958)	12.3	37.8	13.2	32.8	4.0	50.1	13.2	36.7	44.6
서울	(639)	8.8	51.5	13.3	23.3	3.1	60.3	13.3	26.4	40.1
지역										
인천/경기	(861)	9.2	50.9	12.8	23.7	3.5	60.0	12.8	27.2	40.4
부산/울산/경남	(479)	8.6	47.0	15.0	25.5	4.0	55.5	15.0	29.4	42.3
대구/경북	(310)	8.7	51.9	12.6	25.2	1.6	60.6	12.6	26.8	39.8
광주/전라	(291)	11.0	40.9	15.1	29.9	3.1	51.9	15.1	33.0	43.3
대전/충청	(302)	10.3	43.4	19.2	24.5	2.6	53.6	19.2	27.2	41.5
강원/제주	(118)	10.2	48.3	15.3	23.7	2.5	58.5	15.3	26.3	40.0

3-1-2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개선
①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전영신 사무관 T.043-719-2055)

1. 과제내용

- ☐ 위해식품 판매차단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시스템 설치 중소매장 사후관리 지원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위해식품 판매차단 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12월)	○ 중소매장에 위해식품 정보의 정상 수신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 완료(12월) - 관제시스템의 안정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12월) - 중소매장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원격 지원체계 구축(12월)
○ 중소매장 장애처리 콜센터 운영 및 현장 기술지원(상시)	○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발생 중소매장에 대한 콜센터 상담 및 기술지원(상시)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해식품판매차단 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	구축

3. 성과 및 한계

- 위해식품 판매차단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 매장의 시스템 운영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 시스템 설치 매장의 위해식품 정보 수신현황, 위해식품 정보 조치 결과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해결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위해식품판매차단 관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사후관리 지속
 -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장애발생 중소매장 등에 대한 신속한 기술 지원으로 시스템 운영률 제고 및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 콜센터 운영, 현장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예산확보(319백만원)

3-1-③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
①	농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민호 사무관 T.044-201-2221)

1. 과제내용

- ☐ 농산물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판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규추진
 - 공판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예산 확보(연중)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추진
- ☐ 공영도매시장·공판장 위생관리기준 운용
 - 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공판장 시설현대화사업 신규사업 추진	○ 신규사업 추진하였으나 미채택
○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	○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19년도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공판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규추진	신규사업추진	미달성

3. 성과 및 한계

- ☐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공통되는 위생관리기준 마련
 - 위생관리기준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관리가능
 - 도매시장 평가기준으로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 노력도 제고
- ☐ 공판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규사업 미채택
 - 사업내용이 유사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신규사업 채택 어려움

4. 향후 추진계획

- ☐ 매년 시행되는 도매시장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농산물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
- ☐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판장 시설현대화 추진 권고

3-1-③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
②	축산물 유통시설 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상훈 사무관 T.044-201-2338)

1. 과제내용

- ☐ 오염물과 깨진 계란이 선별·제거되어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체(EPC)' 의무 유통제*를 도입

* '19년부터 가정용 계란에 우선 시행, 조리·가공용은 EPC 인프라 확충 등 도입여건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

- EPC 유통 의무화 시행에 대비, 농식품부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신규 추진('18 : 신축 2개소, 증축 2개소) 및 운영자금* 지원

* 융자 40억원, 이자율 2.5~3.0% 지원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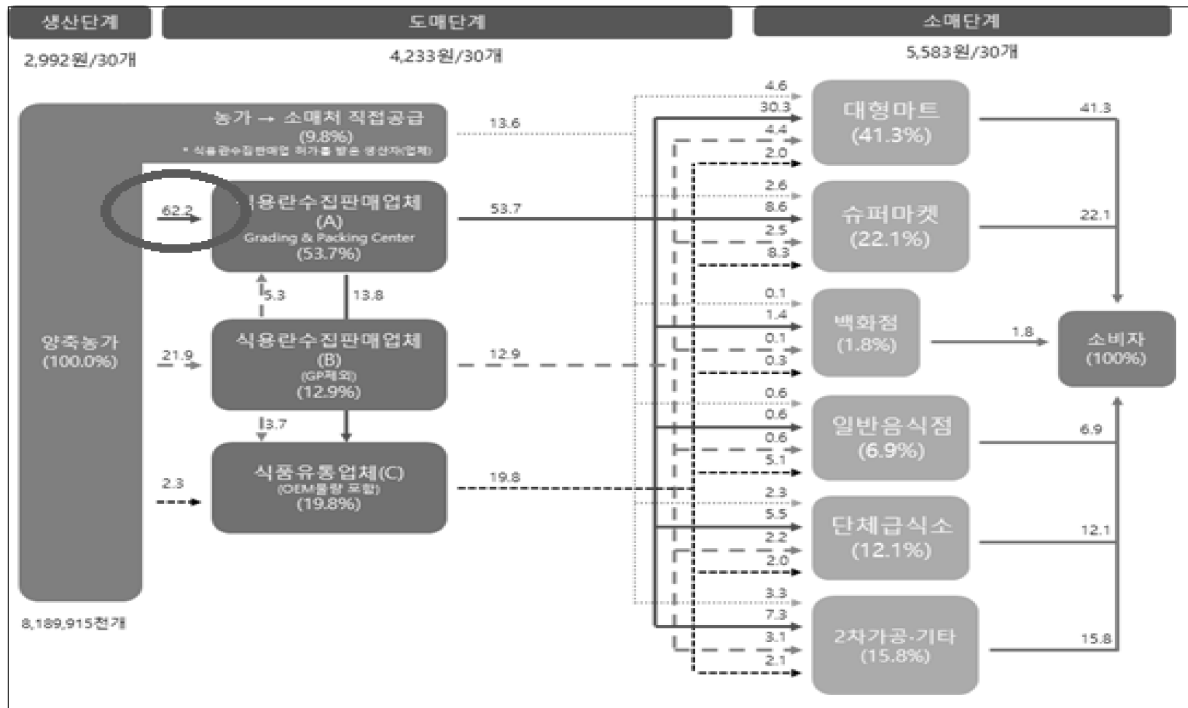
추진계획	추진실적
○ 정부지원 공동 EPC 시설의 조기 확충 추진 * 정부지원 확대를 위해 기재부 협의 추진 및 사업 관리 강화 ○ EPC를 이용하지 않는 유통 사각지대 해소 검토 * 농가 실태 파악 및 예외적용 확대방안 검토	○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관리 강화 - '19년 사업자 조기선정('18.10, '19.8) 및 추진상황 점검 강화 * 점검회의(2회), 현장점검(1회), 서면보고(5회) 등 ○ 농가 선별·포장 실태조사('19.2, 10월) ○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 구성·운영('19.3~) - 예외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계란 선별·포장 유통실적(%)	60.0	62.2

* 자료 : 2019년 축산물 유통실태(축산물품질평가원)

<참고 : 2019년 계란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주1) 유통단계별 가격은 해당 유통단계의 경로별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값

주2) 계란 생산량은 통계청의 식용란 1일 생산량과 해당기간의 생산일수를 곱한 자료임

3. 성과 및 한계

□ AI 방역 및 소규모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선별·포장 유통제도 개선

○ T/F 운영('19.3~8월) 결과에 따라 농장내 선별포장업 허가 제한 및 예외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식약처 협조)

* ① 유기인증과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② 동물복지인증과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농가의 소비자 직거래 계란, ③ 산란계 1만수 이하 사육농가로서 생산되는 계란의 위생적인 처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시행을 위한 허가시설이 아직은 부족

* 선별포장업체 현황('19.12월 기준) : 145개소(평년 계란생산량의 58.6% 수준)

** 평년 계란생산량(4,000만개/일) 중 가정용 66.1%, 조리용 19.4%, 가공용 14.5%

4. 향후 추진계획

□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계란유통상인, 중·대규모농가 등의 조속한 시설허가와 소규모농가 - 거래상인간 위탁처리시설 및 비용분담 등 결정 유도

3-1-4	잔류물질 검사 강화
①	농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남궁종환 사무관 T.043-719-3253)

1. 과제내용

- ☐ 농산물 유통 길목인 전국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대 설치하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20년)

* 농산물 취급 공영도매시장 32개소 중 17개소에 현장검사소 설치·운영 중

- ☐ 약령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 사용불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현장검사소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신규 설치 지원(~12월) -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수거·검사(연중) -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설치 예산 등 지원 방안 마련 ○ 식품 사용불가 농산물 안전관리 - 주요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대상 지도·점검(4, 10월) -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검사(4, 10월)	○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관리 및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방안 마련 - 현장검사소 신규 설치(7개소)를 위한 예산·인력 지원(~10월, 49억원 52명) -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27,092건 수거·검사(연중) -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를 위한 '20년 예산 확보(12월, 2개소 14억원) ○ 식품 사용불가 농산물 안전관리 - 8개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372개소 지도·점검(2회/4, 10월) - 구기자, 오미자 등 식약공용 농산물 772건 수거·검사(2회/4, 10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품판매업체 지도·점검(회)	2	2

3. 성과 및 한계

- ☐ 농산물 유통 길목인 공영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확대 설치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차단 기반 구축
 - (성과) 안전검사 대상을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까지 확대
 - (한계) 지자체 재원 및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현장검사소 설치확대 한계
- ☐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농산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식품 사용불가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한 농산물 안전인식 확산

4. 향후 추진계획

- ☐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를 통한 유통 전 농산물 안전관리 지속 추진
- ☐ 농산물 관리 취약 분야 지속 발굴을 통한 사각지대 관리 강화

3-1-④	잔류물질 검사 강화
②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김현정 사무관, T. 044-201-2978)

1. 과제내용

☐ 축산농장 등 생산단계에서 잔류물질 검사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제도(NRP) 도입 추진(식약처 협업) - 원유(原乳) 잔류물질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시범조사사업 추진 ○ 농가, 도축장 식육, 식용란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1월~12월) * 잔류물질 130천건, 미생물 103천건	○ 원유 국가 잔류물질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예산 확보 - 2차 시범조사사업 추진(~'20.3) * 잔류물질 검사 300건 검사 완료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19.12.16 제정, ‘20.7.1 시행) * 시·도 검사기관의 원활한 검사 추진을 위한 ‘20년 예산 52억 확보 ○ 식육, 식용란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추진 * 잔류물질 143천건, 미생물 90천건(~'19. 3분기)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검사건수 목표 대비 완수율(%)	100	100

* 잔류물질 및 미생물 연간 검사건수 목표대비 완수율

3. 성과 및 한계

- ☐ 원유의 국가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NRP) 도입을 위한 시범조사사업 추진 및 제도 마련 완료
 -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범조사사업 추진(~'20.3)
 - * 300건 잔류물질 검사 완료
 - '20년부터 원유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19.12.16. 제정, '20.7.1. 시행)
 -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공동 고시)
- ☐ '19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 시범조사 완료 이후 제도가 시행되는 '20년 7월부터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을 추진
 -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는 체계 구축
 - * 검사계획(안) : 연간 300건, 항균제·농약 등 70여 검사 항목 설정
 - * 검사예산(52억 확보) : 검사장비 구입비, 인건비 등
- ☐ '20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시행('20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김돈환 사무관 T. 043-719-3245
이영희 사무관 T. 043-719-3259)

1. 과제내용

- ☐ 원유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 검사
 - 현행 민간 집유장에서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에 추가하여 정부차원의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 도입 운영
- ☐ 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확대 실시
 - 생산단계(농가, 도축장 식육, 식용란) 및 유통단계(계란, 닭고기 등)에서 이중 점검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성 확보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원유 잔류물질 조사 세부계획 수립·시행(3월) ○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제도화를 위한 규정 마련(12월) ○ 축산물 생산·유통단계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계획 등 수립·시행 - '19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2월) - 전통시장·인터넷 등 유통 취약지대	○ '19년 원유 잔류물질 시범조사 계획 수립·시행(3월) - 원유 잔류물질 오염실태 조사 및 국가잔류물질검사 도입을 위한 시범조사 실시(6월~) * 동물용의약품 등 71항목/301건 검사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12월) ○ 축산물 생산·유통단계 검사계획 등 수립·시행(2, 8월) - '19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2월, 농식품부, 지자체) - 유통단계 계란 잔류물질 수거·

축산물 수거·검사계획 수립(8월)	검사 계획 수립·통보(8월) * 계란 1,947건, 닭고기 180건, 알가공품 58건(살충제검사 모두 적합)
--------------------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원유 잔류물질 조사	300건	301건
○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	계획수립운영	계획수립운영

3. 성과 및 한계

☐ 국가 차원의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 제도·도입으로 안전한 유제품 공급 기반 마련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12월)

☐ 생산·유통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 축산물 유통·판매 차단 및 사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식육·식용란 등 생산단계 안전성검사 및 계란 살충제 수거·검사 등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불안 감소

○ 특히, 유통계란 살충제 검사 부적합을 감소는 계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 핵심적으로 기여

* 살충제 부적합 : ('17) 1.5% → ('18) 0.2% → ('19) 0%

4. 향후 추진계획

☐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를 통한 유통 전 축산물 안전관리 지속 추진

3-1-4	잔류물질 검사 강화
③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서기관 T.043-719-3241)

1. 과제내용

- ☐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검사(NRP)를 통해 위해 우려 수산물 유통 차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산물 잔류물질검사(NRP) 추진 - 국가잔류물질검사 계획 수립(3월) 및 잔류조사 추진(5~10월)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고시 제정(11월)	○ 유통 수산물 잔류물질 조사(5월~ '20.2월) - 다소비, 부적합 이력 등 20품목에 대해 다처방 동물용의약품 등 34항목 검사 (567건 검사완료, 진행중) *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업기간을 '20.2월까지로 설정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고시 제정(11월) * 조사대상 품목, 유해물질, 수거 및 분석방법, 결과검증·평가 등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산물 잔류조사 건수	600건	567 (‘20.2월 완료 예정)

3. 성과 및 한계

- ☐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실태조사 세부 규정 마련
 -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고시 제정(11월)

4. 향후 추진계획

- ☐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잔류물질 실태조사(계속)

3-1-5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
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기반 유통 검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전영신 사무관 T. 043-719-2055)

1. 과제내용

-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 통계활용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 식품 등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통합망 자료를 활용, 안전관리 영향 요인을 고려한 식품유형 수거·검사 실시(연중) ○ 식품 소비트렌드 반영 유통단계 식품 수거·검사 강화(연중)	○ 특별관리 식품유형 32개를 지정하여 집중 수거검사(22,803건 검사, 120건 부적합) ○ 온라인 인기검색어 제품(분기별),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 인기 제품 검사 확대 * 가정간편식(연중), 하절기 다소비(6월), 가을행락철(9월), 김장철(10월) 등 시기별·테마별 지도점검 시 수거·검사 병행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건)	62,200	71,644

* '19.12.31일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수거검사 실적 추출 자료를 근거로 산정

3. 성과 및 한계

- ☐ 국내 유통 중인 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 등 안전관리로 소비자 피해 예방
- 밀키트, 편의점 도시락 등 식품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수거·검사 항목 선정 등 효율적인 수거·검사

4. 향후 추진계획

- ☐ 통합망 통계 활용 및 최근 소비트렌드를 변화를 반영한 선택과 집종의 수거·검사 강화

3-1-⑤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
②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근절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변상훈 사무관 T.043-719-190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조성훈 사무관 T. 043-719-2054)

1. 과제내용

- ☐ 온라인 유행 식품 등 소비자 관심제품에 대한 기획조사 및 의학적 효능 광고 등에 대한 검증·공개로 소비자 피해 예방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온라인 소비자 관심제품 기획조사 및 광고내용 검증·공개 - 온라인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한 관리대상 테마 선정(3월) - 소비자 관심제품 온라인 기획점검 (연중) - 소비자 신고 가이드 마련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3월) - 식의약 광고 민간 검증단 구성·운영(상시)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식품 등 수거검사(연중)	○ 온라인 소비자 관심제품 기획조사 및 광고내용 검증·공개 - 설문결과 분석, 소비자단체 협의 통한 기획단속 대상 선정(2월)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대상 : 탈모, 다이어트, 미세먼지, 여성건강, 취약계층 - 노니, 수소수, 새싹보리분말 등 소비자 관심제품 기획점검(15회) - 처 홈페이지 內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개설, 가이드라인 제공(3월) * 신고창구 통한 1,158건 접수·처리 - 의사·교수·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43명으로 광고 검증단 구성·운영 * 다이어트·건강증진·여성안심·미세먼지 4개 분과로 위촉 ○ 온라인 쇼핑몰 판매식품 등 소비자 관심식품 986건 수거검사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온라인 불법제품 기획조사	12	15

3. 성과 및 한계

- 새싹보리 분말, 노니, 다이어트 음료 등 국민생활 점점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점검으로 안심 구매환경 조성

* 적발건수 : ('16)57,577건→ ('17)81,233건→ ('18)97,276건→ ('19)131,878건

- 국민이 궁금해 하는 식품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객관적 검증결과*를 공개, 소비자의 궁금증 해소 및 신뢰도 제고

* 수소수, 새싹보리분말, 다이어트 커피, 키성장 식품의 의학적 근거 부족

- 온라인 관리 대상은 무한히 증가하나, 관리 인력과 자원은 한정적으로 근원적 해결에 한계

* 해외서버 활용, 적발 후 사이트 변경 등 온라인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4. 향후 추진계획

- SNS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등을 지속 유포하는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및 해당업체 중점 관리

* 불법행위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는 직접 조사 후 고발 조치

- 온라인에서 새롭게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 등은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검증결과 공개(지속)

3-2-①	수입 전(前) 관리
①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정영애 사무관 T. 043-719-6210)

1. 과제내용

- ☐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한 위해 우려 수입식품 사전 차단
 -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 우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수입 전단계 안전관리 강화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현지실사 계획 수립(1월) ○ 위해우려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연중) ○ 위생·안전이슈 품목 집중점검(연중) ○ 현지실사 방해·기피·무응답 업소 전수점검(연중) ○ 인체 위해 발생 이물 검출 업소 관리 강화(연중)	○ '19년 현지실사 계획 수립(1월) ○ 통관단계 부적합 업소 등 해외 제조업소 458개소* 현지실사(2~12월) * 식품 286, 축산물 86, 수산물 86 ○ 위생·안전 이슈가 제기된 수입김치 제조업소(42개소) 및 인위적 물주입 부적합 업소(11개소) 점검 ○ 현지실사 방해·기피·무응답 업소 41개소 전수점검 ○ 인체 위해 발생 이물 검출 업소 31개소 관리 강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3.65	5.05

*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건수 / 전체 수입식품 건수) × 100

3. 성과 및 한계

- 우수수입업소 및 현지실사 확대 등을 통해 수입 전 안전이 담보된 제품의 수입률이 지속 증가

*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 ('18) 3.31 → ('19) 5.05

- 현지실사 확대를 통해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위해 우려업소의 수입중단 등 조치로 위해식품의 국내반입 차단

* 현지실사 확대 : ('18) 407개소 → ('19) 458개소

* 현지실사 결과 수입중단 등 조치업소 : ('18) 74개소 → ('19) 66개소

- 부정물질 사용, 위해우려 이물 검출 등 부적합 이력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실사 강화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위해식품 수입 원천차단을 위한 부적합이력 업체 현지실사 강화

- 식품사용 금지물질 등 부정물질 검출, 전년도 통관단계 2회 이상 부적합*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중점관리(연중)

* 식품에 사용 금지 원료, 중금속·식중독균 검출 및 보존료 기준초과 등

-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 상습적·반복적 부적합, 인체위해 우려 통관단계 이물검출 업소 등 실사 강화(연중)

* 유통 수거·검사 부적합, 유리·금속검출 등 통관 부적합 제품 등

3-2-①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
②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담당자 :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기용기 사무관 T.043-719-6256)

1. 과제내용

- ☐ 현지실사 방해·기피업체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업체 외에도 현지실사를 방해·기피·무응답하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 마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현지실사를 방해·기피·무응답하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 법적 근거 마련(12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공포(4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개정(12월)	개정(4월)

3. 성과 및 한계

- ☐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 제조업체·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법적근거 마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완료)
 - * 김명연 의원 발의('19.1월), 국회 심의·의결('19.3월), 개정·공포('19.4월)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사항 이해관계자 설명회 개최
 - 주한 재외공관 대상 설명회(2회) 및 민원설명회 개최(2회)

4. 향후 추진계획

- ☐ 현지실사 방해·기피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하여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3-2-①	수입 전(前) 관리
③	수입위생평가 확대 및 전문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강성필 사무관 T. 043-719-6202)

1. 과제내용

- ☐ 수입 전 수출국 위생체계 평가를 통하여 국가단위의 안전성 확보
- 수입위생평가 전문성 제고 및 평가대상 확대를 통한 철저한 수입 전 안전관리 실시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사전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 제정(6월)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6월)
○ 수입위생평가 연구모임 신설·운영 (1월)	○ 수입위생평가 연구회 신설 및 내·외부 전문가 세미나 등 12회 운영(1~12월)
○ 축산물가공품 동등성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월)	○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허용여부 판단을 위한 수입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 연구용역 완료(9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축산물 국가동등성 평가 기준 개발	가공품 기준 개발	가공품 기준 개발

3. 성과 및 한계

☐ 수입 전 수출국 위생평가를 통한 국가단위의 사전 안전성 확보

- 수입 전 국가·품목별 안전성 확인 후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수입 축산물에 대한 동등성 확보

* 51개국 105건 수입위생평가 진행중

- 수출국의 제도, 시스템, 기준 등이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수준과 동등함을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서 및 평가기준 개정

-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는 식품(어류머리 등)을 특별위생 관리식품으로 지정, 수입위생평가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6월)

☐ 수입위생평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 위생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수입위생평가연구회’ 운영(12회)

- 축산물가공품의 수입허용여부 판단을 위한 수입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 연구용역 완료(9월)

☐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16.2월) 이전 수입이력이 있는 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 발행 위생증명서 첨부 의무화

4. 향후 추진계획

☐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의무화로 수입식품 사전 안전 관리 강화(연중)

- 유형별 표준 수출위생증명 서식 개발, 수입량이 높은 국가 순으로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제외국 공관 설명회 개최

3-2-2	통관 단계 관리
①	통관검사 및 감시 체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장화중 서기관 T.043-719-2210
수입검사관리과 장현철 사무관 T.043-719-2220
수입검사관리과 가정훈 사무관 T.043-719-2230)

1. 과제내용

- ☐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강화
- 국가·품목·유해물질 검출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 및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 선정
-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을 무작위표본검사에 확대적용 및 개선 추진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반기별 계획 수립	○ 최초 수입식품 및 무작위표본검사 중점검사항목 선정(6, 12월)
○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OPERA)' 활용	○ 최근 3년간('16~'18) 수입현황 분석, 주요 기준항목(국가·품목 중심) 설정, 부적합현황을 가중치 두어 선정
○ 지방청 수입식품담당공무원 대상 시스템 운용 재교육(하반기)	○ 지방청 수입식품 담당공무원 대상 시스템 운용 재교육 실시(6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입식품등 수입검사 부적합률(%)	0.81	0.80

*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상의 수입검사 실적을 근거로 산정

: 부적합 건수(1,158건) / 전체 수입검사 건수(143,859건) × 100

3. 성과 및 한계

□ 부적합 이력 및 불성실 영업자 등에 대한 무작위검사 강화

- 국가·품목·유해물질 검출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

□ 최초수입식품의 중점검사항목 선정(12월)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중점검사항목 선정 · 시행(6월, 12월)

4. 향후 추진계획

□ 수입식품(식품등*·축산물·수산물 등)의 일관성 있는 무작위 검사 운영을 위해 연 2회(12월, 6월) 무작위 표본검사 계획 수립·운영

*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 등

□ 기존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OPERA)'을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19.12 구축, '20.3 시행예정)으로 변경 적용

*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 운영('20.3~)

관세청

(담당자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윤지혜 사무관, T.042-481-3243)

1. 과제내용

- ☐ 식약처 제공 위해식품 정보 보완을 통한 위험관리 고도화
 -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위해식품정보 보완 및 수입식품안전법 위반내역 입수를 통해 우범업체·우범화물 등 검사선별에 활용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위해식품 정보 보완요소 도출 및 적발실적 피드백	○ 정보가 미비한 항목(키워드 부족, 제품명 오류 등) 개선 요청 - 필수정보 등이 누락된 475개 품목 정제요청 공문 송부('19.5.10.) - 추가정보 요청 품목에 대한 식약처 정비내역* 확인('19.11.11.) * 427개 품목 추가정보 입수, 추가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48개 품목은 삭제예정
○ 「식품정보활용시스템」 내 '사업자 등록번호' 항목 추가방안 검토	○ 수입식품안전법 위반업체 활용을 위해 사업자번호 반영 요청 - 식약처에서 인허가번호에 대응되는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입수를 추진(국세청)하였으나 입수 불가
○ 식약처 직원 대상 품목분류 교육 지원	○ 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에서 발행('19.11)한 '펼쳐보는 관세율표 용어사전*' 송부** * 약 9,600개 관세율표 용어, 사진, 분류기준, 타부처 관련 법령(164개) 등 수록 ** 식약처 관련부서(수입유통안전과, 의료

추진계획	추진실적
○ 관세청-식약처 간 전산시스템을 통한 협업분야 확대(식품→의약품)	기기관리과, 의약품관리과) 공유로 해당 물품 품목분류 지원 ○ 추가 전산연계로 위해의약품 정보 실시간 공유 및 체계적 관리('19.11)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 및 한계

□ (성과) 기존에 공문으로 제공되던 위해의약품 정보를 시스템 추가 연계로 실시간 공유하여 세관 통관단계 물품검사 등에 활용

○ 해외직구로 반입될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협업모델*을 의약품까지 확대하여 불법 반입에 대한 기관 간 통합관리 강화

* (기존) 공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정보를 일방적으로 송부(식약처→관세청) → (협업모델) 자료정제·모니터링 등 양 기관 간 상호 정보교환으로 효율성 제고

□ (한계) 위반내역 및 우범업체 정보 등 양 기관에서 보유 중인 위험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활용을 위한 시스템 부재

※ 식약처에서 수입식품안전법 위반업체 제재내역을 '인허가번호'로 관리함에 따라 인허가번호에 대응되는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보유) 수집을 추진하였으나 입수 불가

4.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청-식약처 간 위험정보의 효율적인 공유·활용 방안 마련

○ 「식품정보활용시스템」 내 위반업체 정보*와 관세청 보유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Key값 확인 등 정보 활용을 위한 방안 검토

○ 식의약품의 불법반입 후 국내유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양 기관이 보유한 위험정보 상호 공유를 통한 업무협력 강화

3-2-②	통관 단계 관리
②	보세구역 등 재고조사 강화

(담당자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채정균 사무관, T.042-481-7825)

1. 과제내용

- ☐ 보세구역에 대한 각종 정보, 순찰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보세구역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 보세구역 법규준수도, 화물특성, 위험동향 등을 종합·분석하여 농산물 등 고위험 보세구역·화물에 대한 집중관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위험도 기반 통합 보세구역 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 보세구역 관련 업무정보와 순찰결과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세구역 위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19.12.17부터)
○ 농산물 보관창고 등 고위험 보세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세관별로 현장실정에 맞게 중점관리물품을 등록하고 보세구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현장점검(상시) - 농수산물 35개 품목을 고위험화물로 중점관리

-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보세구역 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세관별 통관환경에 맞춰 위험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고위험 화물 집중관리 가능
 - 보세구역 관련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순찰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밀착형 위험관리가 가능
 - 세관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물품등록과 보세구역 평가 기준을 조정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위험관리 업무수행 가능
- (한계) 시스템 도입 초기로서 정보축적 등 필요
 - 양질의 위험분석을 위해서는 보세구역 우범정보의 축적,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스템의 활발한 사용이 필요함

4. 향후 추진계획

- 보세구역 위험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장려
 - 위험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매뉴얼 제공('20년 1분기)
 - 우수활용사례 발굴 및 직원교육 실시(수시)

3-2-②	통관 단계 강화
③	검사명령제 대상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장화중 서기관 T.043-719-2210)

1. 과제내용

- ☐ 위해우려 식품 등에 대한 수입단계 검사명령제를 확대 적용하여, 안전한 수입식품 공급 및 영업자 책임의식 고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검사명령 확대 시행(3, 6, 9, 11월) -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규 검사명령 대상으로 선정(분기별) - 수입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제외국 통보 ○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9월)	○ 검사명령 대상품목 확대(3, 5, 7, 11월) - 능이버섯(방사능), 레몬밤 침출차(잔류농약 6종), 쿨란트로(잔류농약 5종), 보리순분말(이물) 4품목 신규 지정 * ('18년) 11품목 → ('19년) 14품목 ** 기간 만료로 1품목(복어가공품) 종료 - 수입업체 및 대행업체 간담회(11월), 우편·PCRM 발송, 홈페이지 공지 및 수출국 서면 통보(4회) ○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9월) * 검사명령 대상 지정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검사명령 대상 품목 추가	4	4

3. 성과 및 한계

- 부적합이 반복되는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 책임강화
 - 위해우려 수입식품은 영업자가 사전에 검사하고, 적합한 식품만 수입하도록 하는 검사명령 확대('19년 4건 추가지정)
 - * 1)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능이버섯(방사능), 2) 레몬밤 100%로 제조한 침출차(메토밀 등 농약 6종), 3) 태국·베트남 쿨란트로(클로르피리포스 등 농약 5종), 4) 보리순분말(금속성이물)
- 검사명령 신규지정에 따른 영업자 혼란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
 - (이해관계인) 수입업체 및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우편 및 PCRM(팩스, 이메일 등) 발송, 홈페이지 공지 등 사전 홍보 실시(4회)
 - * 보리순분말 검사명령 시행관련, 영업자 대상 간담회 실시(11월)
 - (수출국) 검사명령 대상제품 수출국에 검사명령 실시 사전 알림(4회)

4. 향후 추진계획

- 부적합이 반복되는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확대로 위해우려 수입식품 사전 차단(매년 4건 추가지정)

3-2-3	수입 후(後) 관리
①	거래내역 신고 강화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 T.042-481-7851)

1. 과제내용

☐ 수입식품 유통이력신고 점검 강화

-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시기별로 집중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점검 실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입식품의 유통이력신고 실태 집중점검 실시	○ 유통이력 현장 집중점검(점검업체 7,605곳) 등을 통해 유통이력 신고위반 및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단속 실시('19) - 유통이력 신고위반 적발 89건, (과태료 7,050만원 부과) - 원산지위반 적발 34건(2,936백만원)
○ 유통이력신고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 유통이력신고 정확성 확보를 위해 사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감독 강화 - 사후점검 시스템을 통한 신고내역 검증 17,574건('19)
○ 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유통이력제도 설명 홍보물품 및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1·7월) - 리플릿 4만5천부, 홍보물품 2,000개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없음

3. 성과 및 한계

- 유통단계 수입식품 관리강화를 위해 유통이력 사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내역 정확도 검증강화를 통해 유통이력신고·관리 강화
 - 시기별 원산비표시 위반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 집중점검
 - 유통이력신고 실태 집중점검(설명절, 가정의 달, 여름휴가철, 추석절, 김장철)을 통해 2687업체 점검, 57건 적발(과태료 2,950만원 부과)
 -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 등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관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 실시('19.9.6~10.30)
 - 사후점검 시스템을 통한 신고내역 검증 강화('19년, 17,574건 점검)

4. 향후 추진계획

-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에서 국내산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주무부처(농식품부, 해수부)로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
 - 수산물의 경우 '19.10월 해수부로 업무 이관 예정(협의완료)이며, 농산물은 농식품부로 '21년말 이관 예정(협의중)

3-2-③	수입 후(後) 관리
②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마정애 사무관 T.043-719-6257)

1. 과제내용

- ☐ 유통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
 -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검사 추진

2. 추진계획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입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유통 식품 수거 검사 강화(연중) ○ 잠재적인 이슈관리를 위한 수거 검사(연중)	○ 국민다소비식품, 장기간 서류통관, 부적합 이력,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품목 등 수거·검사(6,863건) ○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제품 수거·검사(412건)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유통 수입식품 수거 검사 건수(건)	5,000	7,275

* '19.12.31일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수거검사 실적 추출 자료

3. 성과 및 한계

- ☐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 장기간 서류통관 제품, 부적합 이력 제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식품 유통 차단

* 설·추석 명절(1, 8월), 가정의 달(5월), 김장철(11월), 성탄절(12월) 성수식품 등

- 검사 부적합 제품 및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제품 등 수거·검사 및 사회적 이슈품목 선제적 안전관리로 국민 불안 해소
- 농약성분(제조체: 글리포세이트) 함유 우려 수입맥주 신속 수거·검사 및 결과 발표로 SNS등을 통해 확산되는 위해우려 조기 차단
 - * 수입맥주 안전성 우려 제기 → 유통제품 수거검사 → 검사결과 발표(총 10일 소요)
- 조개젓 A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 발생 관련 중국산 제품 전수조사
 - * 중국산 조개젓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39건 검사, 4건 검출(회수조치))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관심제품 수거·검사 실시
 - * 단백질 보충제(65건), 노니분말(12건)

4. 향후 추진계획

-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 및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사회적 이슈제품 등의 수거·검사 지속 추진(연중)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등 기획 수거·검사 확대 추진(연중)

3-2-③	수입 후(後) 관리
③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마정애 사무관 T.043-719-6257
수입유통안전과 박진아 사무관 T.043-719-6256)

1. 과제내용

- ☐ 인터넷 불법 판매행위, 무신고 수입 행위, 수입신고 오류행위 등 위반 사례별 중점 지도·점검으로 재발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선제적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연중)	○ 선제적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 다빈도 행정처분 업체, 최근 3년간 미점검 수입실적 상위업체 등 1,006개소
○ 위해정보 등 이슈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도 점검 추진(수시)	○ 위해정보 등에 따른 특별 지도·점검(40개소)
○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특별점검(연중)	○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특별점검 * 개인 휴대반입품 판매 도·소매업체, 고의·상습 위반업체 등 1,561개소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점검업소 수(개소)	727	1,006

* 전년도 대상업체(654개소) + 이슈관리 필요업체 등(73개소)

3. 성과 및 한계

- ☐ 유통단계별 수입 판매업소 및 위해정보 등 이슈 발생에 따른 신속 지도점검으로 부적합 식품 유통차단 및 국민 안심 확보
 - 최근 3년간 「수입식품법」 위반(행정처분 이력) 업체 및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수입실적 상위 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 * 지도·점검 : ('18년) 782개소/10개소 부적합 → ('19년) 1,006개소/23개소 부적합
 - ** 업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 무신고 기구·용기(고무장갑, 여과재 등), 마스크 등 통관단계에서 관리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수입업소 지도·점검 강화(40개소)
- ☐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특별 점검(12회, 누계 7,774개소)을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 상시점검 8회, 정부합동점검(식약처·농림부·지자체 등) 4회

4. 향후 추진계획

- ☐ 유통단계별 수입판매업소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연중)
- ☐ 위해정보 등 이슈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도 점검 추진(수시)
- ☐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강화(연중)

3-2-④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
①	보따리상 등 휴대반입식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박진아 사무관 T.043-719-6256)

1. 과제내용

- ☐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 실시로 유해 반입식품 차단
 - 중국, 일본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항구별로 휴대반입식품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통해 위해 우려 차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를 통한 안전관리(주 2회, 1,300건)	○ 중국 및 일본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4개 항구별(인천, 평택, 군산, 부산)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 실시(주 2회, 1,354건)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화객선 휴대반입식품 수거 검사 건수(건)	1,300	1,354

3. 성과 및 한계

- ☐ 휴대반입식품에 대한 주기적 구매·검사*를 통한 안전 확보

*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중국 및 일본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4개 항구별(인천, 평택, 군산, 부산) 주 2회 구매검사('19년 1,300건 계획)

- 휴대반입식품 1,354건* 구매·검사, 부적합 제품 3개월 간 통관금지 및 재검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통관금지 해제(반입 허용)

* 인천항(458), 평택항(464), 군산항(372), 부산항(60)

* 연도별 검사실적(부적합 건수): ('18년) 1,168건(15) → ('19년) 1,354건(11)

4. 향후 추진계획

- 보따리상의 휴대반입식품 등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의 지속 안전관리로 식품 안전 확보 및 국민 안심 제고

관 세 청

(담당자 : 관세청 특수통관과 조광선 사무관, T.042-481-7831)

1. 과제내용

-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
 - 농축수산물 반입 기준 엄격 적용 등 유해식품 반입 방지
 - 식품검사 부적합 물품 반입 차단 및 우범여행자 집중 관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농축수산물 과다 반입 방지를 위한 통관관리 강화	○ 1인당 반입 총량(40Kg)·품목별 (5Kg) 기준 엄격 적용 및 초과 시 전량 유치 등
○ 휴대 반입 식품 안전성 검사 합격 여부 확인 철저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 식약처 식품 부적합 통보 물품 반입금지 조치
○ 우범여행자 선별 및 휴대식품 빈번 반입 지역 여행자 휴대품 전량 X-ray검사 실시 등	○ 사전선별 우범여행자 집중검사 및 중국 위해, 연태 등 유해식품 반입지역 여행자 휴대품 전량 X-ray검사 시행

-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 없음

3. 성과 및 한계

☐ 보따리상 농산물 면세범위 축소시행 정착 및 통관관리 강화

- 1인당 농산물 면세범위 축소('18.1, 총량 50Kg → 40kg) 엄격 적용 및 검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

년도	17년	18년	'19년
보따리상* 입국횟수(A)	424,436	445,790	498,296
농산물 반입실적(톤)(B)**	20,867	18,722	19,546
1회 평균 반입중량 (kg, 추정)(B/A)	49.1	41.9	39.2

* 입국횟수 1개월 내 3회 이상인 여행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 보따리상 휴대 반입 물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성 검사 합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식품 부적합 통보 제품 반입금지 실시

* '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 총 897건

☐ 유해 식품 반입 차단을 위해 휴대품 검사 강화

- 사전 선별 우범자 철저 검사 및 중국 위해, 연태 등 유해 식품 빈번 반입 지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전량 X-ray 검사 실시

4. 향후 추진계획

☐ 보따리상 농산물 통관관리 강화 지속 시행

- 면세범위 엄격 적용을 통한 농산물 과다 반입 방지

☐ 보따리상 휴대반입 물품 검사 및 농산물 식품안전관리 강화

- 법규준수도 낮은 보따리상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및 부적합 식품에 대한 국내 유입 철저 차단

3-2-4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
②	해외직구제품 등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박진아 사무관 T.043-719-6256)

1. 과제내용

- ☐ 인터넷 등의 발달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소비·영유아식품 등에 대한 구매·검사를 통해 유해우려 해외직구 식품의 통관차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구매·검사 및 관리 강화(1,300건) ○ ‘해외직구 구매 주의’ 대국민 홍보(연중) ○ 관세청, 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연중)	○ 다이어트 표방제품 등 구매·검사 (1,300건), 통관금지 식품 재평가 실시(127건) ○ 팟캐스트, 웹다큐, 국정만화 등 ‘해외직구 구매 주의’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연중) ○ 관세청(인천세관)과 협업검사*를 통한 위해 우려식품 적발 및 소비자원과 부작용 사례 수집 관련 협력 협의 * 선별검사 28,561건 중 7,545건 차단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건)	1,300	1,300

3. 성과 및 한계

☐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유입차단

- 해외 위해정보 및 구매·검사 결과에 따라 위해우려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제품의 국내 통관금지 요청(식약처→관세청)

4. 향후 추진계획

☐ 관세청의 통관정보 등을 활용한 기획 수거·검사 확대('20.1월~)

3-2-4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
③	자가사용 위장 수입식품

(담당자 :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 윤주현, T.042-481-7835)

1. 과제내용

☐ 해외직구 식품 통관관리 강화

-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위해성분 함유 식품 등 국민 건강 안전 위해 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대책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수입금지 성분 함유 건강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국민건강 위해식품 반입차단 - 식약처에서 제공한 위해식품 정보를 바탕으로 협업검사 C/S 적용 및 검사 실시 통해 위해식품 통관 철저 차단	○ 위해식품 차단강화를 위해 식약처 통한 C/S 내역 재정립(2월) - 식약처 통보 위해식품의 품명 및 규격 등 세부내역 재정리 요청 - 식품 관련 협업 C/S 설정 기준내역 적정여부 점검 ○ 식약처 위해식품내역 검토 결과 통보에 따른 C/S 기준 고도화 (11월)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 없음

3. 성과 및 한계

-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개인 등이 특송화물을 통해 수입하는 위해 물품 함유 불법식품 반입 차단을 위한 C/S 선별 고도화 추진
 - 식약처에서 통보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물품中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C/S등록*, 건강기능식품 등 협업검사 강화 통한 불법통관 차단
- * 현재 식약처 통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1542개 중 협업C/S 856개 지정 관리
- 식약처에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서 통보한 위해식품내역 재정비 추진
- 식약처에서 검토한 내역 통보 결과 반영을 위해 위험관리센터 및 통관 기획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위해식품 C/S 선별기준 고도화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위해 식품류에 대한 관리 강화
 - 식약처 등 각 부처에서 통보된 위해물품 정보 및 협업검사 결과 등을 활용 C/S 등록관리 및 검사선별 통한 반입차단

3-3-①	식품 표시·광고 체계 개선
①	영업자 실증(實證) 및 자율심의 제도 도입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팀 전대훈 연구관, T.043-719-2188)

1. 과제내용

- ☐ 식품 표시·광고 영업자 실증(實證) 및 민간자율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19)
 - (영업자 실증제도) 영업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식품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실증자료가 없는 표시·광고는 금지
 - (자율심의제도)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설립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협회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심의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 법령 마련(3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3월) 및 시행규칙(4월) 제정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고시 제정(3월) -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7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 개정 건수	2	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하위규정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19년 제정, '20~'21년 개정)

3. 성과 및 한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3~4월)
 - 법률에 위임된 자율심의기구, 실증제도, 소비자 교육·홍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시행령(총16조), 시행규칙(총17조) 마련
 - 법률에서 정하는 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심의기구의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3월)
 - 법률에서 정하는 실증에 대한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7월)
 - 실증자료 검토 및 자율심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예규 제정(3월)

4. 향후 추진계획

- 자율심의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 접수·처리 및 영업자 실증제출 자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운영(계속)
- 식품 등의 표시광고 영업자 실증제 및 자율심의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소비자 교육·교육·홍보(계속)

3-3-①	식품 표시·광고 체계 개선
②	식품 표시 전달력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팀 신영희 사무관, T.043-719-2182)

1. 과제내용

- ☐ 식품 표시 가독성 제고를 위한 자간·장평기준 마련 및 커피전문점의 조리커피에 대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품등의 표시방법에 자간·장평 기준 마련(3월)	○ 표시사항 가독성 제고를 위한 자간·장평 기준 마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4월)
○ 커피전문점 등의 조리 커피 카페인 정보 제공 강화(12월)	○ 커피전문점 등의 조리 커피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추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과학적·합리적 표시기준 개정 건수	16건	16건

-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1건), 식품등의 표시기준(5건),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7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1건),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2건)

3. 성과 및 한계

- 식품등의 표시방법에 자간·장평 기준 마련(4월, 시행규칙 제정)
 -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² 미만인 경우 합리적인 자간·장평 기준 마련하여 영업자 불편 해소 및 표시의 가독성 향상
 - * 정보표시면의 활자는 장평 90% 이상, 자간 - 5% 이상 표시하고,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²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이상, 자간 - 5% 이상으로 표시
- 커피전문점 등의 조리 커피 카페인 정보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6월, 입법예고)
 -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커피의 카페인 함량 등 주의사항 정보를 제공하여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기대
 - 카페인 검사 및 표시 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에 우선 적용하여 조기정착 유도
 - 커피의 카페인 함량 편차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카페인 함량 표시방법 마련
 - * 카페인 편차를 고려하여 1년마다 2개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120% 미만)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음

4. 향후 추진계획

- 커피전문점 등의 조리 커피 카페인 정보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20년 상반기)

3-3-②	식품안전정보의 민간 확산
①	민간 플랫폼 등 활용 식품안전정보 전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정진목 사무관 T.043-719-4052)

1. 과제내용

- ☐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식품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식품안전 신뢰도 제고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민간플랫폼 등 대국민 접점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11월)	○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배달앱 및 맛집정보 제공사이트 등을 활용한 식품안전정보 제공(11월) * 음식점 인허가, 행정처분 및 위생등급 정보
○ 식품안전나라 웹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11월)	○ 장애인·고령자 등이 식품안전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11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민간플랫폼 연계 건수	3건	3건

3. 성과 및 한계

- ☐ 배달앱, 맛집정보 제공사이트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인허가, 행정처분 정보 등) 제공으로 대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

* ('18) 10개(배달앱, 네이버 등) → ('19) 13개(에필케어 등 앱 사이트)

- 식품안전정보 연계 시 인허가 정보로 매칭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 연계에 어려움

4. 향후 추진계획

- 배달앱·건강앱 등 대국민 접점에서 맞춤형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
* ('19) 배달의 민족, 배달통·요기요 등 13개 → ('20) 푸드플라이 등 16개

3-3-3	식품의 영양·위해 정보제공 확대
①	알레르기·열량 등 국민 관심분야 정보제공 확충

(담당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팀 신영희 연구관 T.043-719-2187
위해정보과 백남이 사무관 T.043-719-1760)

1. 과제내용

-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재평가 및 표시제도 영업자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
- ☐ 국민 관심이 높은 해외 위해식품 관련 정보를 연령대별로 분석·제공하는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다모아) 운영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물질 22종 재평가(12월) ○ 알레르기 표시 영업자 교육·홍보 (3월~) ○ 어린이, 임산부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정보 지속 제공(연중) ○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다모아)에 생활 밀착형 정보 게재(3월~)	○ 알레르기 표시 대상물질 전문가 회의 결과, 현행 표시대상 유지 결정(10월) ○ 알레르기 표시 보도자료 배포(3월), 홍보물* 7만부 배포(5월), 영업자 12만명 교육(6~11월), TV 공익광고(8월) ○ 어린이, 임산부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정보 지속 제공(15천건) * 유아 101건, 어린이 147건, 청소년 165건, 임산부 322건, 성인 2,276건, 어르신 307건, 환자 205건 등 ○ 일일 해외정보, 홍보자료 등 생활 밀착형 정보 게재(238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과학적·합리적 표시기준 개정 건수	2건	2건
○ 위해정보 조치율(%)	82.0%	93.9%

* 소비자 불편해소, 업계 규제완화, 국내외 기준 조화 등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행정예고 및 고시개정 건수를 지표로 설정

* 조치율= 주요 위해정보 조치건수 / 총 주요 위해정보 건수 * 100

3. 성과 및 한계

□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물질(22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 현행 표시대상 유지 결정(10월, 전문가 회의)

- '19년 연구사업은 일부 대상에 한정적으로 조사되어, 전 국민의 식생활 변화 및 알레르기 발생률을 고려하여 추가적 연구 필요
- 식용곤충 경우 번데기 이외의 곤충은 알레르기 증상이 미미하여 관리의 우선순위가 낮은 바, 표시대상에 미포함

□ 소비자 불편해소, 업계 규제완화 등을 위한 표시기준 개선(10월)

- 수산물 명칭 개선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식품접객업소 원료용 납품식품에 대한 용도표시 의무 삭제 등 업계 불편 해소

□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다모아) 활용성·접근성 제고 필요

-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를 구축·운영 중이나, 접근성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하여 정보제공 창구 다양화 등 개선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 중심의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식품 표시기준 강화(지속)

□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 위해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창구* 다양화 추진('20)

* 식약처 홈페이지(국내외 위해정보 등), 식품안전나라(해외직구정보방 등)

3-3-③	식품의 영양·위해 정보제공 확대
②	영양표시 의무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팀 유유순 사무관, T. 043-719-2181)

1. 과제내용

- ☐ 영양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 및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단계적 확대 추진
- ☐ 영양표시의 적절성 여부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다소비식품 및 당·나트륨 섭취 기여식품 등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단계적 의무화 방안 마련(12월) ○ 영유아식품의 영양성분 섭취기준 비율 표시 개정안 마련(12월) ○ 영양표시 적절성 지속 모니터링 (연중) ○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 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김치류, 떡류, 설탕류, 소스류 등 47품목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안) 마련(8월) ○ 성인 기준이 아닌, 영·유아 해당 연령의 1일 영양성분 기준 마련(12월) ○ 영양표시 실태조사(1~10월, 1,024건) ○ 산업체, 공무원 대상 영양표시 전문가 양성 교육(4회, 244명)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영양표시 활용도	72.6	73.1

*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활용도 조사결과

3. 성과 및 한계

- 당·나트륨 섭취 기여식품 등 영양표시 대상 확대(115→162품목)
및 영·유아식품의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 영양 표시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및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업계의 영양표시 준수율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 * 영양표시 부적합율(%) : 16('16) → ('17) 12 → ('18) 12 → ('19) 10
 - * 영양표시 활용도(%) : 68.1('16) → ('17) 71.0 → ('18) 72.4 → ('19) 73.1
 - * 영양표시 신뢰도(%) : 34.6('16) → ('17) 35.3 → ('18) 37.8 → ('19) 39.0

4.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영양표시 확대 및 사후관리 지속 추진('20)
 - 영양표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영양표시 실태조사 및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실시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③	식품의 영양·위생 정보제공 확대
③	식품영양정보 서비스 민간제공 확대

(담당자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최용민 연구사, T.063-238-3561)

1. 과제내용

- ☐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영양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범부처 성분벨트 구축을 통한 국가 농축수산식품의 영양·기능성 정보 통합 DB(공공데이터명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구축 진행
 -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발간 및 대국민 공개(5년 주기, 근거: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 보유 DB 현황 ('19)>

- 영양 성분 : 식품 3,035종, 성분 130종 함량 DB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1('19)
 - * '19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4,182건 : 식생활교육 콘텐츠 및 앱 개발 등
 - * 협업부처 :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연구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기능성 성분 : 플라보노이드('16-'17) ⇒ 페놀화합물('17-'19) ⇒ 사포닌('21)
 - * 플라보노이드 DB : 식품 268점, 세부성분 1,684종, 페놀산 DB : 식품 308점, 세부성분 1,163종
- 맞춤형영양정보 : 생애주기별(어린이, 성인, 노인) 1인 1회 섭취분량 기준 DB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구축 및 식품 상용단위 정보 DB 구축 - 영양성분 : 다소비 및 가공품 350점 - 기능성분 : (사포닌) 농식품 50점, (이소플라본) 두류 50점 - 소비단위 DB : 서류 및 특작류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갱신 주기 단축 및 개방 - DB 9.1 대국민 공개, 플라보노이드 DB 개방	○ 식품 영양, 기능성분 DB 구축 - 영양성분 : 곡류 등 330점, 130성분 - 기능성분 : 도라지 등 50점(사포닌) - 소비단위 : 곡류 및 두류 102점 ○ 식품 영양, 기능성 DB 공개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1 공개(4월) * 공개주기: 5년→1, 성분확대: 43종→130종 ○ 기능성분(플라보노이드) DB 개방 - 공공누리 유형 전환 4유형 → 1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공공데이터 제공 수(단위:건)	980	4,182

* 공공데이터 제공 수 : 공공데이터포털 및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국가표준식품성분 DB'와 '플라보노이드 DB 1.0' 제공건수를 의미하여 최근 3년('16년 45건, '17년 160건, '18년 2,713건)의 평균치 유지를 목표로 설정함

3. 성과 및 한계

□ 식품 영양·기능성분 DB 신속 공개 및 개방 확대로 국민 식생활 영양안전 향상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신속 공개 및 활용
 - (공개주기) 소비 트렌드 변화 및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단축 *기준(5년) → 1년
 - (성분 확대) 기존(43성분) → 130 *아미노산, 지방산 세부 성분 등
 - IoT 기반 식단평가 활용확대 : 암환자용(유티인프라), 당뇨환자용(리빗) 등
 - 특수질환자 식단관리 활용 : 페닐케톤증환자 아미노산 정보 활용 제한 식이 관리
 - 기능성분(플라보노이드) DB 개방(4월)
 - 공공누리 유형 전환(4→1) 및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로 활용 편의성 증대
- * 논문, 연구보고서 작성 및 교육자료 활용 목적으로 679건 제공('19)

□ (한계) 국가표준식품성분 DB의 양적 확대로 식품산업, 식생활 유용성 제고되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 확대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고도화 및 실용성 강화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 대국민 공개('20) : 버섯류, 감귤류 등 식품 150종 보완
- 데이터 최신화 : '10년 이전 outdated 데이터 수록을 감소
 - * 44%(9개정, '16)→30%(10개정, '21)→20%(11개정, '26)
- 알기쉬운 영양정보 대국민 서비스('21)
 - * (목표) 100g 기준량 → 유통단위 및 상용섭취 기준(예: 사과 1개의 비타민 C 함량)

3-3-4	농축수산물의 생산·제조 정보제공 확대
①	수산물 생산·제조 정보제공 확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하소형 사무관, T. 044-200-5449)

1. 과제내용

□ 날것으로 소비하는 수산물 중 소비량이 많고 위생·안전 문제발생 우려가 큰 수산물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

- 음식점의 경우, 소비량과 수입량을 고려하여 21종(수산물 12종*, 농축산물 9종)의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추가를 위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절차 추진 ○ 개정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상 품목 추가(12→15개, 다랑어, 아귀, 주꾸미) - 입법예고('19.3~4), 규제심사('19.6), 법제처 심사('19.9~10), 시행령 개정('19.10) ○ 보도자료 배포('19.10) 및 원산지표시 위반 지도·단속시 대국민 홍보 실시(연중)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수)	15	15

* 「원산지 표시법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른 표시 대상품목 수

3. 성과 및 한계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 완료

- 기존 12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추가하여 대상 품목이 15종으로 확대

- *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4.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에 대한 지도 및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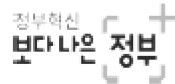
- 원산지 지도 단속 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 업소를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및 지도조사원을 활용하여 홍보 추진

- 최근 개정된 수산물 원산지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언론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1. 우리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19.10.29, 시행:'20.4.30)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는 전파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12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추가 3종) 다랑어, 아귀, 주꾸미

*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181호) 1부, 끝.

대통령령 제 30181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8호 중 “꽃게 및 참조기”를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1) 및 같은 표 제4호마목11)의 위반행위란 중 “꽃게 및 참조기”를 각각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 ③ (생 략) ④ 삭 제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 1. ~ 7의2. (생 략)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u>꽃게 및 참조기</u> (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생 략) ⑥ · ⑦ (생 략)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8. ----- ----- ----- ----- ----- <u>꽃게, 참조기, 다랑어,</u> <u>아귀 및 주꾸미</u> ----- ----- 9.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4-1-1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①	주요 저감대상 집중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T.043-719-2262)

1. 과제내용

- ☐ 식생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공·조리식품 분야별 공급단계에서 나트륨·당류 저감 대상 선정 및 집중 관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나트륨·당류 주요 섭취 기여식품 중심 저감 기술지원 - 가정간편식(나트륨), 빵류(당류) 저감 기술가이드 제시(12월) - 식자재 소스 등 저감제품 개발 지원 (3~11월) ○ 나트륨 줄이기 참여음식점·급식소 확대 및 지속적 운영 지원(연중) - 음식점·급식소 나트륨 저감매장 운영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5월) ○ 프랜차이즈 대상 저감 메뉴 및 영양 정보 제공 확대 추진(10월)	○ 나트륨·당류 주요 섭취 기여식품 중심 저감 기술지원 - 복합밥·찌개류 등 간편식(나트륨), 빵류·떡류 등 가공식품(당류) 저감 기술 가이드 배포(12월) - 중소기업(어육가공품·소스류 등) 나트륨 저감 제품 현장 지원(3~11월) ○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삼삼 급식소 144개소 현장 컨설팅(4~10월) - 음식점·급식소 나트륨 저감매장 운영지침 수정 배포(8월) ○ 커피전문점 등 음료 프랜차이즈 자율 영양표시 확대 간담회(9월), 나트륨·당류 저감메뉴 개발 및 자율 영양표시 개선방안 마련(11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나트륨 저감 참여 음식점·급식소	800	823

*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트륨 줄이기 음식점 및 급식소 현황

3. 성과 및 한계

□ (성과) 가공식품, 프랜차이즈의 당·나트륨 저감 체계 구축

- 가정간편식·빵류·떡류 등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당·나트륨 저감 기술 가이드 제시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당류 저감메뉴 개발지원 및 자율 영양표시 개선방안 마련 등 저감 실천환경 조성

□ (한계) 나트륨 줄이기 참여 음식점·급식소의 매출 부진 우려 및 염도 측정관리 등 업무 증가로 확대에 어려움

4. 향후 추진계획

□ 가정간편식(HMR) 나트륨·당류 함량 주기적 조사 발표

- 가정간편식 영양성분 함량 전수조사, 제조업체 기술지원 세미나·포럼 개최 추진 등을 통한 저감 유도 적극 추진

□ 나트륨 저감 매장 확대를 위해 개별 음식점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중심으로 참여 음식점·급식소 지정 추진('20)

4-1-①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②	범국민 참여 행사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 T.043-719-2279)

1. 과제내용

- ☐ 나트륨·당류 저감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 실천 확산을 위한 범국민 참여행사 및 지역별 캠페인 등 홍보 강화
- ☐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트륨·당류의 적정섭취 유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범국민 참여행사 및 지역별 릴레이 Low 단짠 캠페인 등 실시(5~6월)	○ 범국민 '건강 식생활 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5월), '찾아가는 Low 단짠 홍보단 캠페인(5, 6월), 청소년 당·나트륨 줄이기 홍보관 운영(5월)
○ 나트륨·당류 줄이기 콘텐츠 공모전 개최(4~11월)	○ 포스터 공모전(4~9월), UCC 공모전(6~10월), 공모전 특별전시(11월)
○ 삼삼·당당한 요리경연대회 개최(11월)	○ 저염급식·건강한 빵 요리경연대회 개최(11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범국민 참여행사 개최	개최	개최

3. 성과 및 한계

-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나트륨·당류 줄이기’ 국민 참여행사 개최 및 홍보를 통해 저감 인식도 개선
 - 나트륨·당류 적정 섭취 및 ‘덜짜게 덜달게 먹기’ 실천노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저감 인식도 매년 상승
 - * 나트륨 저감 인식도(%) : ('17) 59.8 → ('18) 61.1 → ('19) 62.6
 - * 당류 저감 인식도(%) : ('17) 43.0 → ('18) 51.2 → ('19) 53.3

4. 향후 추진계획

- 대상별·테마별 나트륨·당류 줄이기 국민 참여행사 지속 운영('20)
 - 범국민 참여행사 개최(5월) 및 지역 캠페인 수행(8월~)
 - 나트륨·당류 줄이기 콘텐츠 공모전(4월~) 및 요리경연대회(11월) 개최

4-1-①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③	(학교) 나트륨·당류 저감화 실현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044-203-6543)

1. 과제내용

☐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 환경 개선

-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나트륨 저감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청 운영평가 시 반영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지침’ 시달(1월) -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등 영양관리 강화 등 ○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3월~) - 급식 종사자 등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교육실시, 권고염도(0.6~0.7%) 수준으로 단계적 저감화	○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지침’ 시행(1월) -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등 영양관리 강화(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19.1.11.) ○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2월~) -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반영 및 이행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계획 수립·이행 여부 확인토록 안내 - ‘국 자율의 날’ 운영 및 국 권고염도 0.6~0.7% 수준으로 낮추도록 안내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19.1.11.) ○ ‘NEIS 급식시스템’의 나트륨 함유량

추진계획	추진실적
○ 학교 나트륨 저감화 추진실적 점검(12월)	산출 기능 현장 적용('19.4.) - 식재료 공통코드를 구축하고 영양정보에 나트륨을 등록하여 식단표시 ○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 - 나트륨 저감화 시행 학교수(11,687개교, 98.9%)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나트륨 저감화 시행 학교수(%)	96.5	98.8
○ 당류 저감화 운영계획 수립 학교 수(%)	96	98.3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학교단위 계획 수립 하에 전년도 대비 사용량을 줄인 학교수를 기재

**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당류 저감화 계획을 반영한 학교수를 기재

3. 성과 및 한계

- 급식종사자 교육 활성화 및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나트륨·당류 저감화 노력

4. 향후 추진계획

-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 및 저감화 실천도 조사 등을 통해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지속 추진(계속)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계선 사무관 T.043-719-2275)

1. 과제내용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소규모 시설지원율(%) : ('18) 60% → ('20) 100%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관리지원 확대 추진(목표 71%, 34 천여개소)	○ 센터를 통해 영양사가 없는 소 규모 어린이집 등 급식관리 지원 확대(75%, 39,711개소/52,613개소)
○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일자리 확대(목표 1,751명, 누계)	○ 영양사·위생사 등 급식관리 전문 인력 일자리 1,755명 창출(증 118명)
○ 연령별 맞춤형 식단 및 위생·영양 관련 교육 교재 등 개발·보급	○ 연령별 맞춤형 식단(레시피) 254건 개발·보급, 센터 우수사례집 및 종사자 교육자료집 등 제작·배포
○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력, 직급, 담당업무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팀장급(297명), 팀원급(881명) 교육, 전문 컨설팅 요원 양성 프로그램(56명)
○ 미흡센터 대상 현장 컨설팅 강화	○ 신규·미흡센터 대상 현장방문 컨설팅 및 기술 지원(15개소)
○ 급식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 급식관리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추진계획	추진실적
통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12월) ○ '20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개정(12월)	운영(12월~, '20.1월 정식 오픈예정) ○ '20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개정(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 수혜율(%)	71	75

$$* \text{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 수혜율(\%)} = \frac{\text{센터 지원을 받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수}}{\text{급식관리 지원대상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수}} \times 100$$

3. 성과 및 한계

☐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센터 설치 및 사업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시설 지원율 75%까지 확대

* 센터 지원율 : ('18) 67% (32,928/48,907곳) → ('19) 75% (39,711/52,613곳)

- 영양사·위생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 일자리 1,755개 창출(증 118명)

* 일자리 창출 : ('18) 1,637명 → ('19) 1,755명

4. 향후 추진계획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4개소) 및 사업규모 확대(14개소)를 통한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확대 추진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②	(어린이)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배철희 사무관 T.044-202-2821)

1. 과제내용

- ☐ 생활터 중심 아동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 성장기 아동의 건강생활실천습관 생활화를 통한 비만예방 실현하고자 영양 및 신체활동 중재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아동비만예방프로그램 확대 운영 - 설명회, 강사 교육 실시 - 교육매체, 효과평가도구 고도화 등 사업 운영 기술지원 ○ 사업 효과평가 및 주요성과 공유 - 효과평가 실시, 분석 및 결과 공유	○ 사업대상(초등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 운영기간(3개월→한 학기) 등 확대·운영 - 권역별 사업설명회 2회, 프로그램 강사교육 2회 실시 - 영양(16차시→24차시) 및 신체활동(64차시→96차시) 프로그램 고도화 - 영양강의자료 6종 및 부모교육용 영양건강정보지 2종 개발·보급 ○ 사업 효과평가 및 주요성과 공유 - 결과보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1회) - 성과분석결과 지자체 환류(12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프로그램 참여 아동 비만율	유지	3.8%p 감소

* 프로그램 전·후 아동의 체중 및 신장 실측 비교

3. 성과 및 한계

□ 아동비만예방프로그램 대상, 운영기간 등 확대·운영

- ('18년) 93개 지자체, 305개 초교 → ('19년) 121개 지자체, 397개 초교 및 38개 지역아동센터
- 사업대상(초등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기간(3개월→한 학기)을 확대·운영
-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비만을 변화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
 - 과체중·비만 아동비율 3.8% 감소(사전 29.5% → 사후 25.7%)
 - 영양·식생활, 신체활동 지식 및 행태 점수 향상
 - 참여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율 96.1% 달성

4. 향후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운영체계 마련

- 지역 중심의 자발적 사업운영 기반 마련
 - 설명회, 강사교육 등을 중앙에서 지역주도 기반 마련
- 건강생활실천 습관화 유도를 위한 가정연계 학습지, 부모교육용 영양건강정보지 등 개발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③	(어린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문무 사무관 T.044-201-2258)

1. 과제내용

- ☐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고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과일간식 지원
 - 아동·청소년기에 다양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하고, 국산과일의 안정적 소비와 저변 확대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전국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과일 간식 1인당 연간 30회 제공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 적격 업체 선정(1월) - 과일간식 가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지자체)(2~3월)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실시(지자체)(3~4월) - 가공·공급업체 등 과일간식 지원 현장점검(5월)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추진성과 조사(12월)	○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초등돌봄 교실 학생 1인당 연간 30회 추진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 적격 업체 선정(1.29) * (공모)12.5~12.27, (현장실사·제안서심사) 1.7~1.25, (선정발표) 1.29 - 초등돌봄교실 가공업체와 공급 계약 체결(지자체에서 3월중 완료)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실시(4.1~, 205개 시·군·구) - 가공·공급업체 등 과일간식 지원 현장점검(5.7~5.17)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추진성과 설문 조사 추진(12.2~12.11)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과일간식 지원학생 국산과일 선호도 증가율	6.0	6.25

3. 성과 및 한계

- (성과) 205개 지자체 약 5,000개교 약 23만명에게 친환경용기를 활용한 과일간식 제공
 -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으로 기존간식(빵, 핫도그 등)을 국산 제철 과일로 대체, 어린이 영양공급 및 식습관 개선 가능성 확인
 - 과일간식 사업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플라스틱컵의 환경오염 논란에 적극 대응, 친환경 포장재 전환 추진('19.9~)
 - 여름방학 이후(9월~) 친환경 포장재(생분해성 플라스틱, PLA)를 이용하여 과일간식 전량 공급
- (한계) 신선편이 형태 과일간식 공급으로 위생·안전 우려 가능성 상존

4. 향후 추진계획

- 과일간식의 공급안전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지침 보완 추진
 - 과일간식 공급업체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HACCP 인증업체로 제한
 - 지속적인 가공·공급업체의 현장점검을 통해 친환경 포장재 이용 여부, 식품위생·안전 관리 추진
 - 과일간식을 신선편이 형태 이외에 희망시 원물형태로도 공급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공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원물형태 공급 시 학교 급식시스템을 활용하고, 급식과 동일수준의 위생 및 안전관리 추진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④	(청소년) 학교 내 고카페인 판매 금지 등 영양·안전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상록 사무관, T.043-719-2257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 T.043-719-2279)

1. 과제내용

-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
- ☐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중·고등학생용 식생활 교육 교재 지원 및 당류 줄이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추진 -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등 지도·점검(10회/연) ○ 2019년도 중·고등학교 대상 식품 안전·영양교육 지원 * (주제) 카페인, 식품첨가물, 식중독, 영양과 식사, 비만과 식이장애 등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추진 -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등 지도·점검(10회) ○ 2019년도 중·고등학교 대상 식품 안전·영양교육 지원 -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 배포 및 교육운영(3월~) * (주제) 카페인, 식품첨가물, 식중독, 영양과 식사, 비만과 식이장애(비만 예방을 위한 올바른 간식 선택하기,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요령) 등 - 영양(교)사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역량강화 전문과정 운영(7~8월) - 식품안전·영양교육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평가(11~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등 지도·점검	10회	10회

3. 성과 및 한계

-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카페인 과잉섭취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 유도 및 사전예방
- ☐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품선택 유도

4. 향후 추진계획

-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에 대한 전담관리원 교육 강화 및 지도·점검 실시(월 1회)
- ☐ ‘20년도 중·고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속 지원

* (교육주제) 카페인, 식품첨가물, 식중독, 영양과 식사, 비만과 식이장애 등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⑤	(청소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등 강화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044-203-6543)

1. 과제내용

□ 학교급식에 대한 영양관리기준 등 강화

-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 및 체위 변화를 고려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 수립(~4월) - 개발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안) 시범적용 결과를 고려하여 시행규칙 개정 계획 수립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2월) -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개정 추진	○ 학교급식 정책연구 결과(영양관리기준) 설명회 개최(2.20) - 개발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시범적용 결과 관련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하위 법령(영양관리기준 등) 개정 방안 정책연구 추진(4월~) -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정책연구 공청회 개최(10.10) -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정책연구 교육부 의견수렴(11.22)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 수립 및 개정 추진('20.1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완료	추진 중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 여부

3. 성과 및 한계

- 유아의 안전한 먹거리 및 급식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유아 3법(학교급식법 포함)’이 발의(‘18.12)되어,
-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19년에는 유치원 실태파악 및 영양관리기준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추후 동 결과에 근거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영양관리기준)을 추진할 계획임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0년)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⑥	(성인) 개인별 영양섭취관리 지원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T.043-719-226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 허수정 연구관, T.043-719-4403)

1. 과제내용

- ☐ 식품영양성분 DB의 개선·확충을 통해 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품영양성분 DB 등 개선 및 재정비(3~10월)	○ 각 부처 최신 영양정보를 반영, DB 전면 재정비 완료(10월) * 식약처(가공식품 및 음식메뉴 12,000건), 국립농업과학원(식품원재료 3,000건), 국립수산물과학원(수산물 1369건)
○ 식품영양성분 DB 개방 및 제공 확대(연중)	○ 영양성분 DB를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네이버 지식백과 등에 활용
○ 다소비식품의 영양성분 정보제공을 위한 분석자료 생산(12월)	○ 가정간편식 등 250품목에 대한 단백질, 지방산 함량 등 80여종의 영양성분 정보 생산(12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품영양성분DB 공공데이터 연간 활용횟수	20	20

* 앱 개발, 정보 이용 등의 민간 활용 횟수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식품영양성분 DB 최신 영양정보 반영 및 활용 확대

- 기존자료 오류 및 중복값 검증, 식품원재료·가공식품·외식메뉴 등 최신 영양정보 갱신 등 전면 개편
- 각 부처별 영양성분 정보 일괄검색* 및 분야별 통합 간편 검색** 기능 추가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식약처, 국립농업과학원 등 기관별 상이한 영양성분 코드 체계 개선

* 개별 검색(가공식품, 외식 등) → 일괄 검색(자장면의 경우 14개 표출)

- 국민들이 실제 섭취하는 가정간편식 등 조리음식에 대한 80종의 영양성분 분석을 통한 DB 자료 생산 및 확충

☐ (한계)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각 부처에서 별도 운용하고 있어, DB 연계를 통한 최신 데이터의 자동갱신 등 관리 효율화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식품영양성분 DB의 개선·확충을 통해 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지속)

☐ 국민 다소비 식품(200품목)에 대한 단백질, 지방 등 108종의 영양성분 DB 구축(11월)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⑦	(고령자) 복지시설 급식 위생·영양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계선 사무관 T.043-719-2275)

1. 과제내용

- ☐ 독거노인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어르신을 방문 관리하는 생활관리사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
- ☐ 노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 노인 급식안전관리 현장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및 법적 근거 마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1월~)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11월) 및 하위 고시** 제정(12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및 지원) 신설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133호)
○ 노인 위생·영양관리 지침서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280개소)	○ 어르신 대상 소규모 급식소(50인 미만)의 급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지원서비스 실시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7개소 설치·운영으로 287개소 지원 중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수혜율(%)	3	3.9

3. 성과 및 한계

- ☐ 어르신 대상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지원서비스(7월~, 시범지원)를 통해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기여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7개소 설치·운영으로 287개소 지원 중

- ☐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1월) 및 하위 고시** 제정(12월) 등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 근거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및 지원) 신설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133호)

4. 향후 추진계획

- ☐ 어르신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지속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⑧	(취약계층)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광병배 사무관 T.044-201-2274)

1. 과제내용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

- 타용도 전환이 낮은 현물(농산물) 지원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전자방식 도입 및 식생활·영양 교육 병행방안 검토

* 농식품바우처 공급시스템 및 사업체계 설계를 위한 현장 실증연구('18)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농식품바우처사업 보완 연구 - 보완연구 계획 수립(3월) → 연구기관 공모(4월) → 연구추진(5~10월) ○ 제도 도입 전문가토론회 등 개최 - 대국민 홍보 및 토론(9월~)	- 농식품바우처사업 보완 연구 추진 - 보완연구 계획 수립(3월) → 공모·선정 및 연구 완료(3월~10월) - 미국 선진사례 조사 및 WTO 국제기준 관련 법륜자문(9~10월) ○ 제도 도입 전문가토론회 등 추진 - 제도 도입 전문가토론회(11월, 국회) - 12개 소비자단체 협의회 시 설명(9월)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10월~)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없음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18) 결과 및 시범사업('20) 추진과정에서 성과지표를 도출 후 본사업 추진시 성과지표 설정

3. 성과 및 한계

☐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체계 보완연구 추진('19.3~10월)

- 타당성 연구, 실증연구를 분석하여 시범사업의 구체화
 - * 지원대상(지역포함), 대상품목, 카드 공급방식, 바우처 전달체계 등
- 사업 전담기관*(중앙지원조직)의 조건, 기준, 역할 등 연구
 - * 사업 운영·관리, 대국민 홍보, 성과평가, 자금 운용·관리, 모니터링 등 수행
- 식생활·영양교육 연계방안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
 -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해 효율적 식생활교육 병행방안 연구 및 농식품바우처·식생활교육 업무 관계자 선진 우수사례 발굴 연수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19.3.6)

- 신선농산물 전자카드방식 바우처 도입 2개 지자체 현장 검증
- 농식품바우처 실증 이용실태 및 활용율 영향요인 분석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실증 영향분석 및 운영방안 도출

☐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및 홍보 등

-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11.4, 국회)
- 실증연구('18.6~'1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결과에 대한 기획기사
- 12개 소비자단체와 농식품부 협의체인 소통협의체에서 제도 설명(9.3)

☐ '20년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시범사업 포함) 국회 단계 예산 확보('19.12)

4. 향후 추진계획

☐ '20년 사업 예산 확보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추진('20.1~)

-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선정 및 제도 도입 필요성 홍보 등 추진
 - * 시범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시범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⑨	(취약계층) 우유급식 지원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임지현 사무관, T.044-201-2340)

1. 과제내용

- ☐ (저소득층 우유급식 지원)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 발달 및 건강 증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중·고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급식하는 우유 지원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저소득층 우유급식 지원 - '19년 학교우유급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안내(1월), 사업비 배정(2, 5, 8, 11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6월), '20년 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9월)	○ 저소득층 우유급식 지원 - '19년 학교우유급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안내(1.31), 사업비 배정(2, 6, 9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6월, 607천명), '20년 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9월, 630천명)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지원대상 학생수(천명)	576	607

* '19년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근거로 실적 산출

3. 성과 및 한계

-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 발전 도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약 607천명 학교우유급식 지원
- 국정과제*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전국 14개 시·도 각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13천명) 지원
- * 학교 우유급식 확대(83-4) : 시·도별 10개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대상 시범사업('18~'19년) 후 점진적 확대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우유급식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시스템 구축('20년)
- 학교우유급식 입찰·계약·공급·정산 등 집행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지원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 지원

4-1-2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⑩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자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배철희 사무관 T.044-202-2821)

1. 과제내용

-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대상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임산부·영유아 보호자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시스템 점검·고도화
 - 비만예방 및 식생활 관리 강의 등 온라인 교육과정 신규 개발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매체 제작·배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신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자문(4~5월) ○ 다문화 가구 대상 교육콘텐츠 강화(5~6월) ○ 신규 온라인 영양교육과정(과제 중·비만대상) 개발(6~10월) ○ 교육과정 연계 자료 개발 및 확산(10~12월)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발 홍보 및 운영성과 보고(11월) ○ 온라인 교육시스템 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상시)	○ 다문화 가구 대상 교육 콘텐츠 강화 - 다문화 가구용 과정(중국어, 베트남어) 총 10개 과정 개발 ○ 신규 온라인 영양교육과정(과제 중·비만 대상) 개발 - 비만예방 과정 4개, 유아 섭취행동 교육 1개 등 총 5개 과정 개발 ○ 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 개발(PPT) 및 확산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발 홍보 및 운영 성과 보고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 설명회(10.31) 및 담당자워크숍(12.6) ○ 온라인 교육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운영 모니터링(상시) - 관리자 민원 응대 및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실시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교육 활용률(%)	70	78.17

* 측정산식: (온라인교육 활용 보건소 수/영양플러스 운영보건소 수)*100

3. 성과 및 한계

☐ 온라인 영양교육시스템 신규 과정 콘텐츠 개발

- 영양플러스 온라인 교육과정 신규 동영상 강의 제작
 - (주제) 과체중·비만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주제 선정
 - (내용) WEB·모바일 APP 활용 시 학습 환경 및 집중력 등을 고려하여 각 과정별 10~30분 내외로 제작(총 5개)

☐ 다문화 가구용 영양교육 강의 콘텐츠 강화

- 기 개발된 교육과정(5편)에 대한 다문화 가구 최빈도 언어로(중국어, 베트남어) 다문화 가구용 과정 총 10개 개발
 - 강의 영상 음성 더빙 및 퀴즈 문항 번역, 추가 학습자료 제공 가능

☐ 영양플러스사업 교육매체 개정 및 보급

- 온라인 강의 콘텐츠 또는 기존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소 집합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형식(PPT)으로 제작·보급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발 홍보 및 운영성과 보고
- 2020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설명회(10.31) 및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워크숍(12.6.) 운영 시 신규 개발과정 안내 및 성과 홍보

4.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발
 - 담당자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주제로 신규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발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확대(비만)를 위한 보건소 시범사업 수행
 - 신규 개발된 비만(과체중) 영양교육과정을 활용한 대상자 관리 내용의 시범사업 운영

4-2-①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
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 T. 043-719-2102)

1. 과제내용

- ☐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로 자율경쟁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도모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 제도 운영, 인센티브 제공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확대 운영을 위한 고시 개정(3월)	○ 위생등급 신청 대상 업종 확대*를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고시)’ 개정(3월)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추가
○ 위생등급 평가항목 합리적 개선 (11월)	○ 평가 중복항목 및 과도한 서류 구비항목 등 조정(8월, 고시개정)
○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명확화(11월)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및 지원 근거 명확화(8월, 고시개정) * 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용 지원 등
○ 음식점 위생등급 현장평가 전문가 양성을 통한 평가인력 확대(연중)	○ 공무원·소비자감시원 등 전문 평가인력 확대(3·9월, 300명)
○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 대한 위생 등급 정보제공 등 지정 유도(연중)	○ 배달앱(요기요) 및 네이버플레이스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출완료(11월)
○ 음식점 위생등급 희망하는 영업자	○ 위생등급 신청 희망 영업자 대상

추진계획	추진실적
대상 현장 맞춤형 컨설팅(2~11월) ○ 영업자및 공무원 설명회, 협의체 운영으로 참여 독려(연중) ○ 음식점 위생등급제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2~12월)	맞춤형 컨설팅 실시(2~11월, 1,700개소) ○ 영업자 및 공무원 대상 설명회, 협의체 운영(7회) ○ '등급제 홍보 동영상' 송출* 및 각종 매체** 활용 홍보 강화(2~12월) * 언론(TV,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등 ** 대중교통(KTX, 공항 등), 옥외광고(정부청사) 등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수	4,800	6,170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및 현장평가 완료수(사업결과보고서)

3. 성과 및 한계

☐ 위생등급제 대상 업종 확대 및 평가체계 개선에 따른 신청 증가

* 신청건수 : ('18) 4,597건 → ('19) 6,170건(34.2% ↑)

☐ 위생등급제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위생등급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 및 언론·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 실시(연중)

4-2-①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
②	배달음식 및 가정간편식 점검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조성훈 사무관 T.043-719-2054
식품안전정책과 박규나 사무관 T.043-719-2011)

1. 과제내용

- ☐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 등의 위생 취약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 배달앱 운영업체와 정보공유를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즉석섭취·조리식품 제조·판매업체, OEM 제조업체 집중점검 - 가정간편식 등 제조·판매업체 점검 (4월, 7월) - 편의점 도시락, 햄버거 등 간편식 수거·검사(4월, 7월) ○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관리 집중 점검(연중) ○ 배달앱 사업자에게 배달음식 이물 신고 식약처 통보 의무화 * 「식품위생법」 개정(1월), 시행(7월)	○ 즉석섭취·조리식품 제조·판매업체 집중 점검 - 영·유아식, 이유식 등 제조·판매업체 350개소 점검 및 66건 검사(2월)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4,893개소 합동점검 및 883건 검사(4월) - 홈쇼핑, PB제품 등 제조업체 1,030개소 점검 및 463건 검사(7월) ○ 배달앱 3사 등록 음식점 47,790개소 점검(2~8월) ○ 「식품위생법」 개정(1월), 시행(7월) - 배달앱에서 808건의 이물신고 통보(7~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생취약분야 지도·점검(건)	5	5

3. 성과 및 한계

☐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점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부적합 식품 유통 차단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4,893개소 점검 70개소 위반 조치

* 배달음식점 47,790개소 점검 415개소 위반 조치

☐ 배달앱을 통한 이물 클레임 통보를 통해 이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인력만으로 매년 전수 점검에는 한계

4. 향후 추진계획

☐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및 배달 음식점 등 집중점검, 배달앱 이물 클레임 통보 건에 대한 조사·대응 강화(연중)

4-2-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①	지하수·생산해역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고영호 연구관, T. 043-719-2104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서기관, T. 043-719-3241)

1. 과제내용

-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지하수·수산물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해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오염우려 수산물 노로바이러스·패류독소 검사 등 집중 관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지하수 사용 업소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 연간 계획 수립(1월)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집단급식소 등 노로바이러스 검사(연중) -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살균소독장치 현장점검(연 2회) ○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검사 - 오염우려 해역 생산 수산물 등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3~6월) -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안전관리(11~2월)	○ 지하수 사용 업소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 연간 계획 수립(1월) - 식품제조업체 등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680건 검사(4건 검출) - 학교급식소 등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211대 점검(32대 반납 등 조치) ○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검사 - 홍합 등 패류독소 3,221건 검사(50건 초과검출), 해당해역 패류 채취 및 출하금지, 수산물 섭취 주의정보 제공(3~6월) - 생식용 굴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212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건수)	680	680

3. 성과 및 한계

☐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수 감소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수/환자수 : ('18) 57건/1,319명 → ('19) 52건/1,152명

☐ 다소비 수산물의 위해우려 요소 선제적 관리로 식품사고 발생 방지

4. 향후 추진계획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에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운영(지속)

☐ 수산물 중 패류독소 및 노로바이러스 검사 추진(계속)

4-2-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②	연안 생산해역 및 패류 양식장 감시체계 운영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최재용 사무관 T.044-200-56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위생과목종수 연구관 T.051-720-2640)

1. 과제내용

☐ 굴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1월~4월, 11~12월)

-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의거하여 서·남해안 패류 생산해역(39개소)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파악
 - 중점관리 해역: 11월~익년 4월(굴 생산시기), 23개소, 격주조사
 - 일반관리 해역: 11월~익년 4월(굴 생산시기), 16개소, 월 1회
- 패류 생산해역 오염원 관리 및 생산관리를 위한 해수부, 지자체 및 관련 어업인 단체 정보 제공

☐ 전국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패류독소 모니터링(1월~12월)

- 동·서·남해안 패류 생산해역의 패류 102개소 정점(정기조사 50개소, 확대조사 52개소)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 정기조사 정점은 월 1회 이상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 발생시기(3~6월)는 확대조사 정점과 동시에 주 1회 조사
 - 패류독소 발생시 주 2회, 기준 초과시 주 1회 이상 조사
-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홈페이지(수과원) 게재 및 보도자료 제공 등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굴 중의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의거하여 서·남해안 패류 생산해역(39개소)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파악 * 굴 생산시기(1~4월, 11~12월) - 패류 생산해역 오염원 관리 및 생산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 전국 연안 패류독소 모니터링(연중) - 조사정점 : 102개(정기 50 + 확대 52) - 정기조사(1~2월, 7~12월) : 월 1회 - 확대조사(3~6월) : 주 1회 ** 단, 패류독소 검출시 주 2회 강화 - 패류독소 발생상황 속보 제공 등	○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의거하여 서·남해안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추진 - 서·남해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실시 완료(25회) 및 지자체 등 자료 제공 ○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실시(연중) - 전국 연안 패류양식장(102개소)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실시 완료(63회, 2,381건) 및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식중독 사고 Zero 달성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횟수)	25	25
○ 패류독소 모니터링(건수)	1,850	2,381

3. 성과 및 한계

□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정보제공을 통한 양식장 오염 개선 시행 등 감시·관리체계 구축

- 해수부,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노로바이러스 조사결과 제공(25회)

- (패류독소 감시·관리체계 구축) 전국 연안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대한 조사 실시 및 피해대책반 운영 등 감시·관리체계 구축
 - 해수부,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패류독소 조사결과 제공(63회)
 - * 주 발생시기 패류독소 조사 강화 : 월 1회 → 주 1회(검출시 주 2회)
 - 패류독소 발생 상황 속보(수과원 홈페이지 등 63회) 및 보도자료(3회) 제공
- (한계) 조사·분석 인력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적시 분석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체계 한계
 - 패류독소 식중독 피해예방 및 부적합 패류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당일분석·당일통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조사·분석 인력 및 근접 분석기관 부족으로 분석에 장시간 소요

4. 향후 추진계획

- 서·남해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 및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지속 추진

4-2-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③	범부처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 T. 043-719-2102)

1. 과제내용

- ☐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으로 부처협력 식중독 예방 및 대응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통해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추진(매년 2월)
 - * 농식품부(농축산물), 해수부(수산물), 환경부(수도시설), 교육부(학교 급식소) 등 각 기관별 위생안전 취약분야 관리·교육·홍보 계획 등 포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범정부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 고위급 회의 개최(2월)	○ 범정부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 고위급 회의 개최(2월) - 각 부처 및 시도, 협회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19년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실무협의회 개최(6월, 11월)	○ 범정부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 실무급 회의 개최(5월, 11월) - 여름철 및 겨울철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시행 ○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개정·발령(11월)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업무 등 총괄하는 aT를 식중독대책협의기구에 포함
○ 식중독 관련 현안 발생 시 관계	○ 겨울철 감염병 대책 추진점검(10월),

추진계획	추진실적
부처 회의 개최(연중)	봄 신학기(3월) · 여름철(6월) 식중독 예방관리, A형 간염 관련 조개젓 안전관리(6회) 등 관계부처 회의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범정부 식중독대책 회의 등 개최 횟수	4	14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범부처 식중독 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대응 효율성 향상 및 식중독 발생 감소

○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역대 최저 수준('13년 대비 17% 감소)

* ('13) 97명 → ('14) 145 → ('15) 116 → ('16) 139 → ('17) 109 → ('18) 222 → ('19.12) 80.9

☐ (한계) 주요 시기별 현장에서 전문적인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중앙부처 · 지자체 등 인력증원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 등 범정부 식중독 예방관리 협력 지속

4-2-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④	현장 신속대응 모의훈련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남백상 사무관, T. 043-719-2103)

1. 과제내용

- ☐ 지자체 등 식중독 현장 신속대응 능력 및 전문성 강화
 - 식중독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역할 수행 등 현장 신속대응 모의훈련 확대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모의훈련 (4월) ○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5~10월)	○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모의훈련 * 식약처 주관, 전국 지자체 참여(4월) ○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 지방식약청 주관, 5개 시·도 교육청, 지자체 참여(5월) * 시·도 주관, '18년 식중독 발생 시·군·구 등 참여(6~11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중독 모의훈련 참여 기관(수)	25	28

3. 성과 및 한계

- ☐ (성과) 식중독 발생 시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기관별 대응 임무 숙지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지자체 신속보고 등 전년도 대비 급식소 조기경보 전파율* 향상
으로 동일 식재료 납품 급식소에서의 환자발생 신속 차단

* 전파율: ('18) 46%(발생:82건, 전 파:38건)→('19) 91%(발생:128건, 전 파:116건)

- (한계) 지자체 담당자 인사이동 시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식중독 발생 대비 현장대응 모의훈련 지속 실시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식중독 발생 상황을 가정한 권역별 모의훈련 지속 운영
- 학교 개학 시기 및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여름철을 대비한
신속보고, 현장대응 훈련 강화

4-2-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⑤	식중독 발생·예방 정보 제공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남백상 사무관, T. 043-719-2103)

1. 과제내용

- ☐ 식중독 발생·예방 정보 제공으로 사전예방 체계 확립
 - 식중독 발생·예방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 및 식중독 발생분석 정보(지역·시설·원인균) 제공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기능 개선(연중) ○ 시기별·계절별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요령 등 대국민 정보 제공(수시) ○ 집단급식 식중독 원인 품목별·사례별 주의사항 등 교육(연중)	○ 식중독 발생 시 동일 식재료납품 시설에 조기경보 전파(116회) * 조기경보 연계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 활용 ○ 기상정보 및 식중독 발생 통계 등 빅데이터를 활용, 식중독 예측 서비스 제공(연중), 계절·시설별 식중독 주의정보 제공(매월 1회) ○ 학교급식 관계자(학교장·영양교사 등)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938회, 100,515명), 식중독 주의정보 업무 수첩 제작·배포(3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중독 정보 제공 건수(합)	13	13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식중독 발생·예방 정보 제공으로 식중독 경각심 제고
 - 일부 감염사례, 관광지 식중독 발생 등을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시 식중독 주의 정보 전파(1월~)
 -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aT)와 식재료 계약품목별, 기간별 납품정보 실시간 연계(6월~)하여 정보 활용
 - *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신고 128건 중 조기경보 전파 116건(91%)
 - 식중독 발생동향 분석을 통한 원인·계절·지역별 식중독 예방요령 제공(월1회) 및 폭염기간 식중독 예방 보도자료 배포(7~9월)
- (한계) 학교외 병원, 기업체 등 급식소의 경우에는 조기경보시스템 이용률이 낮아 활용방안 모색 필요
 - * 학교는 식재료 공급이력이 조기경보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었으나, 병원, 기업체 등은 업체마다 시스템이 다양하여 자동 연계에 어려움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외 집단급식소의 조기경보 시스템 사용 독려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시 조기경보시스템 등록 방법 안내
 - * 조기경보시스템 사용자 등록매뉴얼 제작·배포('20.3~)

4-2-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①	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점검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 T.043-719-2102)

1. 과제내용

-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
 - 봄·가을 개학 시기 이전 범정부 합동점검(3, 8월), 식중독 발생우려 학교에 대한 특별점검(6, 11월) 및 예방진단 컨설팅 병행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학교 등 급식소 지도·점검 강화 (연중)	○ 학교 등 급식소 지도·점검(전국,5회) - 학교급식소 전수점검(총11,332개소, 3월·8월) - 식중독발생 이력 및 법령 위반 학교 특별점검(총658개소, 6월·11월) - 청소년 수련시설 전수점검(총325개소, 4월)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등 47천개소 식중독 예방 컨설팅
○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체식단 마련(8월)	○ 영양사 및 영양교사 대상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체식단 개발 자료 배포(8월, 6,200건)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상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	○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9월, 2,400부), 의료기관 환자급식(10월, 4,000부), 어린이집·유치원(11월, 2만부) 위생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급식소 점검횟수(회)	3	5

3. 성과 및 한계

☐ (성과) 학교 등 집단급식소 범정부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로 식중독 발생 감소

○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역대 최저 수준('13년 대비 17% 감소)

* ('13) 97명 → ('14) 145 → ('15) 116 → ('16) 139 → ('17) 109 → ('18) 222 → ('19.12) 80.9

☐ (한계) 그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의 양적 확대에 집중한 바, 실질적 식중독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필요

* 컨설팅 실적(개소) : ('15) 24,167 → ('16) 33,909 → ('17) 46,162 → ('18) 27,507 → ('19) 47,359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 등 급식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강화 및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운영 내실화 추진('20)

4-2-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②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 T.043-719-2102)

1. 과제내용

- ☐ 집단급식소 납품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강화를 통해 식중독 발생 원인 집중 관리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집단급식소 납품 식재료 공급업체 및 반복 위반업체 점검 강화(3, 8, 11월) ○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사업 기간 대체식 등 납품업체 점검	○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공급업체 지도·점검(4회, 전국) -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 전수점검(총2,779개소, 3월·8월) - 식품위생법령 위반 식재료공급업체 특별점검(총28개소, 6월·11월) ○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사업 기간 도시락 등 대체식 및 임시급식 납품업체 점검 16개소 점검(3, 8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횟수(회)	3	4

3. 성과 및 한계

- ☐ (성과) 학교급식소 납품 식재료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급식 제공 및 식중독 환자수 저감화

- 봄·가을 개학기(3, 8월) 대비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취약시설(6, 11월) 등 2,807개소 점검(4회)
- 김치류(5월), 빵류(6월), 음료류(7월), 샐러드·과자류(8월) 등 학교급식 다빈도 제공식품 수거·검사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안전관리 지속

- 학교급식 납품업체 정보 사전입수를 통한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점검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 공유
- 학교급식소 현대화사업 기간 중 대체식 등 제공업체 사전점검 및 식중독 발생우려 식재료 및 다빈도 제공식품 검사 강화

4-2-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③	학교급식소 관리책임 강화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주상철 주무관, T.044-203-6546)

1. 과제내용

□ 학교급식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

- 학교급식 관리전반에 대한 연 2회 정기 위생·안전점검 강화
 - 정기점검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연 2회(학기별 1회) 급식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철저
 - * 모든학교 전수점검,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홈페이지 공개
- 학교급식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등 학생·학부모 소통 강화
 - 학생에 제공되는 실제 급식사진 등을 학교홈페이지 게시하는 등 급식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계속) -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급식 행정지침 시달 -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소 전수 점검 및 점검결과 공개 ○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포함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시달('19.1.11) - 점검대상 학교 10,629교 대상 전수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공개 (10,479교 공개/ 공개율 98.6%) ○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총6회 2.28, 3.27, 5.21, 6.4, 6.26, 11.7) ※ 부적절한 식단 배제, 기본적인 위생 관리 사항 준수, 식중독 발생시 대응

추진계획	추진실적
○ 학교급식 현장소통 강화(계속) - 실제 식단 사진 공개 안내(1월) -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학교급식 정보마당) 운영	방안 등 조치사항 시달 -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관련 내용 포함하여 안내(19.1.11) - '학교급식 정보마당' 운영(계속) ※ 18.4월 사이트 구축 완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급식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율(%)	98	98.58

*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 학교수(상반기) / 점검 실시 학교수 × 100

3. 성과 및 한계

- '학교급식 정보마당' 구축·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학교 내 급식 관리 전반에 대한 연 2회 위생·안전점검, 식중독 발생 시 학교장 책임 강화 및 보고 기준 강화(일일상황 보고) 등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계속)

4-2-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④	학교급식소 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주상철 주무관, T.044-203-6546)

1. 과제내용

☐ 학교급식소 급식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

-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매년 500개소 수준) 및 조리실 적정 온도 유지 등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
- IT 활용 축산물 검수시스템 도입·추진('19)
 - 축산물 검수 시 식재료 정보*를 자동 기록하는 검수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

* 생산정보(생산지역, 친환경 여부), 위생정보(원산지, 위해 축산물 여부 등), 유통정보(부위, 유통기한, 냉장·냉동, HACCP인증 등)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계속)	○ 겨울방학 집중점검 통한 일부 시설 개·보수 조치(5,487교) 및 노후 급식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전면 개보수) 추진(739개교)
○ 축산물 검수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12월, 축평원 협업) ※ QR코드 스캔 통한 정보 자동기록	○ 공공급식용 모바일 앱 서비스 사용 편의성 개선(~'19.9월) 및 시범사업 추진(224개교) ※ 납품서류 4~6종을 통합증명서로 대체하고, 검수등록용 QR코드 추가로 검수

	무 편의성 및 효율성 개선 ※ 시범대상 품목 확대는 ‘축산물 거래 증명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후 추진 예정
--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학교수	500	739

*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년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실적 합계

3. 성과 및 한계

- 노후 급식시설·기구 개·보수 조치를 통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IT 기술을 활용한 검수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의 철저한 품질 확인 및 검수시간 단축 등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소 급식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계속)

4-2-4	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
①	위생 사각지대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조성훈 사무관, T.043-719-2054
식중독예방과 고영호 연구관, T.043-719-2104)

1. 과제내용

- ☐ 특정시기·지역에 소비가 많은 식품 및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한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시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활용, 찾아가는 검사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명절, 행락철, 휴가철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 실시(연 5회)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신속검사차량 검사 지원 및 홍보(연중)	○ 명절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 7,986개소(2회) 및 행락철·휴가철 다중이용시설 25,209개소 점검(3회)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식중독균 신속검사(총 1,428건) - 여름철 수산물(6월), 강원도 산불 이재민(4월), 학교 및 군부대 식중독 신속검사 지원(1,774건, 190회 운영) - 관광지 등 지역행사, 다중이용시설 등 식중독 예방 홍보(345회) - 신속검사차량 신규 배치(11월, 부산청)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다소비식품·다중이용시설 합동단속(건)	5	5
○ 신속검사차량 운영 횟수	310회	535

3. 성과 및 한계

□ 국민 소비가 많은 품목,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로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

- 한정된 자원(단속인력, 예산 등)으로 다수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어, 선택과 집종의 효율적 점검체계 마련 필요

□ 신속검사를 통한 초기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역대 최저 수준('13년 대비 17% 감소)

* ('13) 97명 → ('14) 145 → ('15) 116 → ('16) 139 → ('17) 109 → ('18) 222 → ('19.12) 80.9

□ 권역별 신속검사체계 미구축으로 전국단위 국제행사 시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활동에 어려움 발생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8월) 당시 차량 3대 지원으로, 타 지역 국제행사 및 식중독 현장 대응에 한계

4. 향후 추진계획

□ 계절별·시기별 다중이용시설 및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연중)

□ 식중독 발생 초기 신속 대응 및 검사를 통해 식중독 확산 방지, 국제행사 등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 지속 전개(연중)

4-2-4	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
②	식중독균 추적관리 기반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고영호 연구관, T. 043-719-210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황진희 연구관, T. 043-719-4303)

1. 과제내용

☐ 국내 분포 식중독균의 정보화를 위한 특성분석 및 DB 구축

- 사전 탐색조사 등을 통해 확인·배양한 식중독 균주 유전적 상동성 등 특성정보 분석 및 DB화(1,500건, 연중)
- 진단법 개발과 원인추적 등 식중독예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균주 계대배양 등 자원 표준화(320주)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식중독균 탐색조사(12,000건)	○ 토양 등 환경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18종 모니터링 * 13,150건(12월 펄스넷 기준, 2,355건 검출)
○ 식중독 균주 유전적 상동성 등 특성정보 분석 및 DB화(1,500건)	○ 식중독 균주 1,640주의 병원성 유전자, 혈청형, 유전적상동성 (PFGE) 등 특성분석 및 DB화* *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시스템(KIPIN) DB화
○ 식중독균 전장유전체 분석 및 DB화 (2,000건)	○ 식중독 분리균주의 전장유전체 분석 및 DB화(3,050건, 누계)
○ 균주 계대배양 등 자원 표준화 (320주)	○ 식중독 균주 계대배양 및 장기보존 자원 제작 등 자원 표준화(350주)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중독균 DB화(건수)	1,500	1,640

3. 성과 및 한계

- 식중독균(1,640주) 유전적 특성 분석 및 DB화, 주요 식중독균(350주) 표준화 등을 통해 식중독 추적조사 및 원인규명 기반 마련
 - DB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세균별 오염원 추적 등 활용도 제고 필요
 - * ‘19년까지 누적 분석 및 DB화 건수(균수): 12,054주
- 식중독균 전장유전체(WGS) 분석기술을 활용, 현행 ‘몽타쥬’(PFGE) 수준의 유전정보를 ‘사진’(WGS) 수준으로 개선 축적할 필요
 - * 전장유전체 정보(누적) : (‘18) 1,050건 → (19) 3,050건

4. 향후 추진계획

- 식중독 원인 규명을 향상을 위해 주요 식중독균 특성분석 및 DB화 등 유전정보 지속 확보 추진(연중)
 - 오염원 추적 등 주기적인 특성 분석* 수행을 통한 정보 활용성 강화
 - * 수입 부적합 균주들의 상동성 분석 및 주요 식중독 균주의 식품유형별 특성 (예: 닭고기에서 캄필로박터 특성) 등

4-3-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
①	(학생) 식품 안전·영양 교육 확대

교 육 부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044-203-6543)

1. 과제내용

- ☐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 지원
 - 영양(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연령별 식생활 교육 교재 지원 및 실천프로그램을 강화한 실천학교 운영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지침 시행(1월~) -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통해 초·중등학교 범교과 학습 주제에 영양·식생활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 ○ 학교에서의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추진(2월~) -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반영,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지침 시행(1월) - 범교과 학습주제인 안전·건강교육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등)을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교육 실시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19.1.11.) ○ 학교에서의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추진(2월~) -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반영하여 월 2회 이상 교육 실시 안내

실시(월 2회 이상) ○ 영양·식생활 교육 교재 개발(3월) -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현황 및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하여,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등 추진상황 점검(12월) -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현황, 영양상담실 운영 현황,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등에 관한 사항 반영, 월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19.1.11.) ○ 영양·식생활교육 자료 개발(3월~) - 학교 영양교육 실태조사, 학교급별(유~고) 영양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초(1~3)학년 교수학습자료 개발 ※ 교육부 주관, 농식품부·식약처·복지부 협조 ○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 - 영양교사가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월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학교 수 (영양교사 배치 5,646교 중 4,760교 실시, 84.3%)
--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율* (영양교사 배치교 중 월2회이상 교육실시)	84%	84.3%

* 영양교사가 관련교과 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평균 월 2회 이상 실시한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 한 경우

3. 성과 및 한계

- 단위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건강증진 도모 및 향후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보급으로 영양·식생활교육 지속 확대

4. 향후 추진계획

- 단위학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계속)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 T.043-719-2279)

1. 과제내용

-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대상 식품안전·영양 교육 교재 및 교구 등 지원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 식품안전·영양교육 계획수립(1월) - 초등학교 대상 교육지원 학교 수요조사(1~2월) - 교육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2월) - 교육콘텐츠 배포 및 교육 운영(3월~) - 영양(교)사 대상 전문 교육과정 운영(7~8월) -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10~11월) - 영양교사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효과 평가(12월)	○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 초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운영계획 수립(1월) - 초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학교 수요조사(1~2월) - 영양(교)사 대상 식품안전·영양 교육 지원사업 설명회(2월, 2회) - 교재·교구 등 교육콘텐츠 배포 및 교육 운영(3월~) * (교재) 초·중·고 교육교재 및 지도서 각 1종 (교구) 미각키트, 핸드플레이트, 게임교구 등 - 영양(교)사 대상 식품안전·영양 교육 전문과정 운영(7~8월) -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11월) - 영양교사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효과 평가(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품안전·영양교육(명)	19만2천	22만

*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대상 초등학생 수

3. 성과 및 한계

☐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품선택 유도

4.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초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속 지원

* (내용) 식습관 바르게 가져요, 덜 달게 먹어요, 싱겁게 먹어요, 영양표시

4-3-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
②	(고령자) 찾아가는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 T.043-719-2279)

1. 과제내용

- ☐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실생활 활용 가능한 영양 교육 및 조리실습 등 체험형 교육 수행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백세 영양 관리 체험교실’ 운영(1~8월)	○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백세 영양 관리 체험교실’ 운영(1~8월) - 어르신 영양·식생활 개선 교육 및 건강간식 만들기 조리실습 * 경로당, 노인복지관 대상 체험형 식생활 교육 20회수행(449명)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건강백세 영양관리 체험교실(회)	20회	20회

* 튼튼먹거리 탐험대 최종 결과보고서 확인

3. 성과 및 한계

- ☐ 어르신 영양 및 신체활동을 고려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통한 건강한 식생활 체험기회 확대 및 식습관 개선

* 체험교실 운영 현황 : 총 20회 개최(449명 참여)

			
(이론) 스토리텔링식 영양·식생활 개선 교육		(실습) 건강 간식 만들기(저염 마요네즈 샌드위치)	

4. 향후 추진계획

- 어르신 대상 식품안전·영양관리 체험교실 지속 운영(‘20)
 -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건강 간식 만들기 등 조리실습을 병행하는 체험형 교육 실시
 -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현장 방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4-3-②	지역 먹거리 통합 관리
①	지역단위 푸드플랜 확산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나인지 서기관, T.044-201-2217)

1. 과제내용

- 공공급식,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
 -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가공·물류 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지자체별 푸드플랜 수립·운영에 필요한 관련 농림사업 포괄 지원 -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지원 -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농림사업 패키지 지원 ○ 지자체 및 시민사회 관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푸드플랜 추진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책자 3종 제작·배포 -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 - 로고송 제작 등을 통해 전 국민 인식 전환 및 확산 분위기 조성	○ 푸드플랜 수립·실행 적극 지원 - 23개 지자체에 대해 푸드플랜 수립 지원(3월~) - 푸드플랜 수립 우수 지자체 9개소를 선정하여 먹거리 계획 협약 체결, 관련 사업 패키지 지원(2월~) * 5년간 국비 404억원 지원, 지역별 전담 자문단(FD) 배정하여 현장컨설팅 ○ 교육·홍보를 통한 지자체·시민사회 중심 확산기반 조성 -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자 3종 제작·배포(2월) * 수범사례집, 지원정책 매뉴얼, 사업장별 운영매뉴얼 - 푸드플랜 아카데미(시민사회-지자체

	교육·소통 프로그램 3기, 관련 단체 대상 기초 교육 2회) 운영(3월~) - 로컬푸드 로고송 공모전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4월~)
--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자체 수(누적)	16	18

*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건수 조사

3. 성과 및 한계

□ 지역 푸드플랜 구축의 마중물로서 공공기관, 군대, 학교 등의 공공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선도모델 창출·확산

○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선도모델 창출·확산

구분	나주		전주-완주	
	공급기관(개소)	공급액(月, 만원)	공급기관(개소)	공급액(月, 만원)
‘18.8월	4	454	2	996
‘19.10월	14	5,793	9	6,582

○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 수 증가((‘18) 14개 → (‘19.10) 35개(누적))

□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형성을 위해 안전 관리 강화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지역단위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 먹거리 계획 협약 체결 지자체의 패키지 지원 대상 사업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농진청)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포함

4-3-③	건강한 농산물 소비촉진
①	GAP 농산물 소비 촉진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김남진 사무관, T. 044-201-2278)

1. 과제내용

- ☐ 유통·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로 GAP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GAP 인증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도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정보제공) GAP 농산물 출하정보 시스템 개발·운영(8월~) ○ (유통활성) GAP 전용 판매관 설치 지원(연중) 및 기획판매전(연 2회), GAP 급식 주간 운영(연 2회) ○ (홍보) 대중매체, 대중교통 활용한 홍보와 유통·소비자 교육 추진	○ '19년 유통·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등 강화로 인지도 84.2% 달성 * '19년 목표 : 83% - GAP 출하시스템 구축(8월)하여 관리 시설 및 인증농가 121개 품목 400건(326톤) 출하정보 등록(11월 기준) - GAP 전용판매대(23개) 설치, 기획 판매 전(5회 ; 롯데마트3, 이마트1, 농협1), GAP 급식주간(풀무원) 운영 - 방송3사 생활정보방송, 버스광고 (경기 세종 김천, SRT영상송출(17,280회)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소비자 인지도(%)	83.0	84.2

* 코리아리서치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활용

3. 성과 및 한계

- (성과) '19년 유통·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등 강화로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84.2% 달성
 - GAP농산물 거래활성화를 위한 GAP출하정보시스템 구축('19.8.)
 - 농가·시설 출하정보 등록 및 급식·유통업체 정보 활용
 - * ('19.11월) 관리시설 및 인증농가 121개 품목 400건 326톤의 출하정보 등록
 - 인증 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GAP전용관(1개소) 및 GAP 전용판매대(22개소) 설치
 - * 전용관 1개(농협하나로세종점) 전용판매대 22개소 설치(전북 20, 강원1, 전남1)
 - 대형마트 기획판매전 및 GAP 급식주간 운영으로 GAP 인증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 (기획판매전) 롯데마트(3회), 이마트(1회), 농협(1회) / (급식주간) 풀무원 푸드머스
 - 대국민 GAP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영상·음원 등 제작, TV, 라디오, 대중교통, 기획보도 등 활용 홍보
 - * GAP제도 이해를 위한 동영상 제작 2편, 교육용(생산자8분, 소비자17분), 송출용(각 20초)
 - * 공중파(KBS, MBC, SBS) 생활정보 방송(6회), MBC라디오(230회), 버스외부광고(G버스, 세종버스, 김천버스, 74대), SRT 영상송출(17,280회), 기획기사(12회)·지면광고(13회)
- (한계) GAP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인증 농산물 소비를 통한 GAP 생산 확대의 선순환 체계 구축

4. 향후 추진계획

- GAP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생산 농가의 인증 확대 도모
 - * 인지도 조사가 '19년부터 남성과 20대를 포함한 조사로 변경되어 목표율 조정 필요 ; (당초) 30~60대 여성('19. 84.2%) → (변경) 20~60대 남·녀('19. 80.7%)
 - * 변경 목표 : ('19)80% → ('20)82% → ('21)84% → ('22)86%

4-3-3	건강한 농산물 소비촉진
②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담당자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이윤식 사무관, T.044-201-2439)

1. 과제내용

- ☐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
- ☐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및 다양한 판로 확대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선정·지원(2개소, '19.9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2개소) 등을 통해 유통·소비 활성화 ○ 친환경 직거래·온라인·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 확충 및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홍보 확대(연중)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선정(2개소, 9월) 및 지원(누계 5개소)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을 위한 설계추진(2개소) ○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170개 업체, 341개 제품) 및 공영홈쇼핑 방송(2회), '유기농업 날(62day)' 연계 판촉 행사(14일간 2,600매장) 추진 ○ 학생, 소비자 대상 친환경농업 현장체험·교육(160회 4,552명) 등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개소, 누적)	5	5

3. 성과 및 한계

- 광역단위 산지조직의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확대 및 광역도 간에 품목교류 협의회 구축
 - '19년 참여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총 매출액 1,159억원이며, 학교·공공급식 매출액은 472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 * 학교·공공급식 : ('18) 329억원(관내 272, 관외 57) → ('19) 472억원(관내 370, 관외 102)
 - 산지조직 간에 품목교류를 위한 광역산지협의회 구성·운영(4월)
 - * 참여기관 : 12개 기관(농식품부, 광역도 5, 광역단위 사업단 5, 친환경단체)
-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구매도 12.4%, 6.2day 참여매장 매출액 8.0% 증가
 - * 소비자 구매율 향상 : 12.4%('18년 71.6% → '19년 84.0%)
 - * 6.2day 참여매장 매출증가율 : 8.0%('18년 314억원 → '19년 339억원)
- 현장체험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가치소비 확산
 - * (체험·교육) 160회 4,552명(체험 3,662, 교육 890), (홍보) 1,288회(TV 13, 라디오 957, 언론 318)

4. 향후 추진계획

- 광역단위 산지조직 간에 품목교류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유도
 - 중앙정부, 지자체, 광역단위 산지조직 간에 협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과·부족을 해소하고,
 - 지역 내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촉진 유도

5-1-①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①	부처간-지자체간 협업 활성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변성근 사무관 T.043-719-3205
 농축수산물안전과 남궁종환 사무관 T.043-719-3253
 농축수산물안전과 김돈환 사무관 T.043-719-3245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서기관 T.043-719-3241
 농축수산물안전과 손외학 사무관 T.043-719-3242)

1. 과제내용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채널 구축·운영

- 안전성조사 계획 등 수립 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공유·협의

2.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농·축·수산물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2회/년) ○ 관계부처 실무자간 실무협의회 운영(3회) ○ 농·축·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12월)	○ 관계부처 정기협의체 개최(2회) * 농어가 출입 권한, 오염우려 수산물 출하정지 등 법령 개정, 축산물검사체계 개선, 농장 HACCP 인증표시제 등 논의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실시(6회) *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상황, '20년 추진계획 등 논의 * 축산물 안전관리 협의회에 관계부처 및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참석 -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협의 실시(2회) * 유통업체 판매전 농산물 검사를 위한 지자체 지원방안 논의 ○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11월)

추진계획	추진실적
	* '20년도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방안 논의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개최(회)	3	6

3. 성과 및 한계

- ☐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조사, 오염 우려 수산물 출하정지 등 법적근거 마련 추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10월, 상임위 계류중)

-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축·수산물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정보 신속 공유 등 사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관리의 효율성 향상

- ☐ 유통업체 판매 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 유통협회와 업무협약 체결(6.25), 4개 지자체 참여(경기, 대구, 광주, 전남)

4. 향후 추진계획

-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관계부처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2회)

- ☐ 관계부처 등 실무자 간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운영(3회)

○ 농·축산물 안전관리 추진방안(검사체계, 고시 제·개정 등) 논의

○ 생산 및 유통단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결과 분석·평가 및 공유

○ 유통업체 판매 전 농산물 안전관리 참여 지자체 확대 추진

- ☐ 농·축·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1회)

5-1-①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②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정보 공유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이성규 사무관 T.043-719-4056)

1. 과제내용

-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생산단계 등 정보 공유 확대
 - 부처가 보유한 생산단계 정보의 기관 간 공유를 확대하고, 부적합 식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 마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결과 공유 프로그램 구축(12월)	○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결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11월)
	- 생산단계 부적합 정보에 대한 회수·폐기 등 후속조치를 추적관리 할 수 있는 통합 관리기능 개발
○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 스마트 판독서비스 제공(11월)	○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 스마트 판독서비스 제공(11월)
	-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농장명, 사육환경, 등 세부정보 확인 기능 구축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정보제공 확대 서비스 구축	1	1

3. 성과 및 한계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기관별 분산된 식품안전정보의 연계 확대 및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全)주기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식품업체 지하수 검사 결과, 공간·기상정보 등 19종 연계 확대 및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 부처 간 식품안전 연계정보 109% 증가(전년대비) : ('18) 203종→('19) 222종
- 식품안전정보의 연계 확대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체계 강화 필요
 - 現 법부처 '통합망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의무화 및 실무단계 협의절차 선행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기관별 식품안전정보의 연계 지속 확대 및 통합망 운영협의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연중)
-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훈령)' 개정

5-1-①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③	지자체 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1. 과제내용

- ☐ 지자체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 지원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지자체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 지자체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장비 확보 지원 ○ 지자체 축산물 검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 도축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검사관 교육 추진(연중) - 식용란 미생물 검사 항목 확대에 대비한 전문교육 실시(3월)	○ '19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장비 구축비 19억원 지원(국비 40%) ○ 2019년 지자체 검사관 266명 대상 도축검사교육 10회 추진 완료 - 식용란 미생물 검사 항목 확대 관련 전문교육 2회 실시(3월, 8월) * 시·도 식용란 미생물 검사 담당자 47명 교육 수료

-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 없음

3. 성과 및 한계

- 생산단계 원활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시·도 동물 위생시험소)의 장비 예산 지원 및 교육 추진
 - '19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구축을 위한 국비 19억원(국비 40%) 지자체 지원
 - '20년 축산물검사장비 구축을 위한 국비 65억 확보('19년 대비 242.2%)
 - 식용란 미생물 검사 항목 확대 관련 전문교육 2회를 포함하여, 도축검사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12회 실시
- * 시·도 식용란 미생물 검사 담당자 47명 교육 수료

4. 향후 추진계획

- '20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도축검사교육 등 지속 추진
 - '20년 도축검사교육 계획(안) 수립·시행('20.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와 박정규 사무관 T.043-719-1821)

1. 과제내용

- ☐ 시·도 시험검사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 지원
- ☐ 실험실 검사능력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간 업무협력 활성화
 - 시험검사 현안 공유 및 시험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소통 강화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지자체 시험·검사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지원 - 첨단분석장비 도입 지원 - 국고보조 지원 장비 운용현황 조사 ○ 시험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 업무협력 활성화	○ 첨단분석장비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 지원 및 지원장비 운용현황 조사 -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16개 기관 국고보조금 10억 교부 - 보건환경연구원 10개 기관 국고보조 지원장비 운용현황 조사(3~11월) ○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업무협약(5회), 정책 설명회(1회), 지자체 시험검사기관 워크숍(1회)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시도별 국고보조 예산집행율(장비구입예산)	96%	96%

* 시도별 국고보조 실 예산집행액/국고보조금 교부금액 ×100

3. 성과 및 한계

- ☐ 지자체 시험·검사기관 실험실 역량강화 기반 마련
 - 신속·정확한 시험·검사를 통한 식의약 안전관리
 - * 농약 PLS 대응 및 의약품(발사르탄) 등 검사장비 구축
 - 중앙-지자체 소통강화를 통한 시험·검사 협조체계 구축
 - * 시험·검사품질관리 개선방안 및 시험검사 제도개선사항 등 도출
-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자체 시험·검사기관의 첨단분석장비 도입 및 관리, 인력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 발생

4. 향후 추진계획

- ☐ 지자체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역량 강화 지원 및 협력 활성화(지속)
 - 첨단분석장비 도입 예산 확보 및 지자체 시험검사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회의 등 소통 추진

5-1-②	법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①	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박규나 사무관, T. 043-719-2011)

1. 과제내용

- ☐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식품 관련 법령 개편
 - 식품안전 법령이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낡은 규정 정비 및 신종 영업 등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제도화 요구가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령개편 추진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품위생법 개정안 및 식품접객업법(가칭) 제정안 초안 마련(6월) ○ 학계·업계·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7~9월) ○ 부처의견 조회 후 입법예고(11월)	○ 식품접객업법(가칭) 제정안 초안 마련(1월) ○ 공유주방 규제 샌드박스 허용(4월~) ○ 식품접객업 실태조사 및 공유주방 제도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19.10월~'20.2월)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법령 제·개정안 마련	마련	마련

3. 성과 및 한계

☐ 사회변화를 고려한 식품 영업자 규제 완화 추진

- 동일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휴게음식점 등을 함께 하려는 경우 흡인습 형태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4월)
 - * (기존) 벽·층 등으로 분리토록 함 → 선·줄 등 구분·구획으로도 가능
- 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 범위를 '같은 관할구역'에서 '5km 이내 인접구역'까지 확대(4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온라인 주문 판매 등으로 영업장 내 상품을 진열하지 않는 경우 진열·판매시설 의무대상에서 제외(12월)

☐ 공유주방 시범사업 및 제도화 연구사업 추진

-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자 대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 (주요내용) 공유주방 식품 위생관리 매뉴얼 및 점검표 등
-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법제화 방안 모색
 - * '19.12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15개소, 위국 공유주방 1개소 운영 중

4. 향후 추진계획

☐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련('20)

- 공유주방 관련 업종신설 및 관리체계 개편

5-2-①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
①	전문가·소비자 등 참여 확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광병배 사무관 T.044-201-2274)

1. 과제내용

- 농축산물 수급과 안전에 대한 정책 개선방향을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와 소통·협업하여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 소비자단체와 소통협의체* 및 협력사업을 운영하여 농축산물 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역량을 강화

* 12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 농식품부로 구성(유관기관 및 전문가 참석)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농식품 소통협의체 운영 - 12개 소비자단체와 농정 협의 ○ 농식품-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 - 농정제도 홍보, 모니터링 등	○ 농식품 소통협의체 운영(5회) - (1회, 4.2) 원산지 표시방법 등 - (2회, 6.4) PLS 정책추진방향 등 - (3회, 7.2) 계란 유통개선 방향 등 - (4회, 9.3) 로컬푸드 3개년계획 등 - (5회, 4.2) GAP, 공익형직불 계획 등 ○ 농식품-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 - 공모·서면·발표평가 사업선정(2월) * 12개 소비자단체, 15개사업 6억원 - 인증제도 등 농정홍보 및 모니터링 - 사업결과 전문가 성과평가회(12.16)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소비자 농정 인식도(점)	74	74.8

- * 농식품 소비정책 성과평가 조사(매년 11월, 20~60대 성인 남녀 1천명) 결과
- * GAP, 원산지, 로컬푸드 등 농정제도 인지도, 이해도, 행동유형 등 조사

3. 성과 및 한계

□ 12개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소통협의체 운영(연 5회)

- 소비자단체 관심 농정 이슈에 대한 소비자단체와의 협의 추진
 - (1회, 4.2) '19년 소통협의체 운영개선,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개선방법 등
 - (2회, 6.4) PLS 정책방향, 도매시장 PLS 간이분석실 시연 및 양파 수급대책 등
 - (3회, 7.2) 계란 유통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양파·마늘 소비촉진 캠페인 등
 - (4회, 9.3) 로컬푸드 3개년('20~'22) 계획, 농식품바우처 제도도입 설명 등
 - (5회, 4.2) GAP 소비확대, 공익형 직불제 개편방안, 협력사업 평가회 등

□ 농식품-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15개사업, 6억원)

- 원산지, GAP, 친환경 등 인증제도 홍보·교육과 현장모니터링, 실태 및 인지도 조사 등 소비자단체(12개 단체) 협력사업 추진
 - 농림부 내 필요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사업 발굴('19.1월)
 - 사업 공고를 통해 소비자단체별 매칭과제 전문가 평가(2월)
 - 사업 추진 및 사업종료 후 전문가 성과평가(발표평가) 실시(12.16)

4.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협력사업은 홍보 보다는 인증제도 교육, 동향조사 및 농업 현장 모니터링 과제 등 정책협력과제를 확대하여 추진

- 사업계획은 평가·조정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단체협력 증진

5-2-①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
②	국민청원 창구 등 운영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심영훈 연구관 T.043-719-1051
소통협력과 이제명 사무관 T.043-719-2553)

1. 과제내용

- ☐ ‘국민청원’ 창구 운영을 통해 국민이 다수가 청원한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 ☐ 식의약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단’ 및 ‘열린포럼’ 운영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운영(연중) - 청원안전검사제 심의위원회 개최(분기별) - 수거·검사 및 결과 발표(분기별) ○ ‘국민소통단’ 및 협의체 구성·운영(3월) ○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운영(2월~)	○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운영(연중) - 청원안전검사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 선정(4회) - 노니제품 등 수거·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643건, 누계) - 검사대상 채택기준 명확화 등 운영지침 개정(1월)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국민청원시스템’ 개선(10월) ○ 국민소통단 구성(3월, 1천명) 및 소비자 니즈 발굴(56건)·조치 ○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10회, 제언 29건 발굴)

-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없음

3. 성과 및 한계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으로 위해우려 제품의 선제적 관리

-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사대상 선정* 및 수거·검사 결과**의 공개로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검사대상 : 노니(분말, 환), 화장품 에센스, 단백질 보충제, 인공눈물 등

** 검사결과 : 노니제품(검사 88건/부적합 22건), 화장품 에센스(45건/0건), 단백질 보충제(195건/ 1건) ⇒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통관금지 등 조치

□ 국민소통단, 열린포럼 등을 통한 대국민 상시 소통채널 운영

- (국민소통단) 소통단을 구성·운영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지속 발굴·조치하여 식의약 분야 불안감 해소

* 국민소통단 소비자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비율 : 96.4%(조치건수: 54건)

- (열린포럼) 온·오프라인 참여자 증가 등으로 의견수렴 폭 확대 및 국민 소통 효과 향상

* 열린포럼 참여자수 : ('18) 2,474명 → ('19) 15,655명

4. 향후 추진계획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연중)

- 보도자료, 온라인(유튜브 등), 지역축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생활 속 식의약 안전 이슈에 대한 양방향 소통 강화(연중)

- 국민소통단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니즈 발굴, 홈페이지 활성화

* 국민소통단 홈페이지('와글와글') 구축·운영

- 열린포럼 및 컨슈머토크콘서트('소비자포럼' 명칭 변경) 개최

5-2-②	국제 교류 · 협력 강화
①	국제식품 기준·규격 설정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홍기옥 서기관, T044-201-2080
식품산업정책과 정찬민 사무관 T.044-201-2121)

1. 과제내용

- ☐ 우리 농식품 수출 활성화,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 및 농축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제규격 제개정에 적극 대응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총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주요 수출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에 우리나라 기준(입장)을 반영 노력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식물보호협약(IPPC) 및 검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동축산물 및 식물 위생·검역 기준 제개정 대응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CODEX 총회·분과위별 국제동향 파악 및 논의의제 검토 대응	○ 농식품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대응 계획 수립완료(1월) - CODEX 총회·분과위별* 국제동향 파악 및 논의의제 검토 대응 완료(연중)
○ IPPC(세계식물보호협약),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등 동식물 검역기준 제개정 대응	○ IPPC(세계식물보호협약)총회(4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총회(5월)등 동식물 검역기준 제개정 대응완료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국제기준 제개정 대응(건)	5	6

3. 성과 및 한계

- 우리나라의 표준규격 등을 반영한 의견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분과위*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음

* 향신료·요리용 허브 분과(1월), 식품 첨가물분과(3월), 농약잔류 및 오염 물질 분과(4월), 신선과일·채소, 식품표시, 분석방법·시료채취(5월), 총회(7월), 아시아지역조정위(9월), 식품위생 및 영양·특수용도식품 분과(11월), 항생제 내성 분과(12월) 등

- 그러나 분과위원회는 의제별 주된 논의내용을 결정하는 자리로, 우리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제별 문서 회람 시 사전 의견제출 및 전자작업반(EWG) 참여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여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의제별로 지역 회원국들(중동 및 남미지역 등)이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지역 회원국 및 의제별 이해관계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4.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요구사항 및 작업문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준(입장) 반영 추진

- 제42차 총회('19)에서 'Codex 전략계획 2020-2025'가 최종 채택됨에 따라 전략계획 내 목표를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피드백 및 설문응답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 필요

- 차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아시아지역조정관인 중국과의 협력 강화

- 중국이 새로운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지역조정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코덱스 및 식품안전 관련 작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력 강화방안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김천수 연구관 T.043-719-2020
 식품기준과 최윤주 연구관 T.043-719-2415
 농축수산물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T.043-719-3220)

1. 과제내용

-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총회 등 20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에 대한 국제동향 사전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국가 간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당국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CODEX 총회 및 분과회의 참석 (연중)	○ CODEX 총회 및 분과회의 참석 * (식품첨가물) 캔디류 식용색소(적색제2호)의 국내기준을 코덱스 기준에 반영 * (잔류농약) 국제 식품 분류(식용유지류)에 우리나라 들기름 등재 * (식품표시) 알레르기 표시 원재료 목록 갱신으로 국내기준과 국제표준의 조화 * (건강기능식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절차를 코덱스 기준화 논의
○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회의 개최(12월)	○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회의 개최(12월, 211명 참석) * 항생제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침 마련 논의
○ 국가 간 협력체계 마련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연중)	○ 국가 간 협력체계 마련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연중)

추진계획	추진실적
	-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6월), 식품안전협력위원회 개최(8월) - 인니 MUI 할랄인증법 시행 관련 전문가 설명회 개최(11월) - 중국 식품위생 공무원 대상 식품 안전 교육 실시(11월) - 대만 식약청 국내 김치제조업체 현지실사 현장 지원(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회)	5	5

* 국가 간 식품협력 관련 회의 2건 및 제외국 식품위생관련 교육훈련 3건

3. 성과 및 한계

- ☐ CODEX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기준에 적합한 의견이 반영·채택되도록 적극적 의견 개진
- ☐ 식품분야 항생제내성 관리와 관련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기준 설정에 선도적 역할 담당
- ☐ 주요국간 식품 기준의 국제조화 추진을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

4. 향후 추진계획

- ☐ '20년 CODEX 총회·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적극 대응, 당사국간 양자협의 등 국가 간 협력체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지속)

5-2-②	국제 교류·협력 강화
②	국제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 T.043-719-4504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T.043-719-3220
 현지실사과 문성심 사무관 T.043-719-6208)

1. 과제내용

- ☐ 식품 위해평가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 확대
- ☐ 아시아개도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소개 및 참가국 식품 정책정보 교류
- ☐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맞춤형 위생점검 및 외국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 등 적극 지원으로 국내 축산식품의 원활한 수출 도모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품 위해평가 국제협력 강화(연중)	○ 식품 위해평가 국제협력 강화(연중) - 한 독 프 덴 공동 국제 심포지엄(3월), 식품안전의 날 기념 국제 심포지엄(5월) - ‘식품화학물질 위해평가 국제협의회’ 에서 통합위해성평가 방법 논의(10월) - 중국·일본·태국 위해평가기관 등 협력분야 논의(2, 10, 11월)
○ 한-아세안 위생협력 사업(5월)	○ 한-아세안 위생협력 사업(5~6월, 11개국 30명) * 농축수산물 분야별 세미나 및 현장방문 등
○ 수출상대국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 수출작업장 사후관리 계획수립(2월), 및 위생점검 실시(58개소)

추진계획	추진실적
관리 지원(연중) ○ 수출상대국 현지실사 및 작업장 점검 대응지원(연중)	* 유제품(30) 삼계탕(9), 쇠고기(16), 식용란(3) ○ 미국 수출 삼계탕(5월), 싱가포르 수출 삼계탕·식용란·돈육가공품 현지실사 대응(8~9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해평가 분야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	1	5
○ 한-아세안 위생협력사업 자체평가 결과(등급)	A	A

3. 성과 및 한계

- ☐ 위해평가 분야 신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기반 강화
 - 유럽 각국 위해평가 전문기관과의 협력에 이어 식품안전을 위한 유럽연합과의 포괄적인 협력체계 구축
- ☐ 아시아 개발도상국 대상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세미나(5월) 등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안전관리 우수성 홍보 및 수출 확대에 기여
- ☐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과 수출국 간의 동등성 확보를 통해 수출 품목 및 국가 확대 등 수출 활성화 지원
 - 축산물 수출작업장 위생점검(58개소), 미국 수출 삼계탕 등 상대국 현지실사 대응(2개국) 및 '축산물 수출 지원 협의회' 개최(4회)
 - * 대 캐나다 삼계탕 수출 허용(12월)

4. 향후 추진계획

- ☐ 위해평가 기술 및 정보교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등 국제협력 강화(연중)
- ☐ 수출작업장 위생점검 및 상대국 현지실사 대응 등 축산물 수출 지원(연중)

5-3-①	감시·감독 역량 강화
①	수사역량 강화

(담당자 :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치훈 검사, T.02-2110-3271)

1. 과제내용

☐ 위해식품 집중 단속을 통한 부정식품 근절

-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해식품사범 단속에 대한 수사력 집중
- 법무연수원 전문교육 및 각급 검찰청별 수사실무 교육 확대
- 범행동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환수 철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대응 강화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 실시 - ‘19. 1.~12. 검찰 직접단속 29명(구속 4명)
○ 유관기관 협업 강화	○ 범죄 유인 차단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강화 - ‘19. 1.~12. 범죄수익환수(123,679,998원)
	○ 검찰청별로 특사경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특사경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 실효성 있는 합동 단속 실시 - ‘19. 1.~12. 협의체 회의 및 교육 등 33회 개최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지속	○ 법무연수원, 각급 검찰청 등을 통한 특사경 교육 지속 실시 - '19. 1.~12. 법무연수원 특사경 수사실무 집합교육(38회, 1,458명) 및 사이버교육(5회, 5,467명), 검찰 청별 관내 특사경 교육(17회, 339명)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불량식품 관련 회의 개최 실적	16회	33회
○ 수사전문화 교육 실적	30회	60회

3. 성과 및 한계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서울서부지검)」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 실시

※ 전체 부정식품 단속인원 13,962명(구속 30명), 검찰 직접단속 29명(구속 4명)

4. 향후 추진계획

-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속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 중심으로 부정식품사범 지속 단속('20. 연중)
 - 범죄수익 환수 조치, 불량식품·원재료 몰수·폐기, 인허가 취소 행정 처분 및 국세청 탈세 통보 등 적극 실시('20. 연중)
-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회의 개최를 통한 협업체제 강화('20. 연중)
-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지속('20. 연중)
 - 법무연수원, 검찰청 특사경 대상 직무교육 확대 및 지속 실시

5-3-①	감시·감독 역량 강화
②	감시기법의 과학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 김형수 연구관 T.043-719-4452
 침단분석팀 신동우 연구관 T.043-719-5302)

1. 과제내용

- ☐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및 위해성분 검사법 등 과학적 감시 기술 개발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11월)	○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 북쪽분홍새우, 큰민어 등 종(種) 특이 유전자 판별법 10건 개발(11월) - 홍어류 등 수산물 유전자 바코드 50종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11월)
○ 위·변조식품 신속검사법, 주요 식품의 위·변조 판별법 개발(11월)	○ 위·변조식품 신속검사법, 주요 식품의 위·변조 판별법 개발 - 대게/홍게 등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신속 검사법 8건 개발(11월) - 냉동 수산물 중 아교 분석법, 불량 고춧가루의 판별법 개발(11월)
○ 항우울(항불안) 기능 표방식품 중 의약품 성분 분석법 개발(11월)	○ 항우울·항불안제 등 의약품 성분 22종 동시분석법 개발
○ 중독증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식용 금지원료 혼입·판별법 개발(11월)	○ 식품 중 청목향·당살초 2종에 대한 이화학·유전자 분석법 개발(11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변조식품 판별법* 개발 건수	68	75

* 유전자 바코드 정보 및 진위, 혼입 판별법

3. 성과 및 한계

- ☐ 식품 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종(種) 특이 PCR법*, 유사 수산물 판별 유전자 바코드 마커** 개발

* 북쪽분홍새우, 가시발새우, 큰민어 등 10건

** 홍어류, 가오리류, 송어류 등 유사수산물 50종

- ☐ 현장에서 위·변조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한 신속검사법* (키트), 주요 식품의 위·변조 판별법** 개발

* 대게/홍게, 참조기/부세 등 현장 적용 신속 검사법 8건

** 냉동 수산물 중 아교 판별 분석법 및 불량 고춧가루 판별법

- ☐ 항우울제·항불안제 성분 22종 동시분석법, 청목향·당살초 등 식용금지 원료 2종 혼입 여부 판별법 개발

4. 향후 추진계획

- ☐ 부정·불량식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위변조식품 판별 시험법 및 의약품성분 등 위해성분 분석법 등 개발 지속

5-3-②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①	전통시장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이영희 사무관 T.043-719-3259)

1. 과제내용

- ☐ 전통시장 등 불법도축 및 식용란 취급업체 집중 점검
 - 위생관리가 취약한 전통시장 등으로 판매되는 닭고기, 식용란 등에 대한 점검 강화로 안전성 확보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전통시장 내 산닭 등 가금류 불법 도축 합동점검(1월, 9월)	○ 명절 성수기(1, 8월), 하절기 위생 취약 시기(6월) 불법도축·판매행위 합동단속(5,551개소)
○ 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점검(4월)	○ 깨진 계란 등 보관·유통행위 등 집중 점검(3~4월, 1,049개소)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전통시장 등 합동점검 횟수(회)	2	2

3. 성과 및 한계

- ☐ 위생 취약지대 중점 단속을 통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

4. 향후 추진계획

- ☐ 전통시장 등 축산물위생 취약지대에 대한 안전관리 지속 추진

5-3-②	위생 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②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변상훈 사무관 T.043-719-1902)

1. 과제내용

☐ 민-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 불법정보 신속 차단 등 관리체계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공조하여 온라인 불법유통 식품 집중점검(연중) ○ SNS, 온라인 쇼핑몰 등과의 협력 체계 확대 구축(상시)	○ 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 SNS 활용 허위 광고업체 기획점검(4회) * SNS 광고 식품, 근육강화제 등 ○ 구글 등 SNS 운영사와 핫라인 구축 및 온라인 안전관리 업무 협약 확대(4곳) * (포털사) 다나와, (쇼핑몰) 한국인삼공사·롯데하이마트, (직구몰) 유닛808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민·관기관 합동조사(회)	4	4

3. 성과 및 한계

☐ SNS 거짓 체험기, 의학적 효능 표방 허위광고 등 중점 단속으로 온라인 판매업체 경각심 고취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구글 등 해외 SNS 업체*, 온라인 쇼핑몰 등과 업무협력 확대**를 통해 불법 사이트 차단기간 단축('18년 27일 → '19년 24일)

* 트위터, 구글 등에 직접 차단조치 : 1,910개 계정 및 40만 여개 게시물

* 한국인삼공사, 롯데하이마트, 다나와, 유닛808 등 4곳 업무협약 체결('19)

□ 정보의 확산이 빠른 온라인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허위정보 등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이 필수적이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보안사이트 (https)는 차단이 불가하여 불법정보의 차단에 어려움 발생

* 방심위 차단 소요일수 : ('18) 66일 → ('19.11) 58일

4. 향후 추진계획

□ 방심위,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력을 통한 위법 사이트 신속 차단

○ (방심위) 위반사항을 정형화하고, 법령해석 등 지원을 강화하여 심의 전 검토 일수 최소화

○ (쇼핑몰 등) 해외 SNS 사업자, 쇼핑몰 등과 협력하여 유해·불법 제품 판매사이트 차단 강화 및 관리대상 품목 확대

5-3-②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③	취약계층 보호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상록 사무관, T.043-719-2257
식품안전관리과 오세동 사무관, T.043-719-1962)

1. 과제내용

- ☐ 학교주변 위생취약 조리·판매업소의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및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일명 '뺏다방') 단속 강화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학교 및 학원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연중)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16천개소 점검 및 '위생마스크, 앞치마 착용 캠페인' 실시(연중) * 영업자 위생관리수칙 홍보물, 리플릿, 포스터 등 55천개 제작·배포
○ 학교 주변 위생취약업소 '이력 점검제' 실시(월 1회)	○ 학부모 등 전담관리원 2,960명 배치, 위생취약업소 316천개소 점검, 전담관리원 교육(10월)
○ 학교주변 안전관리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연중)	○ 식품안전의 날 홍보관 운영(5월), KTX(1~2월)·지하철(9월)·정부청사(12월) 동영상 송출, 카드뉴스(4월) 등 홍보
○ 이동식 뺏다방, 홍보관 등 단속 및 피해예방 교육·홍보(연중)	○ 홍보관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단속(9~11월, 2,762개소), 피해 예방 교육·홍보(9~11월, 652개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회)	10	10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횟수

3. 성과 및 한계

- ☐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자 법령 위반율 감소 등 위생지표 개선

*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반율(%) : ('17) 0.03 → ('18) 0.02 → ('19) 0.01

4. 향후 추진계획

- ☐ 학교주변 부적합 이력 위생취약업소 집중 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성과 대국민 홍보 강화(연중)
- ☐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뽕다방) 단속 및 피해예방 교육·홍보(연중)

5-3-②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④	수입식품 관리 강화

(담당자 : 관세청 기획심사팀 김승현 사무관, 042-481-7742)

1. 과제내용

☐ 위생관리 취약품목 점검 강화

- 명절·김장철 등과 같이 원산지 위조·변조가 급증하는 시기별로 집중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 기획 단속 실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시기별로 집중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 특별 단속 실시	○ 특정시기 성수품목에 대한 표시 위반 특별단속 - 설명절 특별단속('19.2월) - 가정의 달, 휴가철 특별단속('19.5~8월) - 의류 라벨같이 특별단속('19.8~10월) - 김장철 특별단속('19.11~12월)
○ 수입업체 등에 대한 표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이원화 - 업체 대상 사전안내 도입·운영(연중) - 위반업체 신고 유도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 없음

3. 성과 및 한계

□ 시기별로 집중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 특별 단속 실시

○ 특정시기 수요품목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설명절) 참깨, 냉동홍어 등 수산물 5개 업체(4억원) 적발
- (가정의 달, 휴가철) 선물용품, 공기청정기 등 8개 업체(398억원) 적발
- (의류 라벨갈이) 외국산 의류 국산둔갑판매 단속 29개(58억원) 적발
- (김장철) 염장새우젓 4개 업체(3억원) 적발

□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표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 사전안내 제도를 도입하여 1,063개 업체 대상 홍보

4. 향후 추진계획

□ 기존 검사방식 개선 및 중대위반(허위·손상변경)중심 표시단속

○ 생계형 위반업체에 대한 단발성 단속보다 기업형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기업검사방식 도입, 중대 위반단속에 역량집중

5-3-③	농축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①	축산농가 살충제 불법사용 처분기준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동욱 사무관, T.044-201-2326)

1. 과제내용

- ☐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
 - 현행은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취소 가능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축산업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20)	○ 축산법 개정 완료('19.8.27) ○ 축산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축산법」 개정	‘19년 개정완료	‘19년 개정완료
○ 「축산법」 시행령 개정	‘20년 개정완료	추진 중

3. 성과 및 한계

- 농약을 가축에 사용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한 축산업 영업정지·허가 취소 규정 신설로 살충제 사용 등 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 축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20.2.28)
 -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위반횟수별 영업정지·허가취소 기준 마련
 - * 영업정지·허가취소 기준(안):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3개월, (3회) 허가취소

5-3-③	농축수산물 생산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②	양식수산물 유해물질 불법사용 처분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044-200-5622)

1. 과제내용

- ☐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체에 대한 출하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

2. 추진실적

-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추진(12월)	○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완료(12.26)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칙 개정	개정	개정 완료

3. 성과 및 한계

- ☐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